

September 2024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Together We Can Do So Much

2020년부터 시작된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도전과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 변화를 기록해왔습니다. 사회문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본질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시선을 통해 사회문제를 조명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해 다양한 주체들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회문제의 중심에는 ‘불균형(Imbalance)’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균형이 심화되며 소득 양극화, 세대 간 갈등, 주거 불안정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회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거나, 해결 의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는 등 사회 문제의 관심과 해결 의지 간의 불균형이 확인됩니다. 이는 균형잡힌 노력(Balanced Effort)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2024년의 사회문제는 국민의 심리적 회복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으로 정리됩니다. 전년 대비 개인의 행복감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국가 및 가계 경제에 대한 불안과 양극화는 여전합니다. 더 큰 사회적 균형과 안정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Special Issue는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입니다.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과 열악한 사회 및 양육 환경이, 고령화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는 국가 재정 부담, 경제 성장 저하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한국은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자와 직장 동료, 직장 상사로 함께 일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각각 31.3%, 51.6%로 나타난 응답결과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준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Balance)과 회복력(Resilience)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Alone we can do so little; together we can do so much.”**라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균형을 이루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국민의 생각과 경험을 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균형 잡힌 분석을 이어갈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표이사 나석권

포용과 신뢰가 회복된 살기 좋은 사회로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가 올해로 5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하는 사회문제를 진단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할 때, 공익법인·사회적기업·소셜벤처 등이 더욱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때, 보다 정량적인 데이터로 증거 기반(evidence-based)의 의사결정을 돕고 싶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던 시점, 이슈&임팩트 전략·측정 전문 기업 ‘트리플라잇’이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함께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 5,000명은 한국을 ‘살기 힘든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양극화와 불균형, 인식 격차와 갈등, 불안과 불신으로 몸살을 앓았던 한국 사회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정 경제와 국가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비대면 거리두기의 여파는 이웃-공동체-사회적 관계에 거리를 두는 개인화된 사회로 이어졌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국민의 의지도 급격히 하락했고, 현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이슈가 10년 후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부정적 인식도 커졌습니다. 2024년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부정적인 이슈로도 투명하지 않은 정부 신뢰 하락, 소득 양극화, 일·생활 불균형, 폭염 및 한파 증가가 꼽혔습니다. 균형이 깨어지고 정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상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생태 전반의 회복력(Socio-Ecological Resilience)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출생, 고령화, 이주민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묻는 스펙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 모습은 ‘저출생 대물림’과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났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국민들이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았습니다. 외국인 이주민이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은 좋지만, 직장 상사로는 불편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세대와 국적을 초월하는 ‘포용’과 ‘존중’,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일 것입니다. 내년 연구에서는 한국이 ‘살기 좋은 사회’로 회복되고 거듭나는 데이터들이 더 많이 담겨지길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CHAPTER 1

Overview

연구 개요

8	Purpose & Approach 배경 및 목적
9	Key Highlights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핵심 요약 • Issues & Impact Awareness 국민의 사회문제 인식 현황 • Impact Trend of 5 Years 2020-2024 국민의 사회문제 인식 변화 • Sustainability Issues 국민이 바라는 지속가능경영 •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
24	Process 연구 방법

CHAPTER 2

Impact Issues
Analysis

2024 사회문제 분석

32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 Social Awareness 사회인식 조사 • Impact of Issues: Present & Future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 Impact Awareness Gap 사회문제 인식 격차
48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 Korean Social Problem & Difficulty Level 문제 해결 난이도: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 Issue Tracking 테마별 한국의 주요 이슈
54	Collective Impact 협력을 통한 사회 변화 • Collaboration for Social Issue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 • Impact Action Analysis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행동 • Channel & Information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과 인식도

CHAPTER 3

**Sustainability
Issues Analysis**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70	Public Awareness of Sustainability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73	Sustainability Gap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국민의 시선

CHAPTER 4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

78	Public Perception of Low Birth Rates 저출생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88	Preparing for a Super-Aged Society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의 과제
91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사회, 함께 살아가려면

CHAPTER 5

Beyond 2024

우리가 만드는 미래

96	Conclusion 사회문제 해결 방향성 및 종합 제언
----	-----------------------------------

CHAPTER 1

Overview

연구 개요



Purpose & Approach

배경 및 목적

트렌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갈등을 신뢰로 회복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위기를 해결하는 모두의 선택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회복력 요구

양극화와 불균형, 불신과 불안, 인식 격차와 갈등이 쌓여온 한국 사회를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키우고, 복합적인 위기에 한 발 앞서 대비하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

ESG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는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중의 시선과 요구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ESG 관리'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인 접근과 내재화가 필요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속 위기와 기회 요인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다양한 문화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포용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지지체계 회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연구 목적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지난 5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주목해야 하는 어젠다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바라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과 불확실성 시대 속 위기 와 기회 요인을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해소되어 긍정적 변화를 함께 열어가는 방안을 찾아갑니다.

핵심 연구 키워드



현재와 미래의 연결

현재는 미래를 구성하며,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상호구성성(Inter-Construction)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미래 위기와 기회 고려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에 야기될 리스크를 파악 및 대비하고, 기회요인과 지속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사회·환경·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반영해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만드는 임팩트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국민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간 격차(Gap)를 메워갈 때, 모두를 위한 긍정적 임팩트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Key Highlights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핵심 요약

Issues & Impact Awareness 국민의 사회문제 인식 현황

2024년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현재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10년 후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하는 심각한 이슈를 진단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 : 현재와 미래



Note '임팩트(부정적 영향력)'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슈 데이터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한국이 주목하는 100개 사회이슈' 중에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10년 후(미래)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 거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Y축은 '현재' 임팩트 점수를, X축 '문제 해결 난이도'는 100개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이다.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난도가 높아진다.

No	테마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난이도
1	사회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100	-	96	▲3	26
2	경제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99	-	100	▲4	66
3	사회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98	-	86	-	90
4	환경	폭염·한파 증가	97	▲7	94	▼5	24
5	사회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96	-	95	-	2
6	경제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95	▼2	98	▲11	3
7	사회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94	▲1	90	▼2	71
8	경제	가계부채 증가	93	▼1	88	▲16	74
9	사회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92	▲5	80	▼2	50
10	환경	지구 온난화	91	▲11	97	▼1	15
11	사회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90	▲5	79	▼6	12
12	사회	저출생 문제	89	▲1	89	-	92
13	경제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88	▲4	82	▲7	52
14	경제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87	-	99	-	1
15	사회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86	▲3	87	▼3	19
16	사회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5	▲3	74	▼10	83
17	경제	청년 일자리 부족	84	▼8	81	▲27	63
18	경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83	▼12	65	▲3	81
19	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82	▼4	91	▼6	92
20	경제	어려운 재취업	81	▲5	84	▲13	84
21	사회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80	▲2	92	▼2	53
22	사회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79	▲2	93	▲2	87
23	사회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78	▼13	72	▲10	19
24	사회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77	▲7	66	▼1	92
25	사회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76	▼5	76	▼3	65
26	사회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75	▲9	47	▲5	31
27	환경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74	▼5	77	-	14
28	사회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73	▲8	59	▲5	33
29	환경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72	-	63	▼1	24
30	사회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71	▲4	73	▼7	36

기후·인구 위기와 사회적 갈등 확산

2024년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100점)', '소득 양극화 심화(99점)', '일·생활 불균형(9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해당 이슈들이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전망했으며, 이러한 염려는 지난해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집값과 고용 문제에 대한 우려는 다소 줄었지만,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은 늘었습니다.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95점, ▼2점)', '가계부채 증가(93점, ▼1점)', '청년 일자리 부족(84점, ▼8점)' 이슈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폭염·한파 증가(97점, ▲7점)', '지구 온난화(91점, ▲11점)'에 대한 우려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진행된 조사 이래 처음으로 환경 관련 이슈가 10위권 내에 2개 이상 포함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체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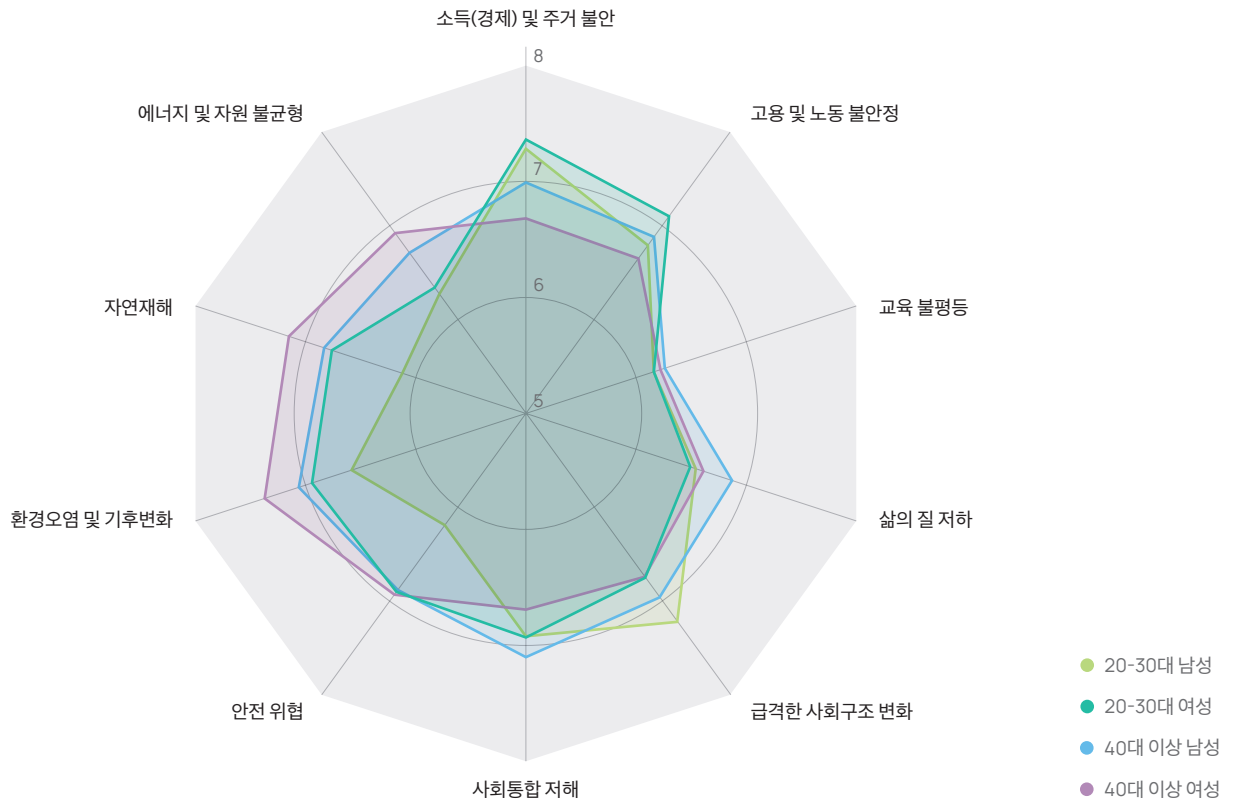
사회적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92점, ▲5점)',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90점, ▲5점)', '세대/연령 간 갈등 및 격차 심화(80점, ▲2점)',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75점, ▲9점)'와 같은 이슈들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포용적인 사회로의 변화가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저출생 문제(89점, ▲1점)',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86점, ▲3점)',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79점, ▲2점)',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73점, ▲8점)' 등 인구구조와 연결된 이슈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슈들

국민들은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의 경제 분야에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 임팩트 점수 100점을 달성한 '소득 양극화 심화(100점, ▲4점)'를 포함해,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98점, ▲11점)', '가계부채 증가(88점, ▲16점)',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82점, ▲7점)' 등, 30위권 내 모든 경제 영역 이슈들의 미래 임팩트 점수가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81점, ▲27점)' 문제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향후 미래 일자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염려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 및 환경 영역의 미래 임팩트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0년 후 미래의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74점, ▼10점)'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이라 본 반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72점, ▲10점)' 문제에 대한 우려는 증가했습니다. 저출생 위기 속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염려가 커지고 있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인식 격차가 두드러진 4개 그룹(20-30대 남성, 20-30대 여성, 40대 이상 남성, 40대 이상 여성)의 응답을 분석했습니다.

인식 차이는 주로 환경 영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환경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문제의 경우 40대 이상 여성이 평가한 부정적 영향력은 7.15점으로, 가장 낮은 20-30대 남성의 평가(6.12점)보다 1점 가량 높았습니다. 반면, ‘교육 및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작년보다 줄었으며, 4개 그룹 중에서 가장 낮은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표준편차 약 0.0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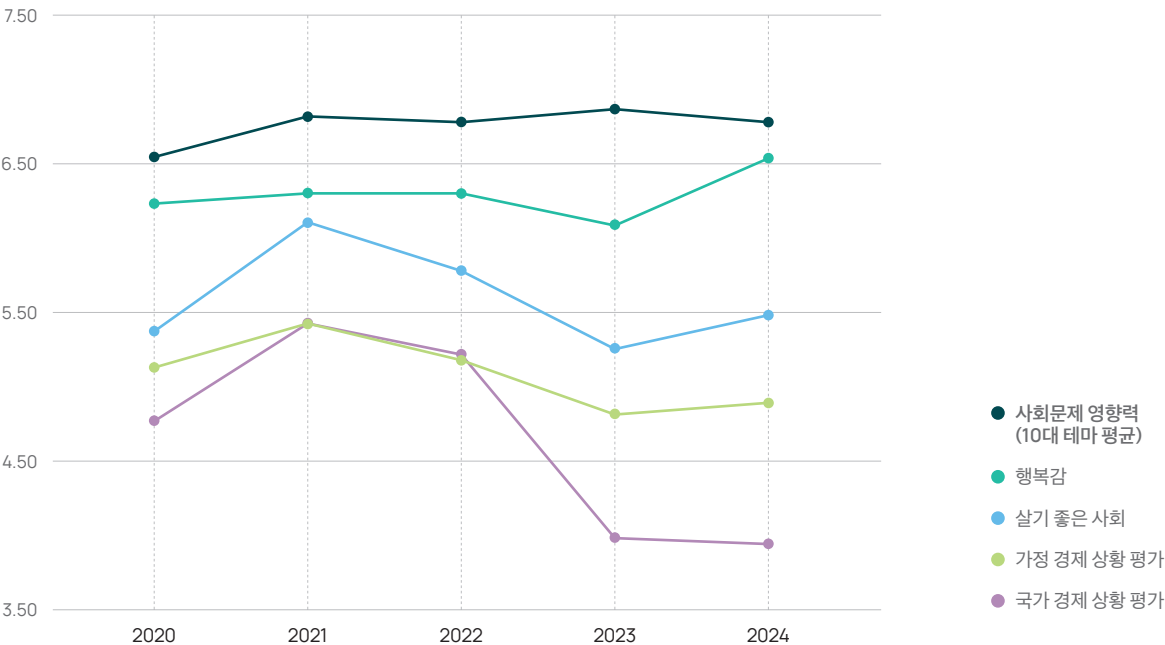
20-30대 여성들이 경제 영역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7.36점)’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은 작년(7.25점)보다 증가하여, 4개 그룹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 남성들도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7.28점)’ 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한편, 40대 이상 남성들은 ‘사회통합 저해(7.10점)’ 문제를, 40대 이상 여성들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7.37점)’ 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격차에 주목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Impact Trend of 5 Years 2020-2024 : 국민의 사회문제 인식 변화

지난 5년간 한국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또,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0년부터 진행된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인식조사의 5년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5개년 2020-2024 국민들의 사회인식 변화

단위: 점(각 항목에 대한 평가, 10점 만점)



국민의 삶에 파고든 사회문제 임팩트

지난 5년간 국민들은 경제, 사회, 환경 전반의 사회문제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2020년부터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고용 및 노동 불안정, 교육 불평등, 삶의 질 저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사회통합 저해, 안전 위협,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등 10대 사회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11점 척도(영향이 없다 0점~매우 영향이 크다 10점)로 질문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사회문제의 부정적 임팩트는 지난 5년간 행복감, 국가 및 가정 경제 상황, 살기 좋은 사회 모습에 대한 평가보다 점수가 높게 유지됐습니다. 사회문제가 국민의 삶과 인식 전반에 깊숙히 파고든 만큼, 국민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주체간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행복감은 2023년 일시적인 하락 이후, 올해 급격히 회복되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인식은 올해 소폭 상승했지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던 2021년 이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가 경제 상황과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의 급격한 하락(2020년 4.77점 → 2024년 3.94점)이 두드러집니다. 가계 및 재정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이슈 변화

국민들은 어떤 사회문제로 삶의 어려움을 느껴왔을까요. 지난 5년간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Top 10 사회 사회이슈를 분석한 결과,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1-2위권)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2022년에는 '집값 불안정 및 주거 부담 증가' 이슈가, 2023~2024년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021년(4위) 처음으로 10위권에 포함된 '투명하지 못한 정부' 이슈는 작년과 올해 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경기와 정치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경 영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폐기물에서 기후 위기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2020년과 2021년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과 '미세먼지 증가'이슈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면, 2022년과 올해 조사에서는 '폭염·한파 증가'이슈가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지구 온난화'가 10위로 조사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문제가 2021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10위권에 오른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피싱, 해킹 등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5개년 2020~2024 Top 10 이슈 변화

	2020	2021	2022	2023	2024
1위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2위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3위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4위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폭염·한파 증가
5위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	미세먼지 증가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6위	노후 주거지 및 주거 생활권 불안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7위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폭염·한파 증가	폭염·한파 증가	가계부채 증가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8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가계부채 증가
9위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청년 일자리 부족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청년 일자리 부족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10위	청년 일자리 부족	노후 주거지 및 주거 생활권 불안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지구 온난화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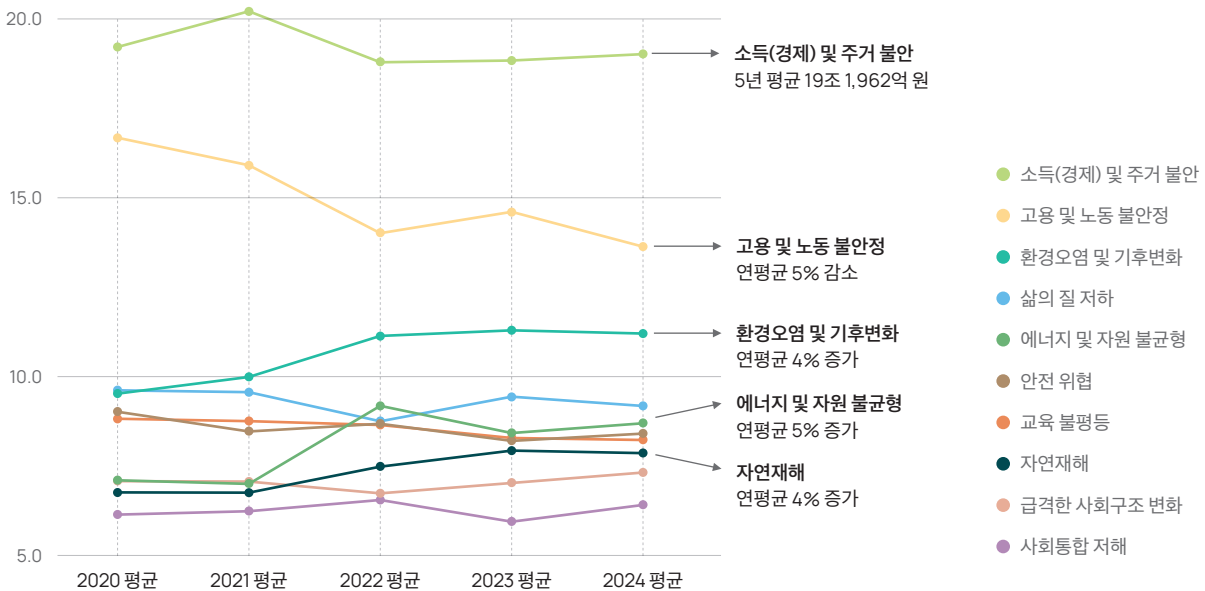
국민이 분배한 사회문제 예산 100조원 변화

지난 5년간 국민들은 어떤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했을까요. 국민에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100조원의 예산을 가정하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큼 편성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5년 연속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5년 평균 약 19.2조 원, 19.2%)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됐으며, 고용 및 노동 불안정(15%), 환경 오염 및 기후변화(10.6%)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년 전(2020년)에 비해 국민이 편성한 예산이 가장 늘어난 문제는 모두 환경 영역으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1조 7,125억원, 연평균 4% 증가),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1조 6,170억원, 연평균 5% 증가), 자연재해(▲1조 1,295억원, 연평균 4% 증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반면 예산 편성이 가장 많이 줄어든 문제는 고용 및 노동 불안정(13조 6,120억원)으로, 2020년(16조 6,910억원)과 비교해 3조 790억원 감소(연평균 5% 감소)했습니다.

5개년 2020-2024 국민에게 100조원이 있다면



사회문제 관심도와 해결 의지 간 격차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깊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들의 사회문제 관심도는 7점 내외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62.7%였던 국민의 사회문제 해결 의지는 2021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2024년 57.7%까지 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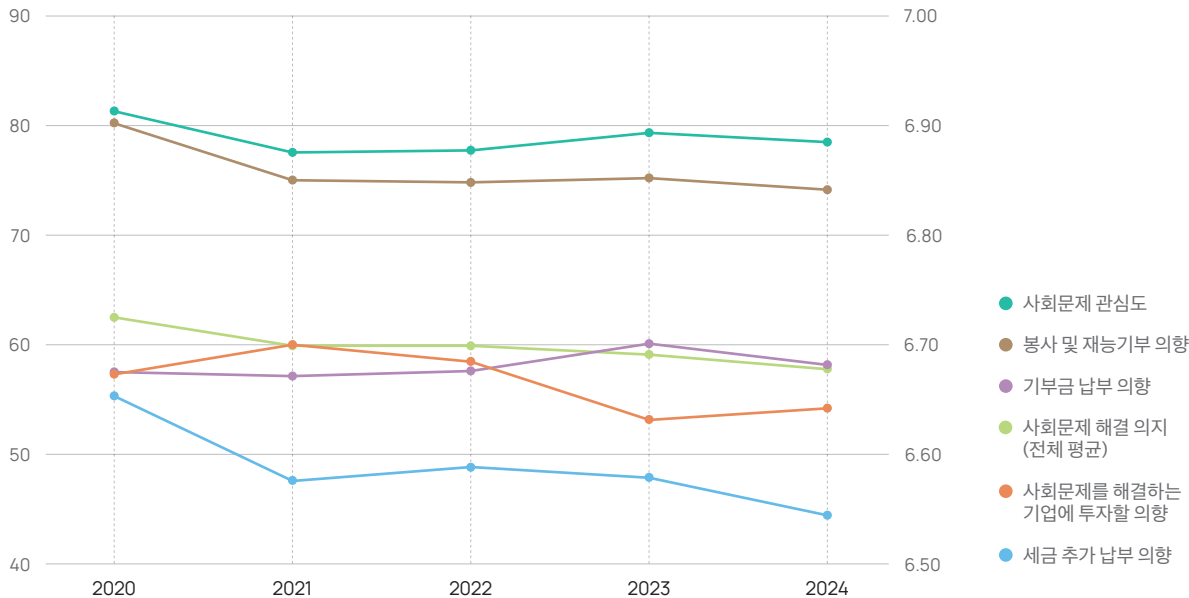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돈과 시간을 추가로 투자할 의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금 추가 납부 의향은 2020년 55.5%에서 2024년 44.4%로 크게 감소했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할 의향도 2020년 57.4%에서 2024년 54.2%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²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² 작년과 올해 조사에서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이슈는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한편, 기부금 납부 의향은 2020년 57.5%에서 2024년 58.2%로 약간 상승했으나, 2023년(60%) 보다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기부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20년 80.4%로 가장 높은 참여 의지를 보였던 봉사 및 재능기부 의향은 2024년 74.1%로 감소해, 장기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5개년 2020-2024 국민들의 사회문제 관심도 및 해결 의지 변화

좌축: %(사회문제 해결 액션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우축: 점(사회문제 관심도, 10점 만점)



5개년 2020-202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할애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금 납부	21.98 %	11.09 %	11.74 %	10.50 %	9.10 %
기부	13만 1,998원	14만 7,300원	18만 7,700원	8만 9,100원	11만 2,220원
봉사 및 재능기부	9시간 30분	9시간 20분	8시간 42분	7시간 52분	7시간 5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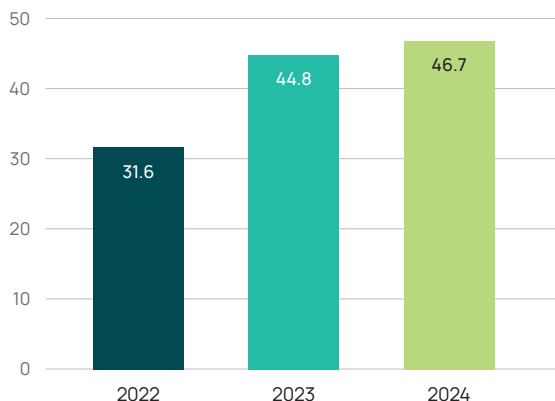
국민들이 추가로 낼 수 있는 비용도 줄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월평균 증세 비율은 2020년 22%에 올해 9.1%로 크게 감소(▼12.9%p)했고, 봉사 및 재능기부 시간은 2020년(9시간 30분) 대비 1시간 37분 줄어든었습니다. 추가로 낼 수 있는 기부금은 지난해 8만 9,100원에서 올해 11만 2,220원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13만 1,998원)보다 1만 9,778원 적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사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사회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신뢰 회복과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Sustainability Issues : 국민이 바라는 지속가능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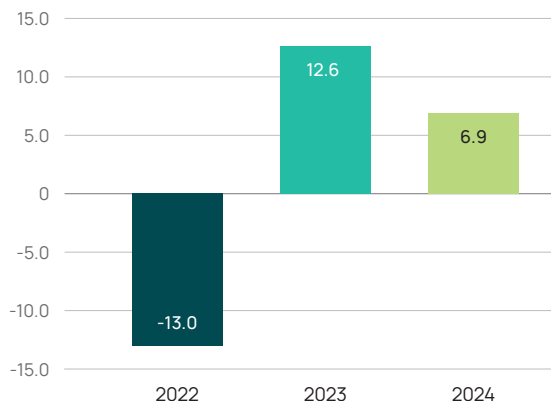
2022-2024 국민들의 ESG 이해도

단위: %('ESG를 알고 있는 정도'를 묻은 질문에
10점 만점 중 6점 이상 응답자 비율)



2022-2024 기업 ESG 평가

단위: %p('대기업 ESG 수준' 긍정적 평가 비율에서
부정적 평가 비율을 뺀 값)



ESG 이해도 높아진 국민, 기업 ESG 평가 변화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키워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ESG 인식 수준(0~10점, 전혀 모른다~매우 잘 안다)은 조사를 시작한 2021년 이래로 연평균 24%씩 증가하여, 국민의 절반(46.7%) 가까이가 ESG를 '알고 있다(6점 이상)'고 응답했습니다.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작년보다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12.6%p 높았으나, 올해는 그 차이가 6.9%p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제품 품질 및 안전(41.6%p)'과 '임직원 건강/복지 및 산업 안전(35.3%p)' 항목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낮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 오염 관리(-11.7%p)', '자원(물,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배출 관리(-10.9%p)', '생물다양성 및 생태영향(-18.8%p)'과 같은 항목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및 감사의 독립성(-10.5%p)', '반부패 등 비즈니스 윤리 및 법률 준수(-17.2%p)'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항목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환경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¹ 설문을 위한 평가 항목은
GRI·SASB·MSCI·DJSI 등 주요 글로벌
지표를 기반으로 취합하여 '지
속가능경영 10대 카테고리'로 구성
하였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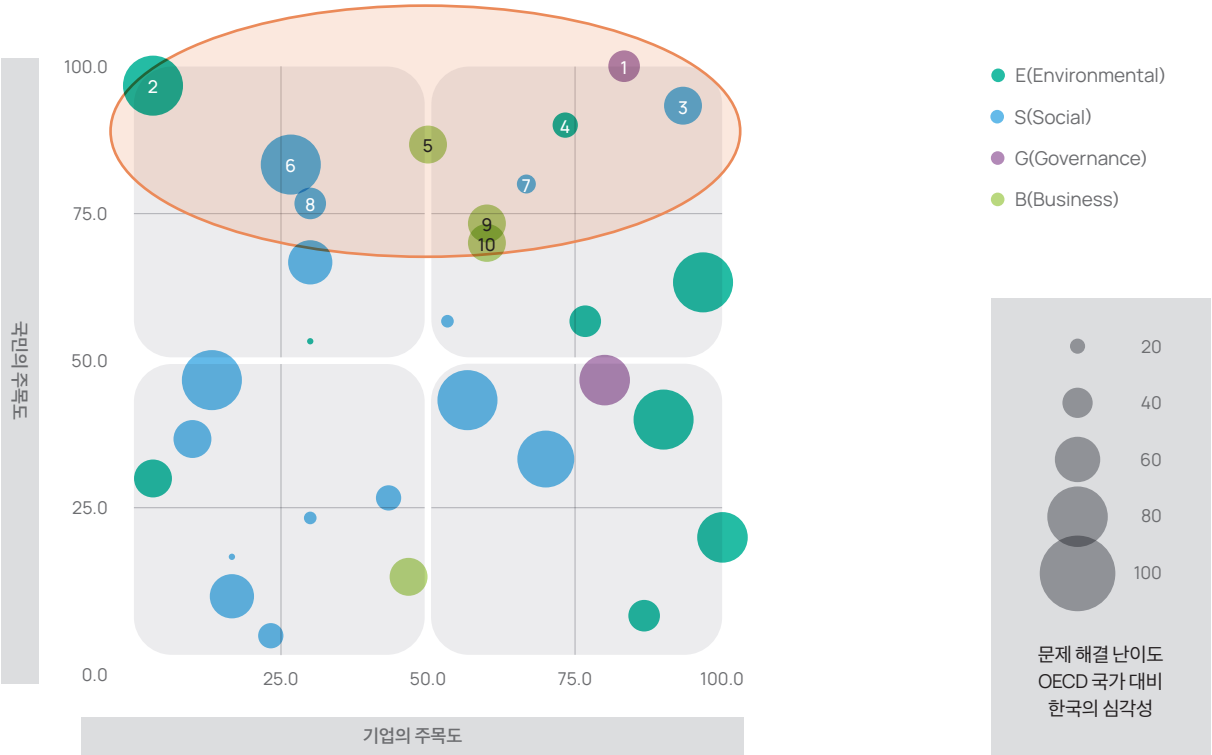
2024년 국민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100점)' 이슈입니다. 지난해 뇌물수수 및 유착 의혹,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93.3점)' 이슈도 작년에 이어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방 및 관리와 투명한 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환경 관련 영역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96.7점)'과 '자연재해 증가(90점)' 문제가 상위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지속된 폭우에 이어 폭염이 더 심해지면서, 국민과 기업 모두의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기업의 집중도는 정작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주목하지만 기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영역에는 주로 사회이슈들이 포함됐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의 집중도는 작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4차 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개선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stainability Gap Matrix : ESG Approach

단위: 점



이슈	국민 주목도	기업 주목도	난이도	국민-기업 Gap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100	83.3	46	16.7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96.7	3.3	92	93.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93.3	93.3	73	0
(태풍,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자연재해 증가	90	73.3	41	16.7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86.7	50	52	36.7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83.3	26.7	87	56.7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80	66.7	19	13.3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76.7	30	22	46.7
고용률 하락	73.3	60	58	13.3
청년 일자리 부족	70	60	63	10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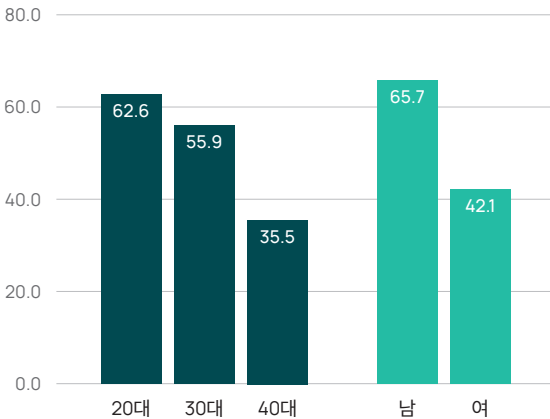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과 사회안전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4.89%로, OECD가 규정한 다문화 사회(외국인 비율 5%)로 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국민의 자녀 계획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9세 이하 무자녀 응답자 중에서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중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모습(20대 62.6%, 30대 55.9%, 40대 35.5%)이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은 65.7%가 향후 자녀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 비율이 42.1%에 그쳤습니다. 생애주기와 성별 인식 격차를 고려한 보다 세밀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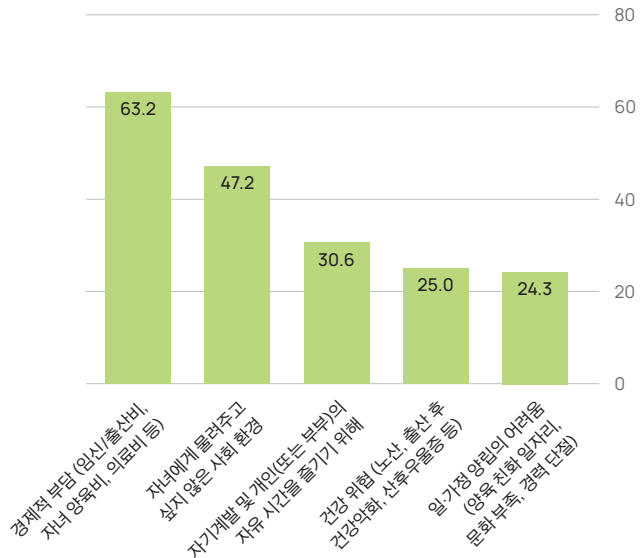
49세 이하 무자녀 응답자들의 자녀 계획(N=320)

단위: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N=144)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49세 이하 무자녀 응답자 중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이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 부담(63.2%)'을 꼽았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 환경(47.2%)', '자기계발 및 개인(또는 부부)의 자유 시간을 즐기기 위해(30.6%)', '건강 위험(25%)',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24.3%)'이 뒤를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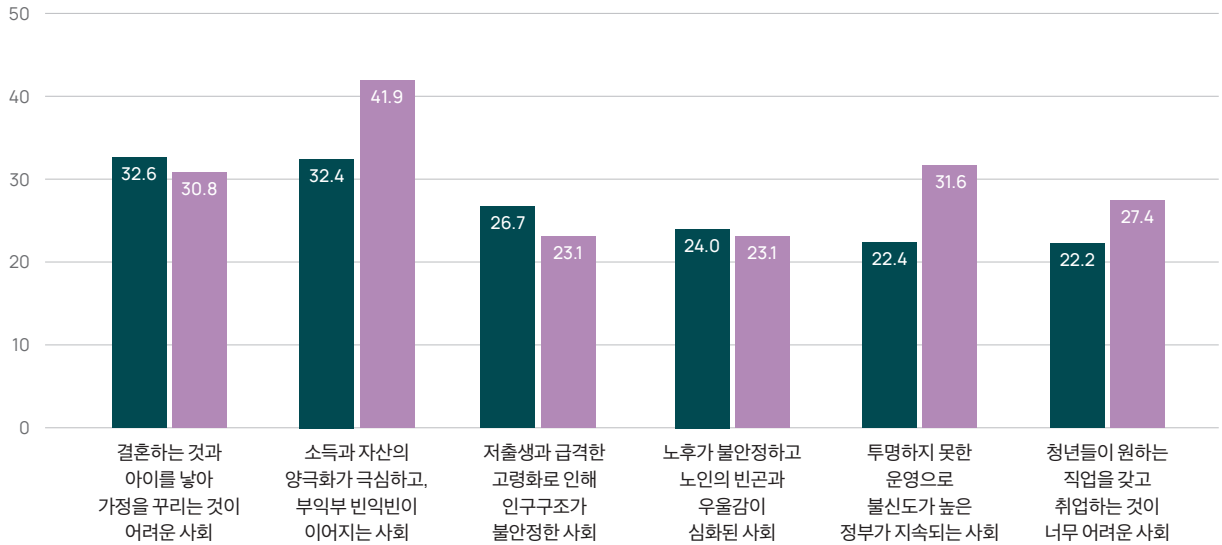
국민들에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 모습'을 물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에 이어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 2순위로 선택된 답변으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이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 모습은 '결혼하는 것과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려운 사회(32.6%)'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 주거 마련이 어려운 사회, 기후위기를 겪는 사회, 학벌 만능 사회 등 다른 변화보다도 저출생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사회만큼은 미래세대에 가장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이어지는 사회(41.9%)'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 전체 ●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49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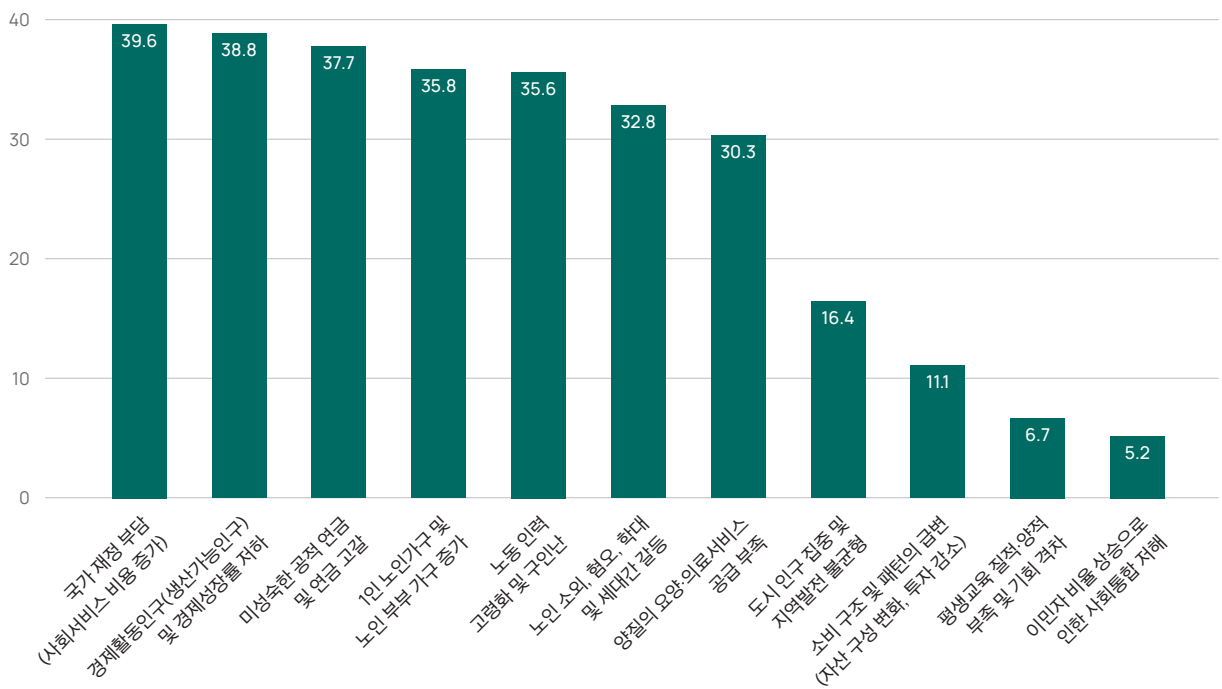


고령화가 만드는 변화와 우려

눈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국민들은 어느 정도로 준비됐을까요. 고령화와 관련이 깊은 사회문제 중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 재정 부담 (사회서비스 비용 증가)(39.6%)’,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및 경제성장률 저하(38.8%)’, ‘미성숙한 공적 연금 및 연금 고갈(37.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경제 성장 위기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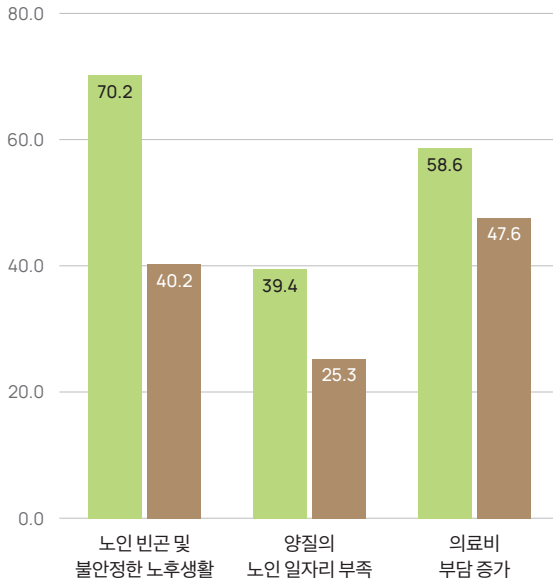
고령화가 가져올 변화와 우려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노후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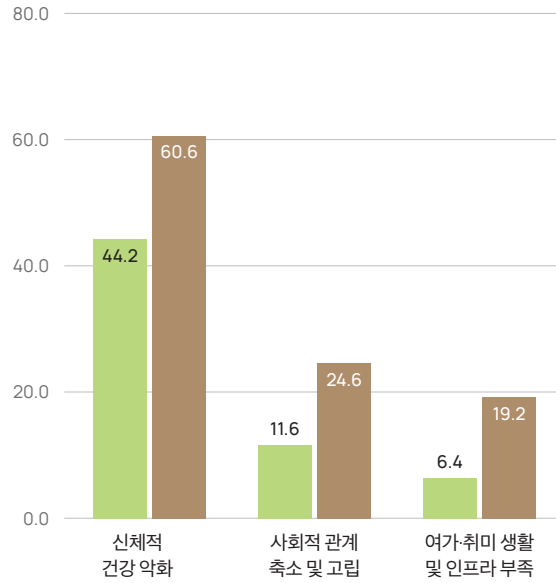
단위: %('65세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 것이다'라는 질문에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매우 동의한다)로 응답 결과의 비율)



● 노후 자신감 낮음(1~2점, n=245) ● 노후 자신감 높음(4~5점, n=353)

노후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이슈

단위: %('65세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 것이다'라는 질문에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매우 동의한다)로 응답 결과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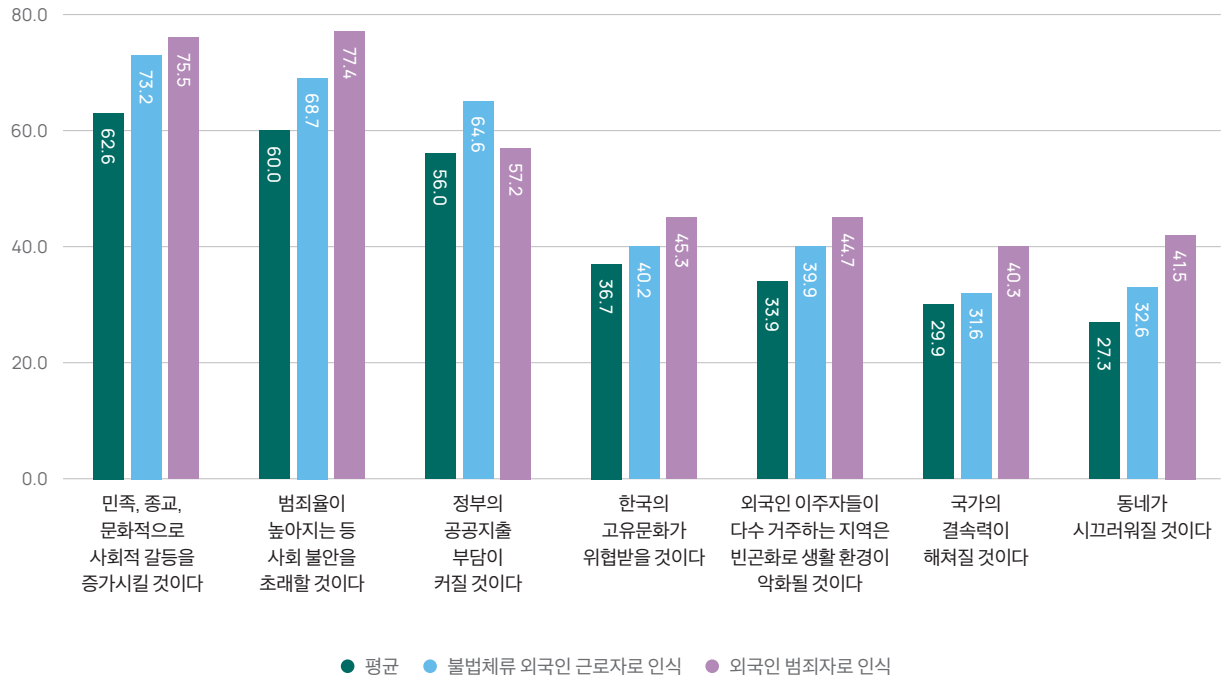


향후 기대하는 노후 여건에 따라 우려하는 노후 생활 이슈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나는 65세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 것이다'라는 질문에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매우 동의한다')점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노후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1~2점)은 노후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4~5점)보다 '노인 빈곤 및 불안정한 노후 생활(30%p 차이)', '양질의 노인 일자리 부족(14.1%p 차이)', '의료비 부담 증가(11%p 차이)' 등 경제적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노후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 악화(16.4%p 차이)', '사회적 관계 축소 및 고립(13%p 차이)', '여가 취미 생활 및 인프라 부족(12.8%p 차이)' 등 건강과 여가 문제를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사회, 우리 사회의 인식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외국인 이주 및 이민자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민족, 종교, 문화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킬 것(62.6%)',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할 것(60%)',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56%)'을 우려했습니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우려를 강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이주자의 모습으로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범죄자'를 떠올린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주자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더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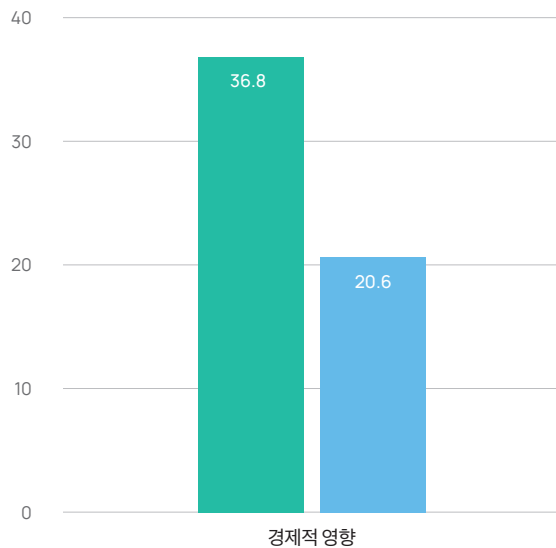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또한 기존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우려감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이주자를 떠올릴 때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범죄자' 혹은 '불법체류자'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이들이 국가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남에 따른 사회적 우려감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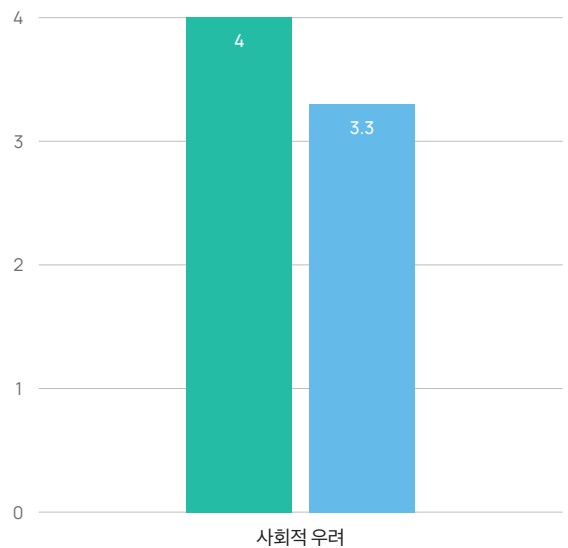
외국인 이주자 인식에 따른 경제 영향 평가

단위: %('외국인 이주자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반대하는 비율)



외국인 이주자 인식에 따른 사회적 우려도

단위: 개(외국인 이주자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항목 9개 중 평균 선택 수)



● 불법체류자 및 범죄자로 인식 ● 그 외 모습으로 인식

Process

연구 방법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① 사회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②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도출 ③ 일반국민 설문조사 ④ 데이터&사회문제 우선순위 분석 ⑤ 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등 단계별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① Issue Taxonomy & Analysis 사회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본 연구는 ‘2024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을 선정하여 사회문제를 재정의하고, 국내의 현실과 인식 수준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2024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은 UN SDGs, K-SDGs &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 WEF Global Risk, GRI, 정부 국정과제, 한국 사회지표 등 국내외 사회문제 관련 기준과 자료들을 통합 분석하여 확정된 139개 이슈 Pool 중, 각 이슈별 검색식을 기준으로 분석한 미디어 노출 빈도 순위를 통해 최종 100개 이슈로 도출됩니다.

‘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CSES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센터장 장용석 교수)가 2017년 국내외 사회문제 지표 및 기준을 분석하여 개발한 ‘新 사회문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트리플라잇의 미디어 분석 및 사회문제 우선순위 평가방법론을 바탕으로 100개 이슈와 분류체계의 매칭을 통해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언하고자 국민들의 생각을 묻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의 5주년을 맞아 5년간 국민들의 사회 인식과 사회문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본문에 포함되었습니다.

5개년 ‘5년간 국민 인식 변화(2020-2024)’ 분석 목록

챕터	페이지	내용
Chapter 1 핵심 요약	14p	국민의 사회인식 변화
	15p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Top 10 사회이슈
	16p	국민에게 100조원이 있다면
	17p	국민들의 사회문제 관심도 및 해결 의지 변화
	17p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할애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
Chapter 2 사회인식 조사	32p	국민의 행복감 변화
	32p	사회에 대한 평가 변화
	33p	우리사회의 ‘안전’, ‘신뢰’, ‘공평’, ‘활력’ 변화
	33p	5년 전 국가 및 가정 경제 상황 평가 변화
	38p	10대 사회문제 테마 영향력 변화
	52p	5년간 OECD 주요국 대비 심각한 문제 Top10
	54p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55p	사회문제 해결 방식
	58p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별 국민의 참여 의향
	59p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할애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
	60p	국민이 바라본 문제 해결 우선순위
	62p	국민이 평가한 영향력 있는 액션
Chapter 3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65p	사회문제를 접하는 채널 유형
	70p	ESG 인식도 변화
	72p	국민이 주목하는 ESG 이슈 Top 10

‘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10대 테마, 100개 이슈로 구성됩니다.

3대 목표	사회문제 10대 테마	2024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Economy)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가계부채 증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취약계층 소득 불안(서민 금융 지원 부족), 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고용 및 노동 불안정	구인 및 인력난, 청년 일자리 부족,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증가, 어려운 재취업, 고용률 하락,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안전하고 행복한 삶 (Society)	교육 불평등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교육 수혜 격차 심화(조기유학 증가 등), 양질의 교육 부족, 고등교육의 질 저하,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삶의 질 저하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부족,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 부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저출생 문제,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발전 불균형,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학교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 부족,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사회통합 저해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성별격차 및 성차별,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편견 및 차별, 노사갈등 심화, 만연한 특권과 편법
	안전 위협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아동학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학교폭력, 가정폭력,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지구 온난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유실 유기동물 안전 부족,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자연재해	폭염·한파 증가, 가뭄·홍수 증가, 태풍 증가, 폭설과 폭우 증가, 지진과 쓰나미 증가, 화산폭발 위험 증가,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대형산불 증가, 산사태 증가,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전력수급 불안정, 물순환 개선 및 재이용 부족

② Material Sustainability Issues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도출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는 무엇일까요. 국내 산업군별 주요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 Pool을 취합하고, 이를 ‘2024 대한민국 사회이슈 100’와 연계하여 기업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집중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 1,000명에게 ‘국내 대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슈’와 중대 이슈별 기업 평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업이 주목하는 사회문제와 국민이 바라는 사회문제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였습니다.

③ Public Survey 일반 국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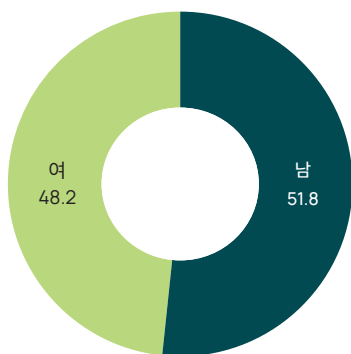
현재와 10년 후 미래의 삶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국민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	
조사 방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모바일 응답 *설문지 및 응답결과 데이터는 SV hub 웹사이트(svhub.co.kr).	
표본 오차	±3.10%p	(95% 신뢰수준, 표집 상의 비율 할당 여부에 따라 단순임의추출 또는 층화임의추출 방식을 활용)
조사 기간	2024년 5월 14일 - 5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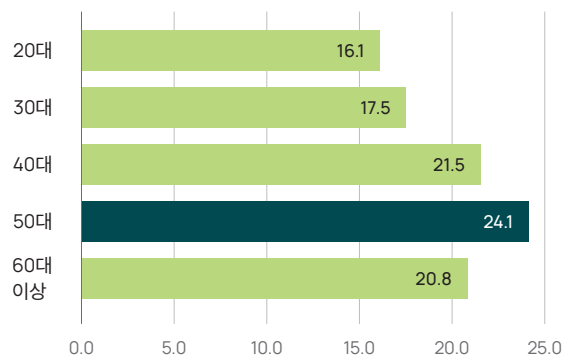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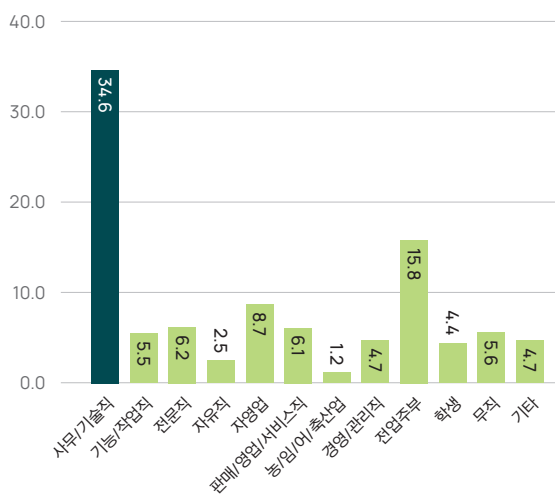
연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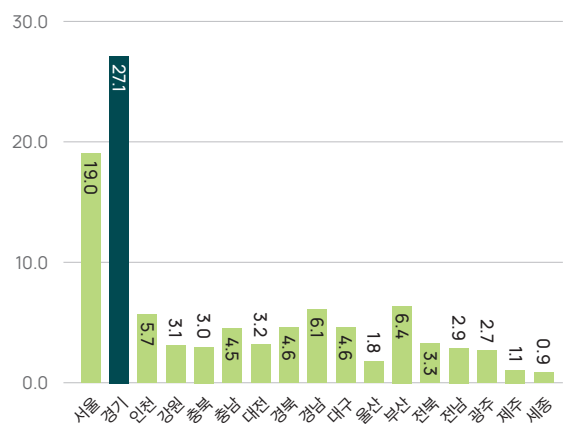
직업

단위: %(특성별 비중)



지역

단위: %(특성별 비중)



④ Data Analysis 데이터 및 사회문제 분석

‘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선정된 100개 이슈별로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EF(세계경제포럼), World Bank(세계은행), TI(국제투명성기구) 등 OECD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이슈별 한국의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일반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매칭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다 통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도출한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위험과 기회요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액션 방향 등을 연계하여 짚어봤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저출생 및 고령화,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된 리포트 20여개를 분석하고 이를 ‘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 항목과 매칭하여 설문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⑤ Implication 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미디어 분석, 기업의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 도출, 일반 국민 설문조사, OECD 38개국 대비 한국 순위 등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과 종합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Methodology 연구 프레임워크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 수준을 분석하는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별 액션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 해결 난도가 높을수록 모든 주체의 협력과 자원 및 역량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수준이 낮고, 문제 해결 난도가 낮을수록 다양한 실험과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 Impact Issues Priority Matrix



Y축

임팩트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임팩트는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현재와 미래 사회문제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100점 만점으로 도출한 값이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10년 후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거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응답자가 선택하는 사회문제는 ‘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의 3대 목표, 10대 사회문제 테마, 100대 이슈를 기반으로 제시됐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수록, y축값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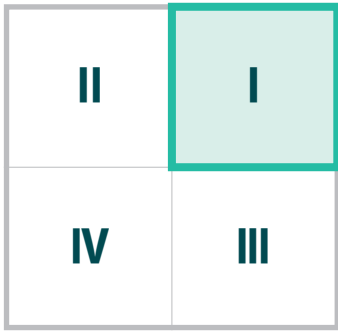
P.32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현재와 미래 이슈

X축

문제 해결 난이도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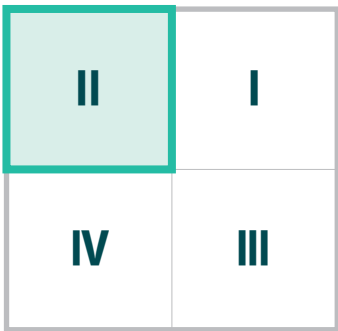
문제 해결 난도는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도출한 값이다. ‘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에 선정된 100개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OECD 38개국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이다.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역량이 부족하므로, 문제 해결 난도는 높아질수록 x축값이 커진다.

P.48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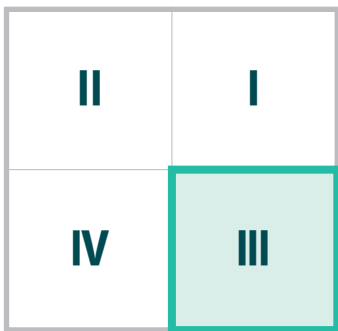
① Do First

- 문제 해결 난도와 영향력이 높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사회문제들은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협력과 자원·역량 집중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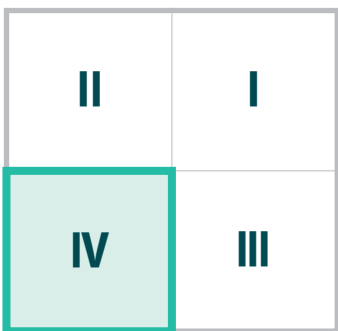
② Do Plan

- 문제 영향력이 높고 난도는 낮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사회문제들은 비교적 해결이 쉬우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역량·자원 계획을 통해 자원 낭비를 경계하고, 효율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③ Do Monitor

- 문제 해결 난도가 높고 영향력이 낮은 영역으로, 해결이 어렵고 관심도 적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 및 모니터링과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인 연구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④ Delegate

- 문제 해결 난도와 영향력이 낮은 영역으로, 관심이 적고 해결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자원의 적절하고 장기적인 배분이 중요합니다.
- 시민사회 및 개개인의 다양한 실험과 정부 및 기업의 지원,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CHAPTER 2

Impact Issues Analysis

2024 사회문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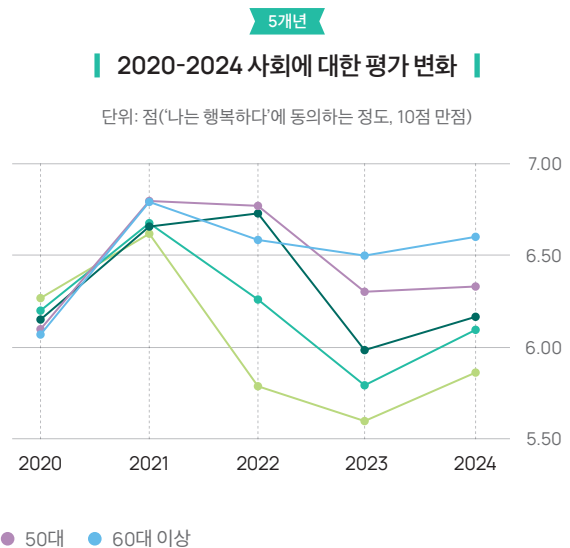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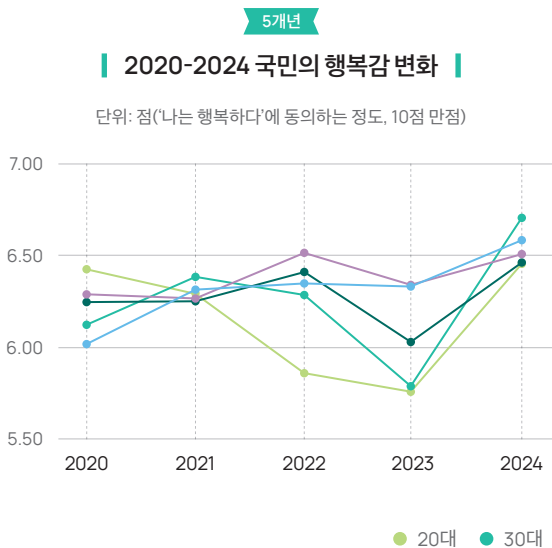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Social Awareness : 사회인식 조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를 진행한 5년 동안 국민의 행복감은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했습니다. 2022년 20-30대의 행복감은 낮아졌지만 40-60대의 행복감은 높아지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으며, 팬데믹이 종료된 2023년에는 오히려 전 연령대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올해 진행된 2024년 설문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작년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으며, 50대를 제외하고 모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특히 20대(12.1%p 증가)와 30대(16%p 증가)가 작년 대비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 이후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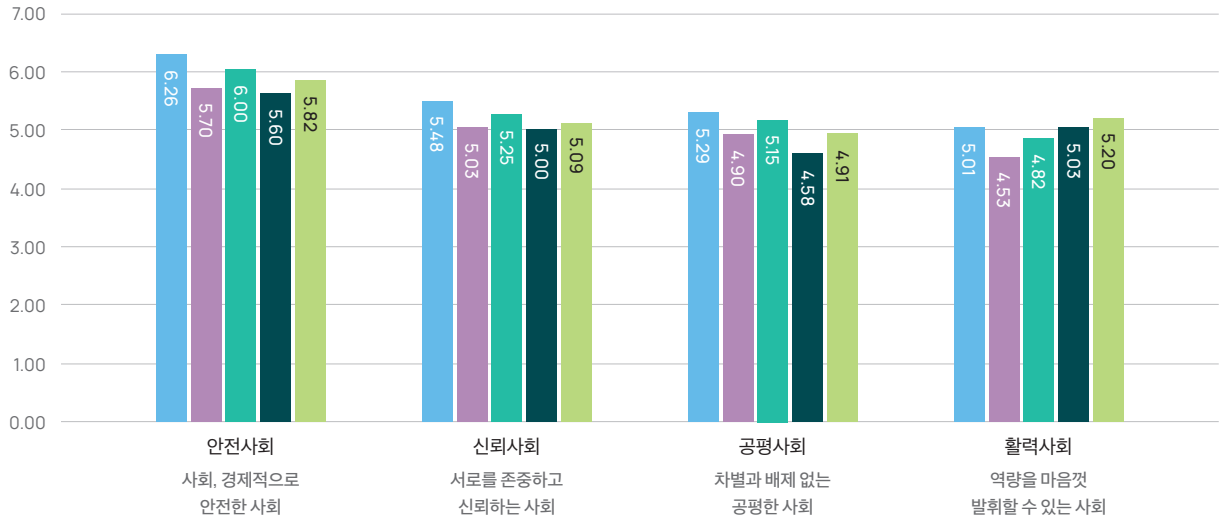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는 해가 지날수록 연령별 격차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은 2021년까지 비슷한 수준(표준 편차: 약 0.07점)으로 나타났지만, 2022년부터 3년간 격차가 뚜렷해졌습니다(표준 편차: 약 0.17점). 행복감과 다르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도 특징입니다.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¹를 종합해 ‘살기 좋은 사회’의 특징을 ‘안전사회’, ‘신뢰사회’, ‘공평사회’, ‘활력사회’로 설정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만, 공평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을 통틀어 2023년 최하점(4.58점)을 받았던 공평사회에 대한 평가는 올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5점 이하(4.91점)로 나타났으며, 신뢰사회(5.09점)가 그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사회모습에 대한 평가는 5년 동안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사회, 신뢰사회, 공평사회에 대한 평가의 연평균 변화율은 약 -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활력사회의 경우 연평균 약 1%의 미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겹쳤던 2021년과 2022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활력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¹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C. Wilker(2005), Yang&Holzer(2006), Peters(2002),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재열 외(2015)



국가 및 가정 경제 상황은 더 좋아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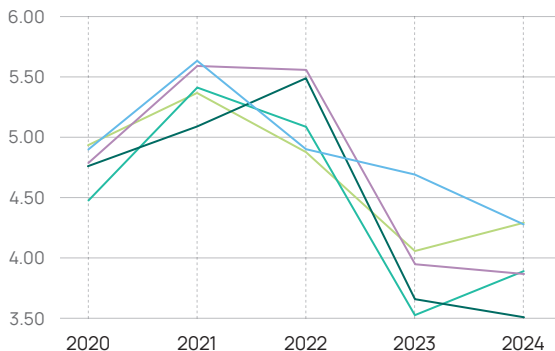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연령대에 따라 격차를 보였습니다. '5년 전 대비 국가 경제 상황'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질문에서 작년 국민들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급감하며(평균 1.22점 하락) 조사가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20대, 30대가 국가 경제 상황을 작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각각 0.24점, 0.37점 상승)한 반면, 40대 이상 응답자들은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평균 0.15점 하락).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대비 가정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20대, 30대는 작년보다 긍정적인 평가(각각 5.07, 5.03 점)를 내린 반면, 40대 이상은 가정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변(4.63점)했습니다. 한편 50대에서 가정 형편이 나아졌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많아졌으나 은퇴가 맞물린 60대 이상은 악화됐고, 이들 모두 5년간 하향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5개년

2020-2024 국가 경제 상황 변화

단위: 점(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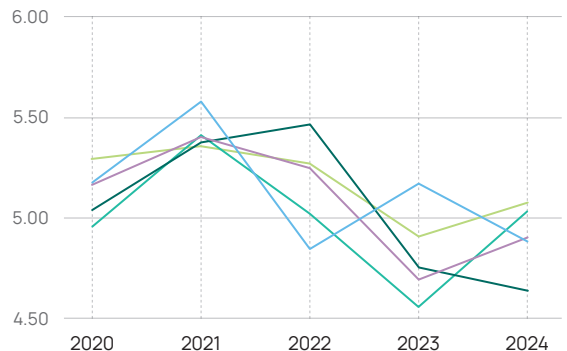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5개년

2020-2024 가정 경제 상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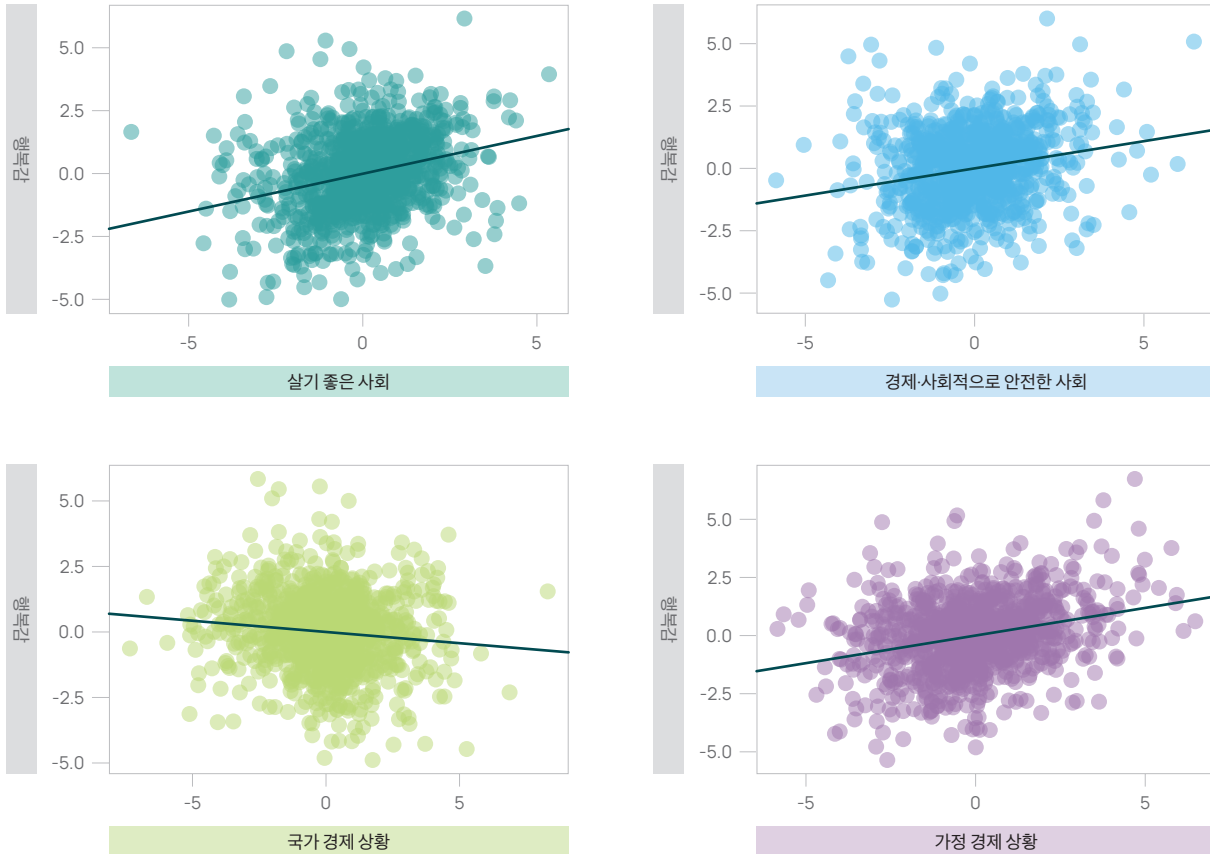
단위: 점(10점 만점)



경제·사회적 환경과 국민의 행복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인가(살기 좋은 사회)',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안전한가(안전사회)', '5년 전 대비 국가 경제 상황', '5년 전 대비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

경제·사회적 환경 관련 변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



경제·사회적 안정이 보장된 사회일수록, 개인의 가정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행복감에 대한 응답이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행복감은 공평, 활력사회보다 경제·사회적으로 안전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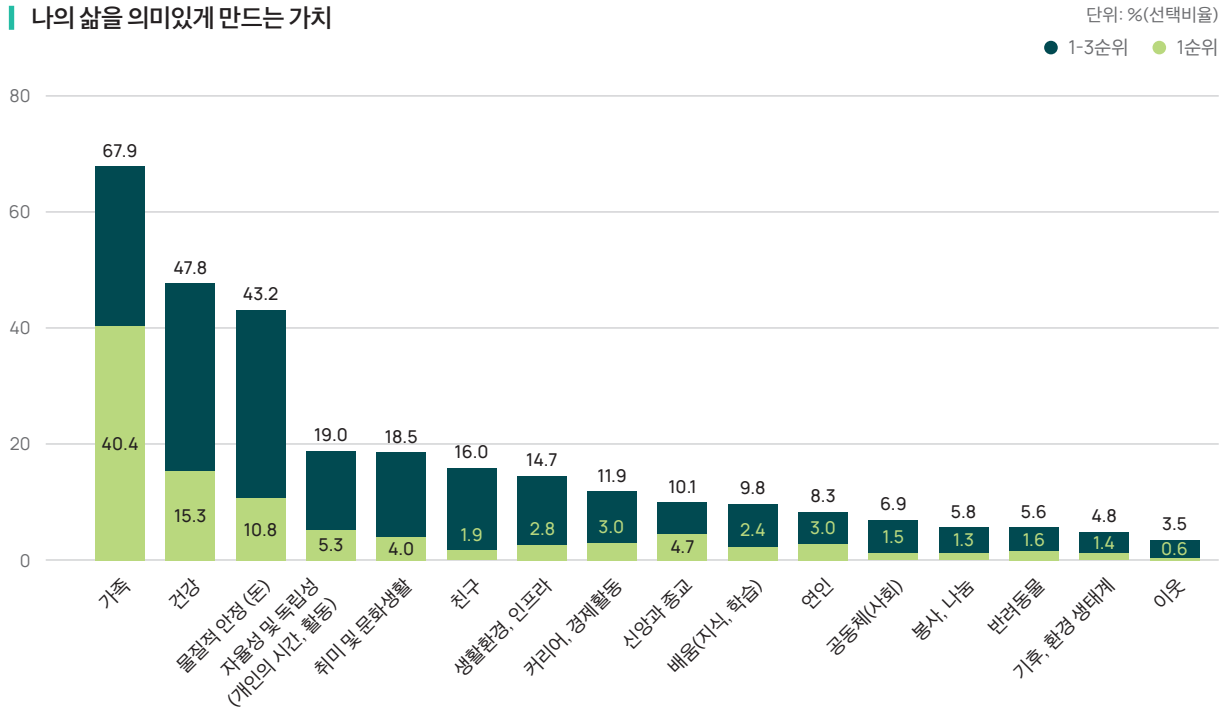
반면,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과 행복감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경기 및 재정 상황 보다는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가정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² '나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평가(신뢰사회)' 변수를 포함한 단순 회귀분석 모델($R^2=0.41$, 99.5% 유의수준). 평가 변수 각각의 회귀계수는 '나이' 0.07, '살기 좋은 사회' 0.29, '안전사회' 0.18, '신뢰사회' 0.12, '국가 경제' -0.10, '가정 경제' 0.23으로 분석됨.

국민들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올해 연구에서는 신규 문항으로 ‘나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를 추가해,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설문 결과 국민들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67.9%)’을 삶의 근간이자, 살아가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47.8%), 물질적 안정(43.2%) 보다 높았고, 자율성 및 독립성(19%), 취미 및 문화생활(18.5%)이 뒤를 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



개인의 삶과 관련된 가치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공동체(6.9%), 봉사 및 나눔(5.8%), 이웃(3.5%) 등 타인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항목을 꼽은 국민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이웃(3.5%)의 중요도가 반려동물(5.6%)보다 낮게 나타나 서로간에 신뢰가 낮아진 우리 사회상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한편 물질적 안정을 선택한 국민이 43.2%로 많았지만, 수입의 기반이 되는 커리어 및 경제활동(11.9%), 배움(9.8%)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커리어, 배움, 종교적 깨달음보다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취미와 문화 생활을 통해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물질적 안정과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해 이러한 행복을 유지하길 바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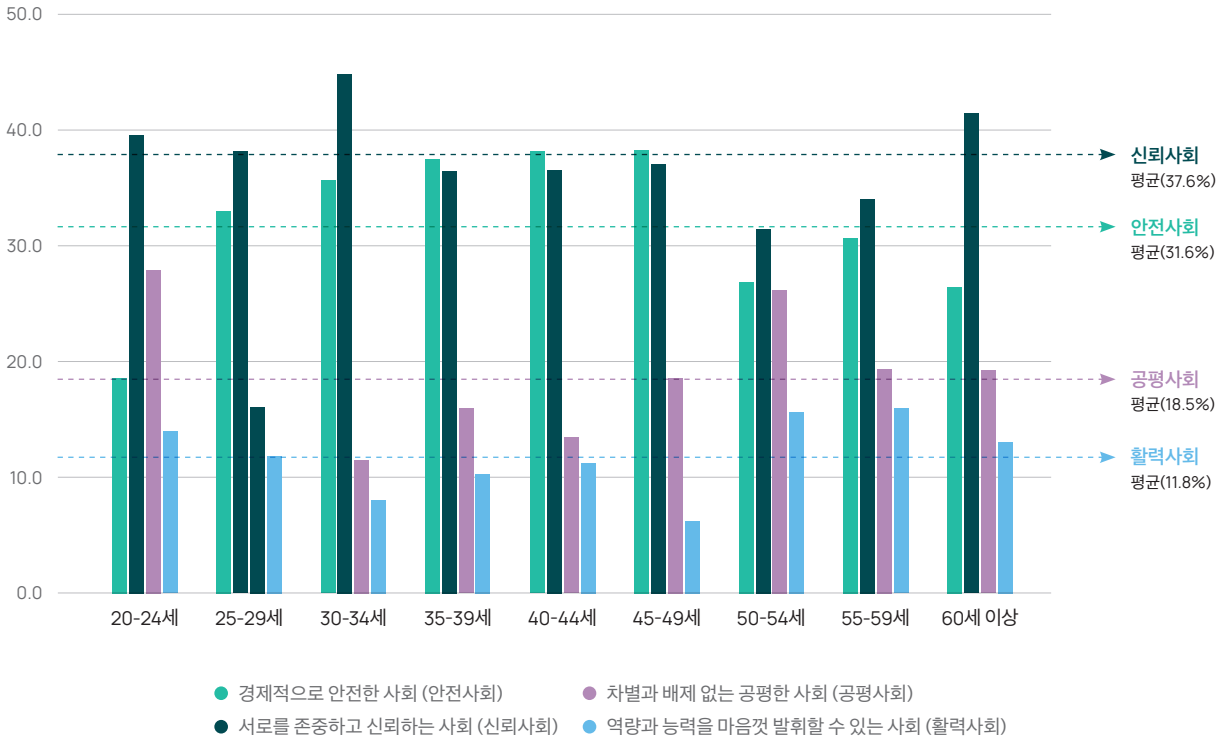
국민이 바라는 미래 사회의 모습

국민의 행복과 의미있는 삶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2024년 OECD에서 발표한 경제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심각한 경쟁의식이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하게 짚은 바 있습니다. 국민들도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추가로 질문한 결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신뢰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3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존중과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 3명 중 1명(31.6%)이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적인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에 따라 기대하는 사회가 다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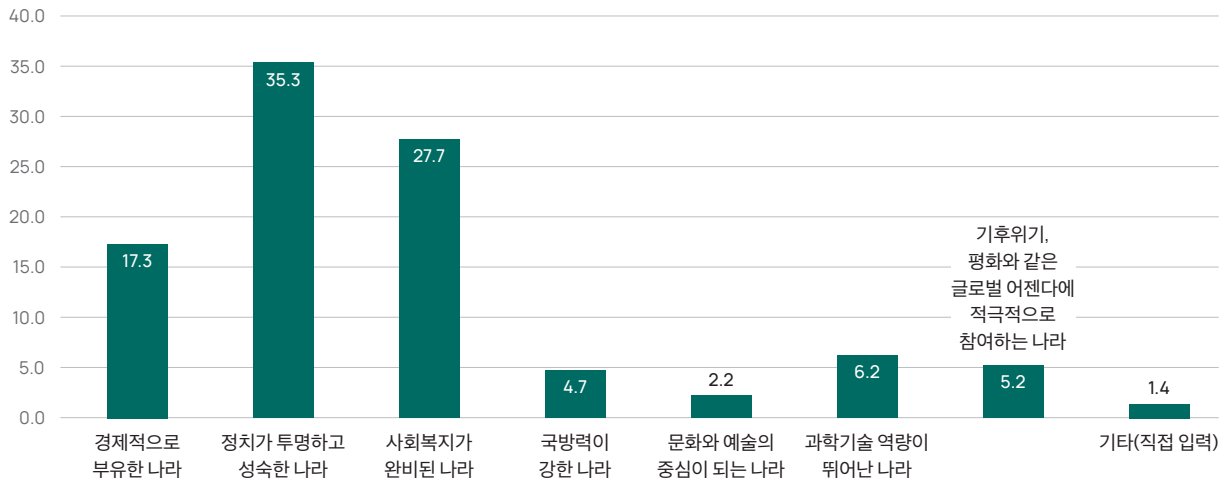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회 모습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34세 미만과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신뢰사회)를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30대 중후반(35-39세)과 40대는 경제·사회적으로 안전한 사회(안전사회) 모습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인 20대 초반(20-24세)과 평균 퇴직 연령(49.4세, 통계청)인 50대가 차별과 배제 없는 공평한 사회(공평사회)를 바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고 경제·사회 각 분야의 안전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특성별로 겪는 차별과 배제가 해소된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3분의 1 이상(35.3%, 1위)이 가장 먼저 '정치가 투명하고 성숙한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 국민들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이슈 1위로 꼽힌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과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사회복지가完비된 나라(27.7%)',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17.3%)' 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 안전망과 경제 성장 이전에 정치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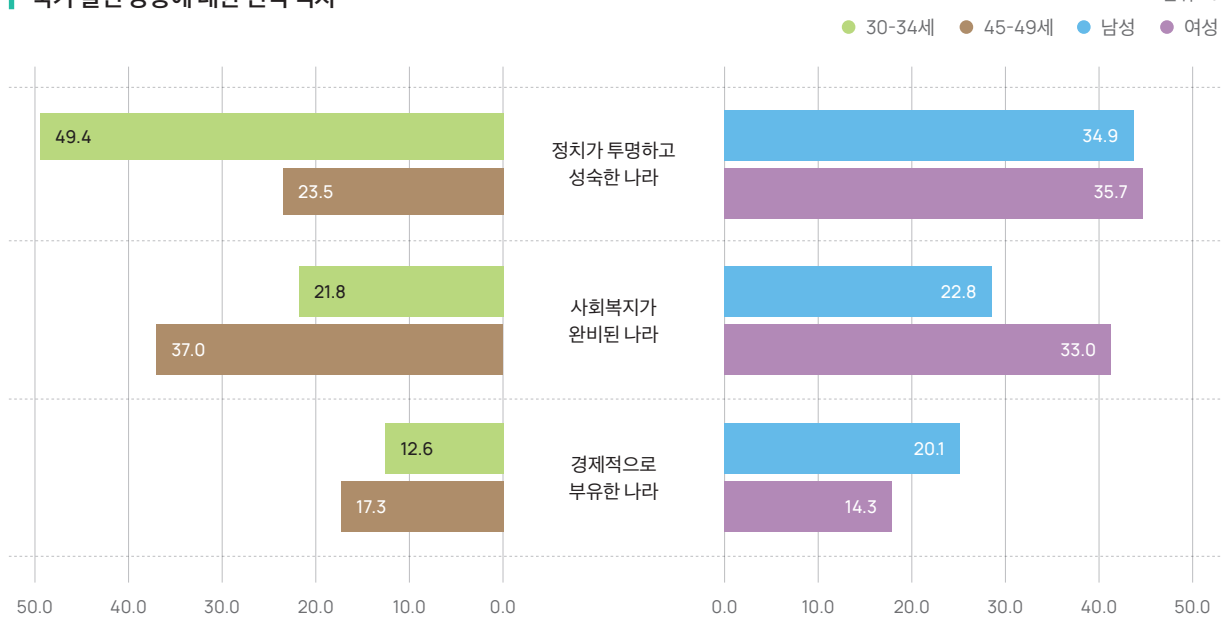


이같은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과 40대 후반의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30대 초반의 절반(49.4%)은 '정치가 투명하고 성숙한 나라'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한 반면, 40대 후반은 23.5%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40대 후반은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37%)'로의 변화를 1순위로 꼽았고, 이에 대해 30대 초반 응답자의 21.8%만이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33.0%)를 1순위로 꼽은 여성 비중(33.0%)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선택한 비중(14.3%) 보다 약 2.5배 가량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두 항목간 차이가 1.7%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남성은 경제적 성장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한편, 남성(34.9%)과 여성(35.7%) 모두 '정치가 투명하고 성숙한 나라'를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그 비중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격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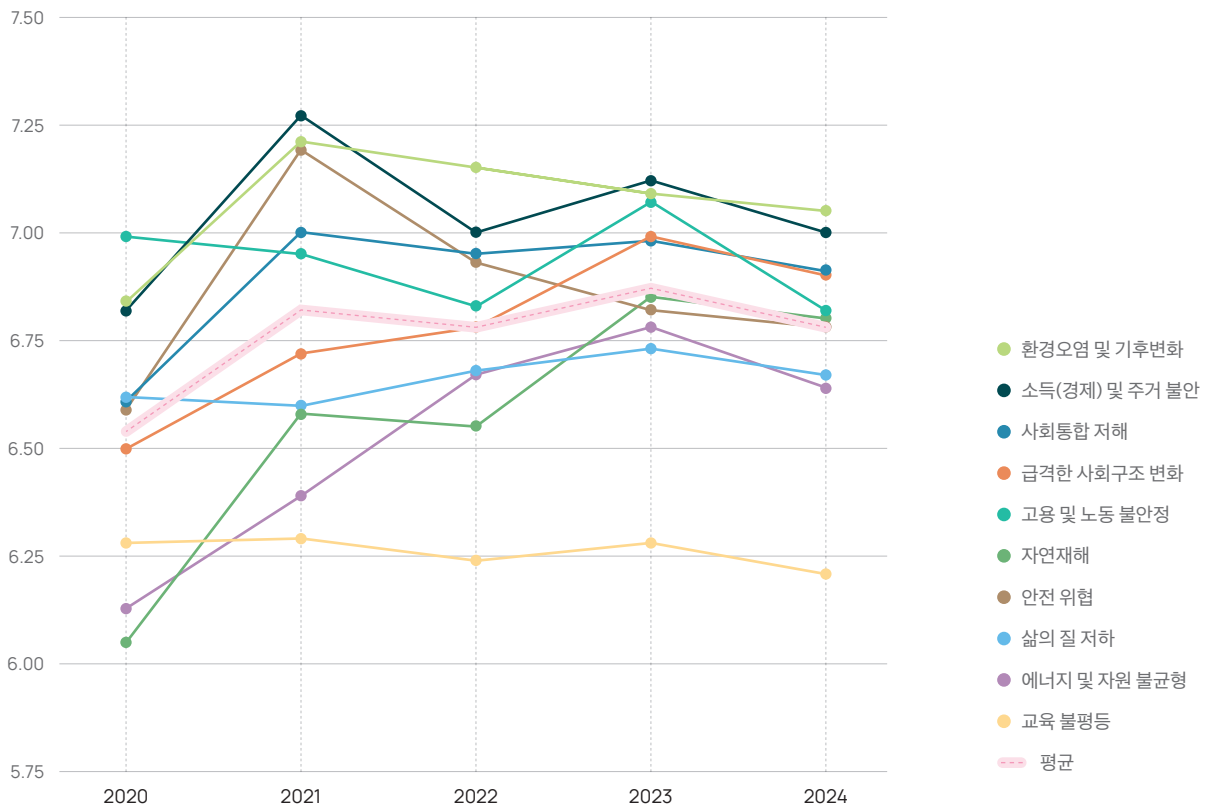
사회문제 10대 테마로 들여다본 국민의 삶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5년 동안 국민들이 평가한 10대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과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테마가 2021년에 올해 다시 1위로 올라서면서,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통합 저해'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연평균 3% 증가)' 테마도 3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인식조사가 시작된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낮았던 '자연재해(연평균 3% 증가)',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연평균 2% 증가)' 테마에 속한 이슈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5개년 2020-2024 부정적 영향력의 상향 평준화

단위: 점(10대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 평균)



주목할 점은 지난 5년간 사회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상향 평준화된 것입니다(연평균 1% 증가). 또한 시간이 갈수록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든 테마의 사회문제를 체감하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교육 불평등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건이나 이슈 트렌드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한국 사회의 만성화된 교육 문제의 고유성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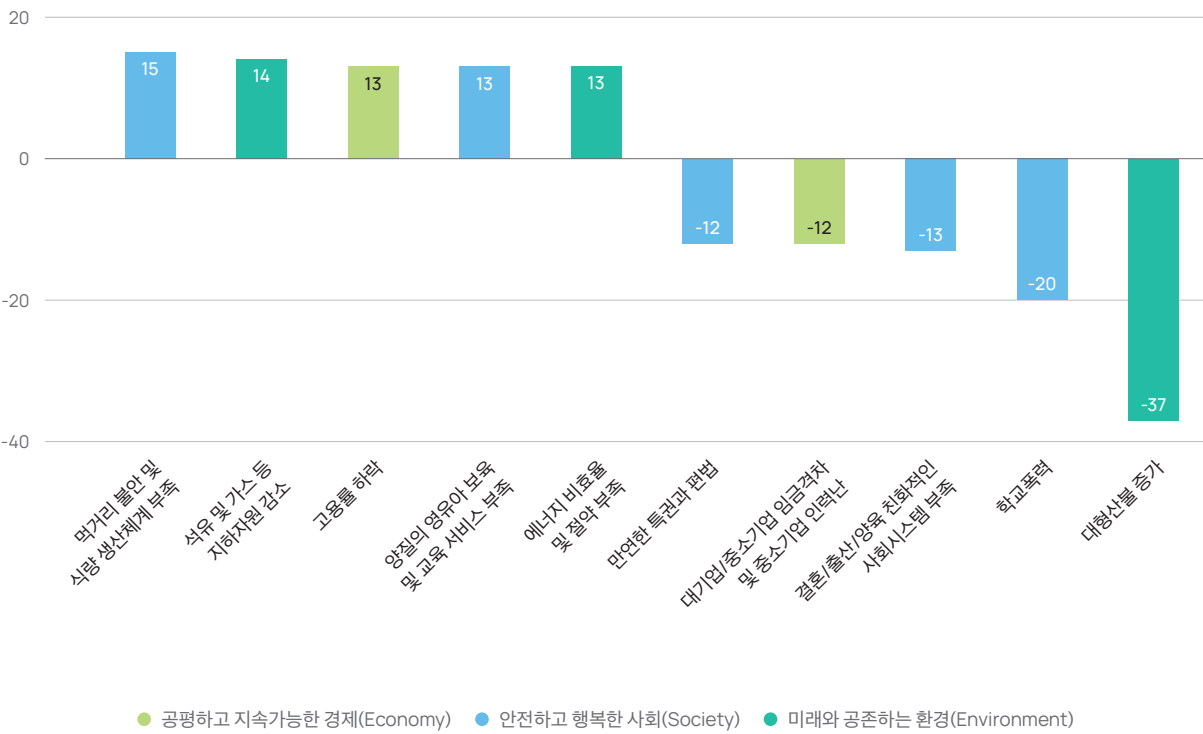
현재와 10년 후 미래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미치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10대 테마별로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모든 테마의 부정적 영향력이 현재(평균 6.78점)보다 미래(평균 7.05점)에 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23-2024 사회이슈 임팩트 변화 Top 10

작년에 비해 올해 영향력이 크게 높아진 이슈들은 무엇일까요.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슈들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고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2024 사회이슈 임팩트 변화 Top 10

단위: 임팩트 변화, 2024년 임팩트에서 2023년 임팩트를 뺀 값(현재 영향력 기준)



작년과 비교해 자원과 관련된 이슈들의 임팩트가 높아진 모습입니다.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15점 상승)',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14점 상승)', 그리고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13점 상승)' 등 천연자원의 양적 한계로 인한 문제들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2023년 주요 사건들과 함께 화두로 떠올랐던 '대형산불 증가(37점 감소)', '학교폭력(20점 감소)' 이슈들의 영향력은 올해 대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한편, 인구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13점 감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줄어든 반면,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13점 상승)'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거시적인 정책 및 사회 인프라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2024 국민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력 Top 30

국민들은 지난해보다 어떤 이슈가 더 심각해졌다고 느낄까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국민이 체감하는 부정적 영향력이 커진 Top30 이슈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봤습니다.

올해 조사 결과는 2023년(평균 9.1점 변화)에 비해 순위 변동이 적은(평균 6.3점 변화)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현재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이 Top3로 나타났습니다. 문제 해결 난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진 이슈는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84점→88점)’과 ‘어려운 재취업(76점→8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집값과 인력난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작년 각각 4위, 6위에 올랐던 ‘집값 불안정’과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95점→83점)’은 6위, 18위로 떨어졌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부담’, ‘구인 및 인력난’은 올해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부정적 영향력이 지난해 보다 낮아진 모습입니다.

사회 테마에는 차이 속에 빚어지는 갈등과 연관된 이슈들의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87점→92점)’,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85점→90점)’,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78→80점)’,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66→75점)’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이 커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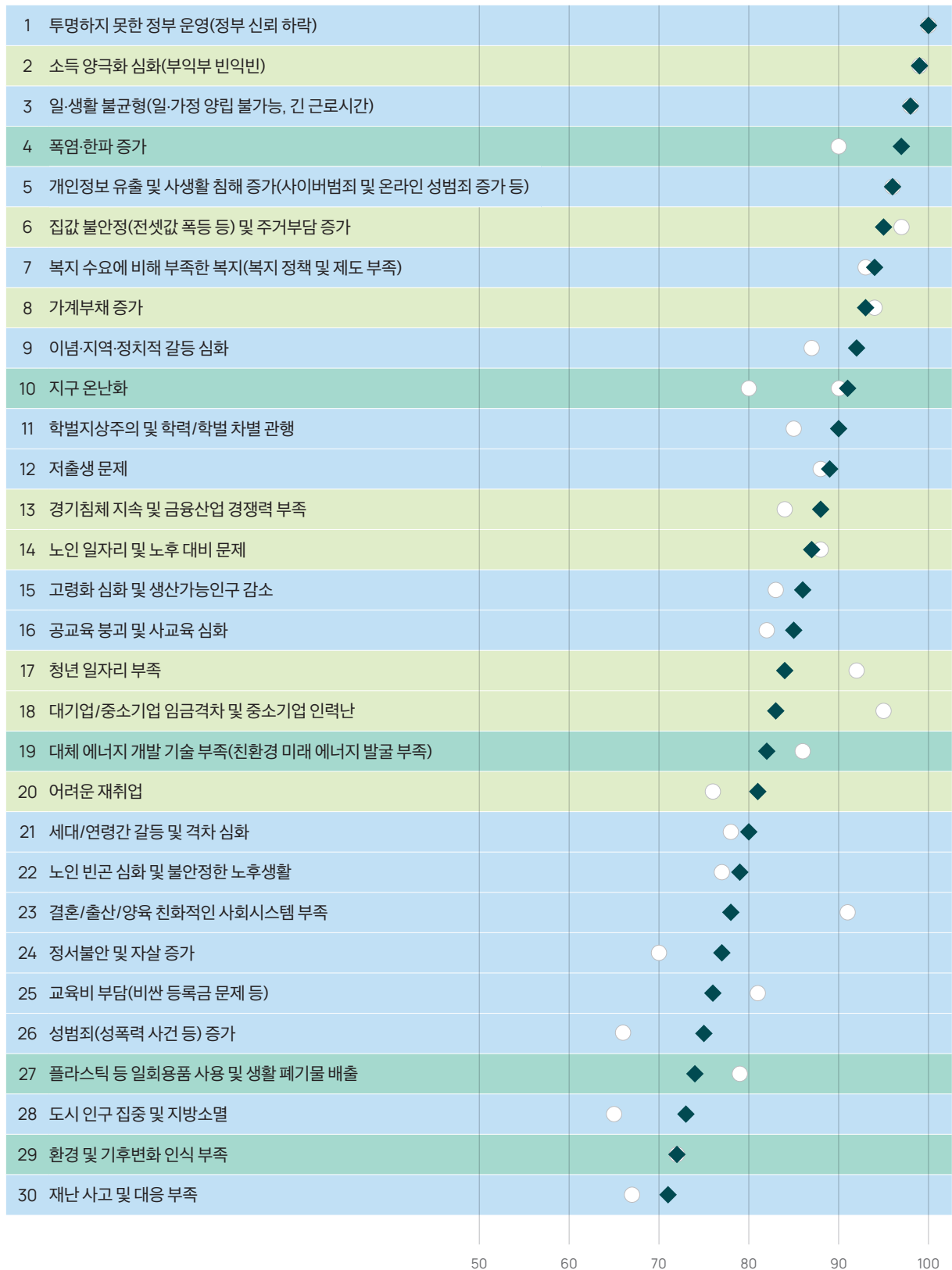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65점→73점)’은 올해 처음으로 30위권에 진입하며 국민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문제(88점→89점)’,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83점→86점)’,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77점→79점)’도 영향력이 조금씩 높아져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함께, 국민의 갈등·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경 테마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작년보다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79점→74점)’의 영향력은 줄어든 반면, ‘폭염·한파 증가(90점→97점)’가 11위에서 4위로 높아졌고 21위(80점)였던 ‘지구 온난화’도 11점 상승하며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2023-2024 국민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력 Top30

단위: 점(임팩트, 현재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 2023 ◆ 2024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현재 나의 삶을 힘겹게 하는 주요 이슈는?

현재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문제 10대 테마 Top3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1순위 상승)',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1순위 하락)', '사회 통합 저해(2순위 상승)'입니다. '지구 온난화(23.4%, 4.0%p 증가)'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며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테마의 1순위가 됐으며,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14.8%, 2.0%p 증가)'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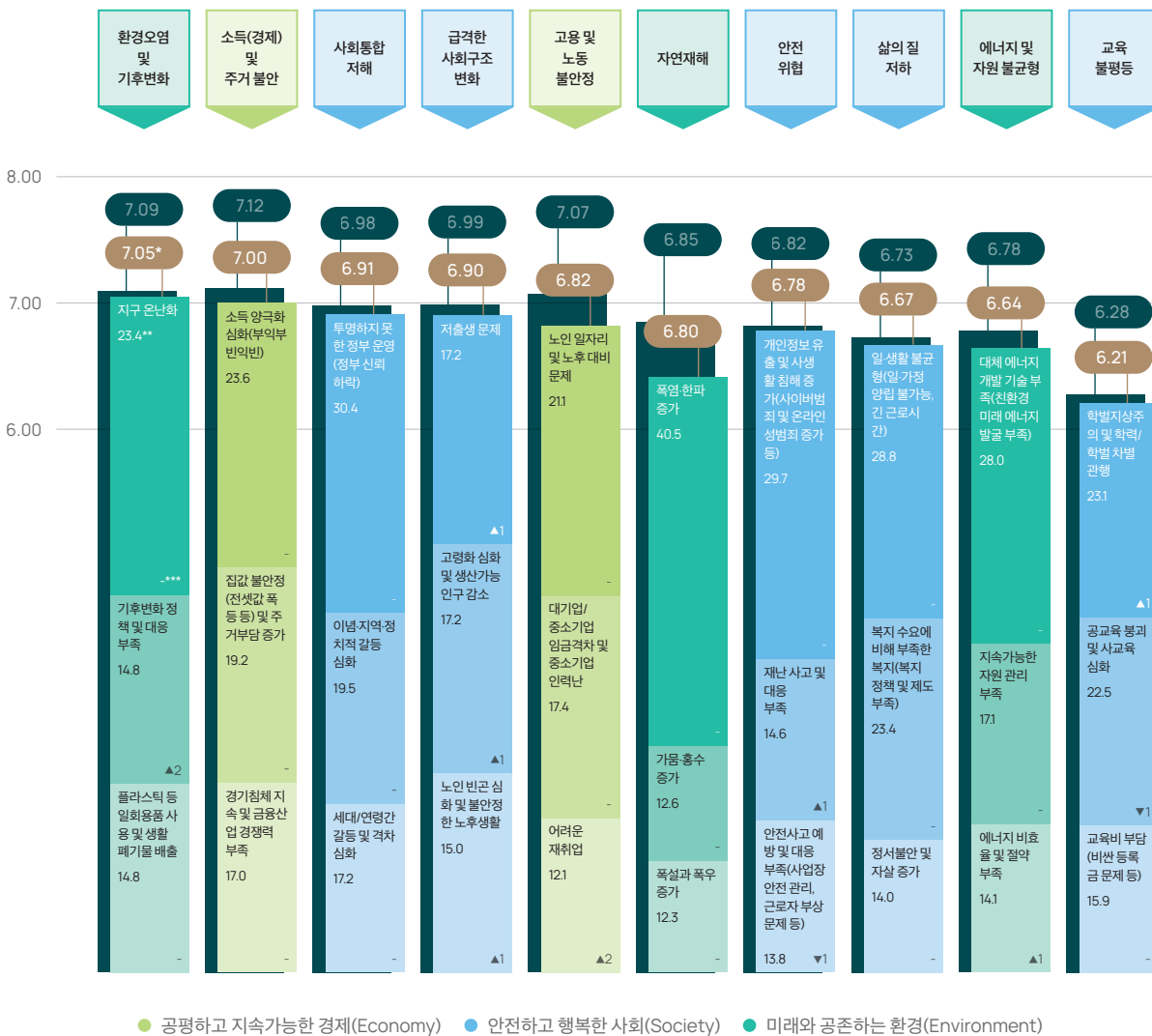
지난해 5위에 머물렀던 사회통합 저해 테마는 2순위가 상승하여 국민들이 우려하는 3순위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이슈들의 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각각의 비율이 소폭(평균 1.2%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위였던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문제는 올해 2순위로 물러났지만, 테마 내 이슈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2계단이 하락한 고용 및 노동 불안정 테마에서는 '청년 일자리 부족(1순위 하락)' 이슈 대신 '어려운 재취업(2순위 상승)' 문제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슈들의 순위 변동이 가장 많았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테마에는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평가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자연재해 테마는 순위 변동이 없었지만, '폭염·한파 증가'를 선택한 비율이 작년(27.8%)에 비해 12.8%p 증가한 40.5%를 기록하며 극한 기온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우려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사회문제별 Top 3)

*테마 영향력(점) **1순위로 꼽힌 비율(%) ***순위 변화(2023년 대비)

● 2023 ● 2024



10년 후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는?

미래의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문제 10대 테마 Top3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1순위 상승)'입니다. 1순위인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테마에서는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15.8%)' 이슈를 선택한 비율이 낮아지고(▼2.4%p),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16.3%)' 이슈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져(▲3.2%p) 서로의 순위가 변동된 모습입니다. 미래에는 집값 문제보다 침체된 경기와 원활하지 못한 자금 흐름이 삶의 어려움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인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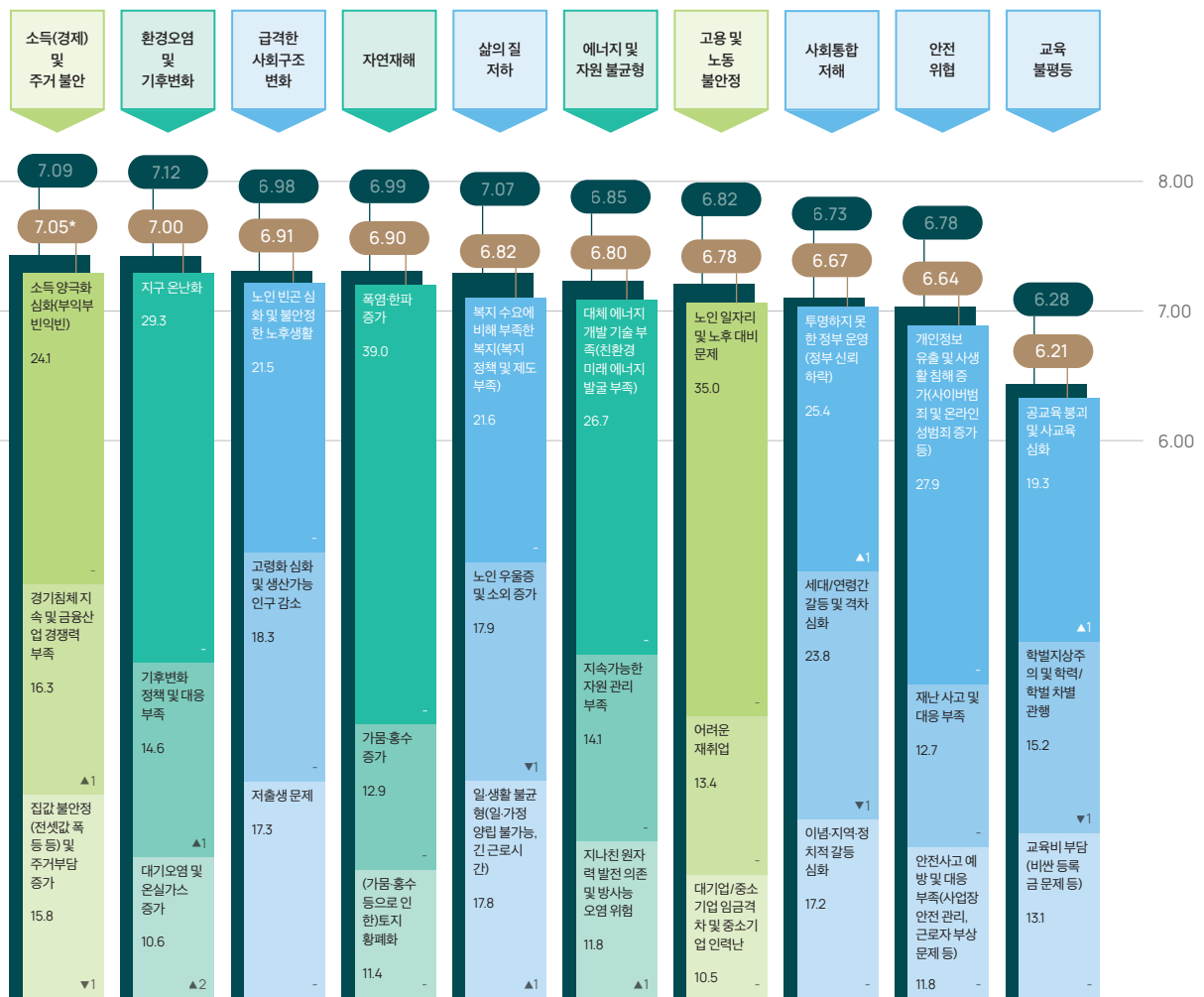
작년 4계단의 상승폭을 보이며 5위로 올라섰던 고용 및 노동 불안정 테마는 다시 7위로 하락하여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35.0%)' 이슈를 선택한 비율은 작년보다 2.7%p 증가해 전체 이슈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사회통합 저해 테마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은 7위로 평가되며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력 기준 순위(3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환경 영역의 자연재해(현재 6위, 미래 4위),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현재 9위, 미래 6위) 문제를 현재보다 미래의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역과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테마처럼 미디어 상의 가시성과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문제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우려감이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래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사회문제별 Top 3)

*테마 영향력(점) **1순위로 꼽힌 비율(%) ***순위 변화(2023년 대비)

● 2023 ● 2024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현재와 미래, 나의 삶에 중요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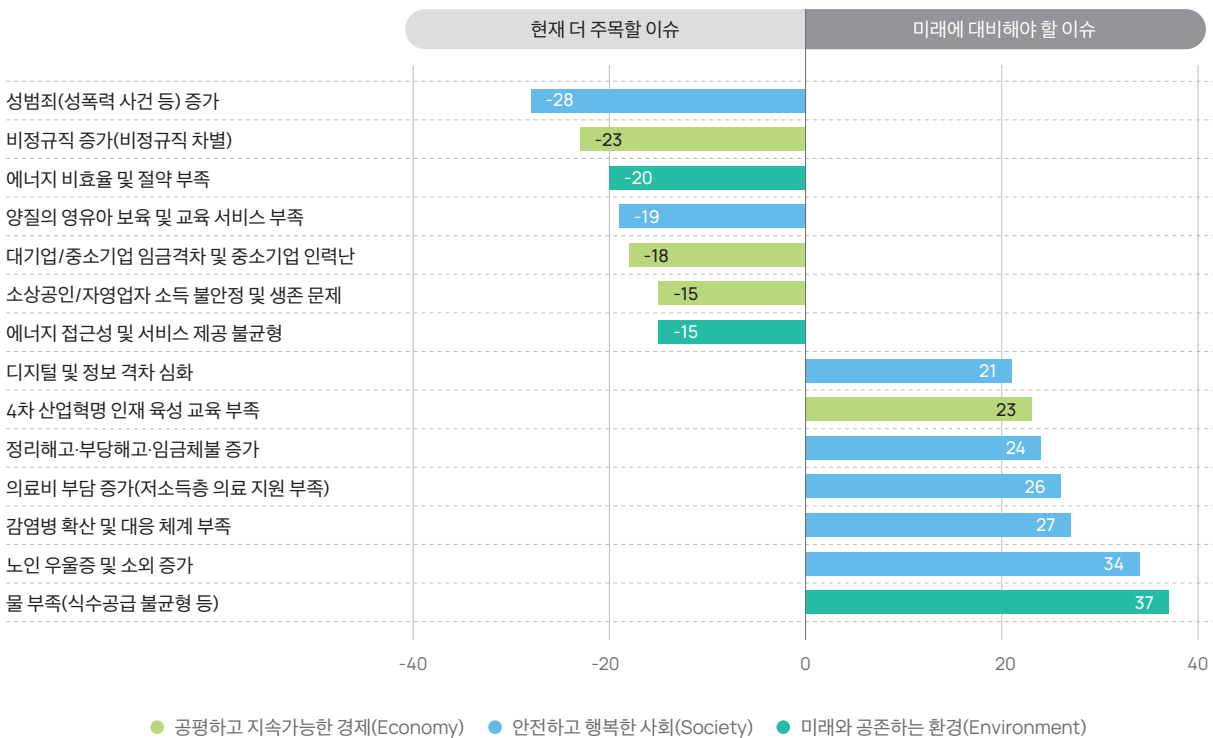
현재와 미래 영향력의 격차가 큰 이슈들은 시급성과 불명확성과 연관이 깊습니다. 미래보다 현재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 이슈들은 시급성이 높아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보다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이슈들은 투명한 소통을 통해 불안감을 완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28점, 작년 ↔24점) 문제를 작년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고, 가해자 3명 중 1명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 SNS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들은 경제 구조 내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23점)',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18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15점)'가 심각한 모습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20점)',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15점)' 등의 문제가 현재 더 주목해야 하는 이슈로 평가되면서, 에너지 공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현재 vs 미래 더 중요한 이슈

단위: 점(미래 영향력에서 현재 영향력을 뺀 값)



미래의 '물 부족(↔37점, 작년과 동일)' 문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이 작년에 이어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래 자원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고려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화와 관련된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34점)',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27점)', '의료비 부담 증가(↔26점)' 문제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령자 맞춤형 의로서비스 체계의 확립 등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대응책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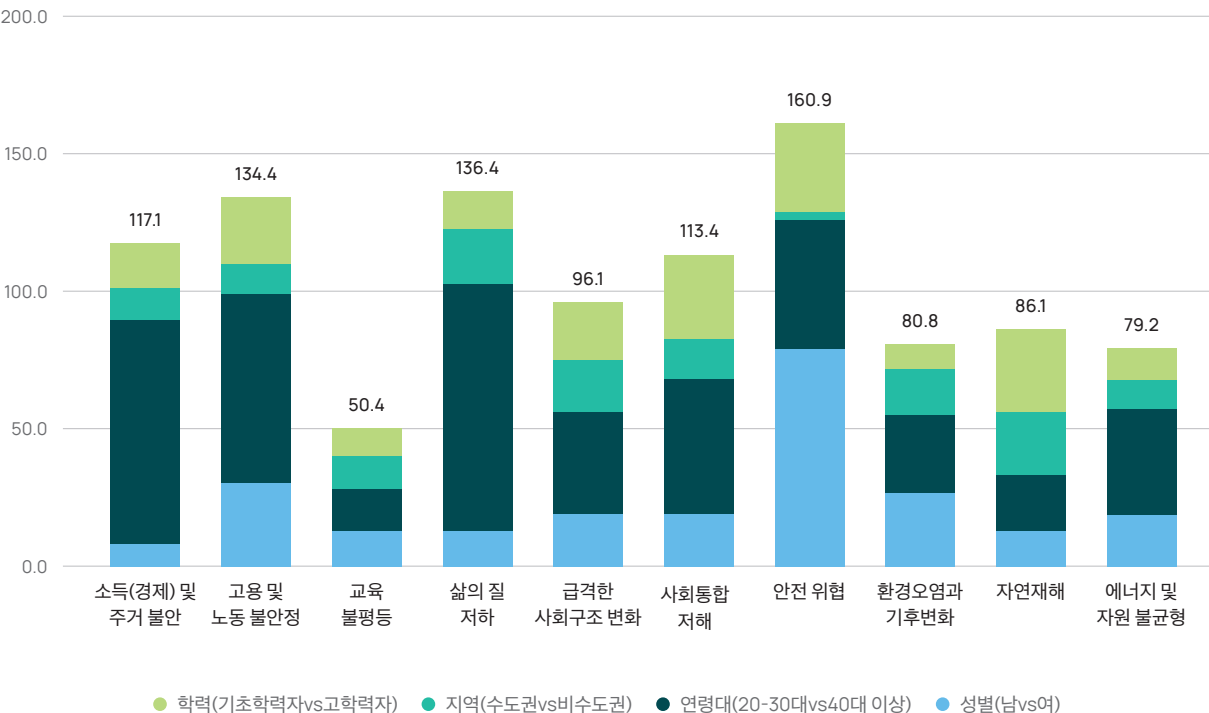
AI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23점)' 이슈는 미래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와 자동화로 인한 인력구조 변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21점)', '정리하고 부당하고 임금체불 증가(↔24점)'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mpact Awareness Gap : 사회문제 인식 격차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작년에 이어 국민들의 연령, 성별, 지역, 학력 등 인구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문제 인식 격차를 살펴봤습니다.

연령, 성별, 학력, 지역에 따른 사회문제 인식 격차

단위: 불일치도(Gap)*



*불일치도(Gap): '연령', '성별', '학력', '지역'에 따라 계산된 카이자승(χ^2) 값의 합계. 각 테마에 속한 10개 사회이슈의 부정적 순위를 나열하는 질문에, '연령', '성별', '학력', '지역'에 따라 응답이 서로 달라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문제 10개 테마의 불일치도는 총 1,054점으로 작년 1,158점에 비해 100점 가량 하락했습니다. 성별(22점 감소), 연령대별(101점 감소), 지역별(17점 감소) 인식 격차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반면 학력별 인식 격차는 40점 가량 높아져 교육 수준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 문제를 더 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인구 특성에 따른 인식 격차는 '안전 위협' 테마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작년 대두한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와 같은 이슈에서 여성들의 우려심이 높아지면서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삶의 질 저하',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에 대한 인식 격차가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이슈에 대해서는 20-30대와 40대간 연령 격차가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한편, 교육 불평등 문제는 불일치도가 30점 가량 낮아져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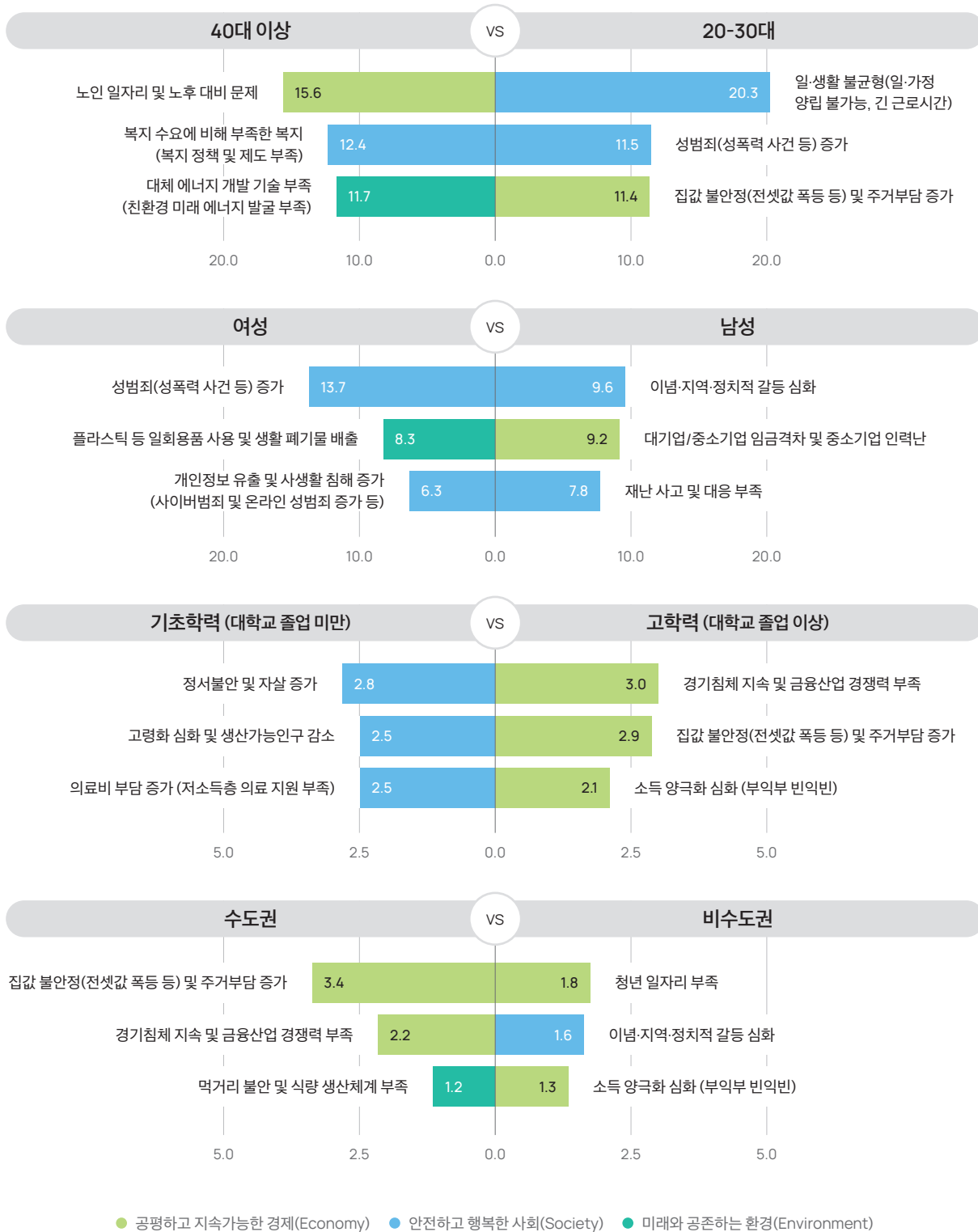
한편 환경 영역의 문제들은 경제 및 사회 테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이슈에서 지역별(수도권vs비수도권) 격차가 뚜렷한 만큼,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슈별 인식 격차와 영향력

연령, 성별, 학력, 지역 등 인구 특성별로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난 사회문제를 분석한 결과, 특히 연령에 따른 편차가 큰 모습입니다. 이는 사회문제별 1순위 선택 비율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이슈 Top10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령, 성별, 학력, 지역별 사회문제 인식 격차

단위: %p(테마별 1순위 선택 비율의 특성별 차이)



연령대(20-30대vs 40대 이상)에 따른 인식 격차

40대 이상이 20-30대 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슈는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15.6%p)’로, 작년(▲14.9%p)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진 모습입니다.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12.4%p)’에 대한 격차가 작년에 비해 2.8%p 감소하여 복지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진 모습입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11.7%p)’에 대한 고민도 40대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20-30대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슈들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40대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1순위 이슈는 ‘일·생활 불균형(▲20.3%p)’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격차가 작년(▲16.4%p)보다 높아져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11.5%p)’,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11.4%p)’ 이슈가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남성 vs 여성)에 따른 인식 격차

성별에 따른 사회문제 인식 격차가 가장 큰 영역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입니다. 여성들은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13.7%p)’,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6.3%p)’로 인해 남성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8.3%p)’도 남성보다 더 고민하는 이슈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9.6%p)’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9.2%p)’,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7.8%p)’이 뒤를 이어 나타나 여성보다 기업 경제, 근로 환경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수도권 vs 비수도권), 학력(기초학력 vs 고학력)에 따른 인식 격차

지역과 학력에 따른 사회문제 인식 격차(평균 2.3%p)는 작년(평균 6.7%p)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슈는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으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각 ▲3.4%p, ▲2.2%p), 학력이 높은 사람들(각 ▲2.9%p, ▲3.0%p)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Korea Social Problem & Difficulty Level

문제 해결 난이도 :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해결 수준이 가장 낮은 문제(92점)는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저출생 문제',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해수면 상승', '토지 황폐화',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입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과 '토지 황폐화' 등 새로운 환경 이슈가 올해 처음 OECD 국가 대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 수준: 문제 해결 난이도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92		토지 황폐화 92		해수면 상승 92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92		저출생 문제 92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92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92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92							
비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차별) 89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87		취약계층 사회 안정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87		유실·유기동물 안전 부족 86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84		어려운 재취업 84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3		아동학대 82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중소기업 인력난 81					
에너지 효율 및 절약 부족 78		대기오염 및 온실 가스 증가 78		가정폭력 78		대기업 불공정거래(갑질 기업) 77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차별 76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소상공인 생존 문제 75		가계부채 증가 74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73		학교 밖 청소년(가출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 부족 72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71		성별격차 및 성차별 70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69		태풍 증가(태풍으로 인한 피해) 68		고등교육의 질 저하 67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66		교육비 부담 (비싼 등록금 문제 등) 65		폭설과 폭우 증가 (폭설과 폭우로 인한 피해) 63		청년 일자리 부족 63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62		물 순환개선 및 재이용 부족 61		만연한 특권과 편법 60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59		고용률 하락 58		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57		노사갈등 심화 56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55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 체불 증가 54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53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52		지진과 쓰나미 증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 51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50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부족 49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48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47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46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44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44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43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42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 지원 부족 40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40			
전력수급 불안정 36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36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36		취약계층 소득 불안정(서민 금융 지원 부족) 36		지역발전 불균형 35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33		구인 및 인력난 33		양질의 교육 부족 31		가뭄·홍수 증가(가뭄·홍수로 인한 피해) 30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29		대형산불 증가 28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27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26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24		폭염·한파 증가(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24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23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22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 21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19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사회시스템 부족 19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편견 및 차별 18		정부 재정 적자 확대 (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17		취약계층 주거 부담 (지원 부족) 16		지구 온난화 15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14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13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12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11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등) 10		산사태 증가 9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8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7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6		교육 수혜 격차 심화(초·기유학 증가 등) 5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4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3		학교폭력 2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1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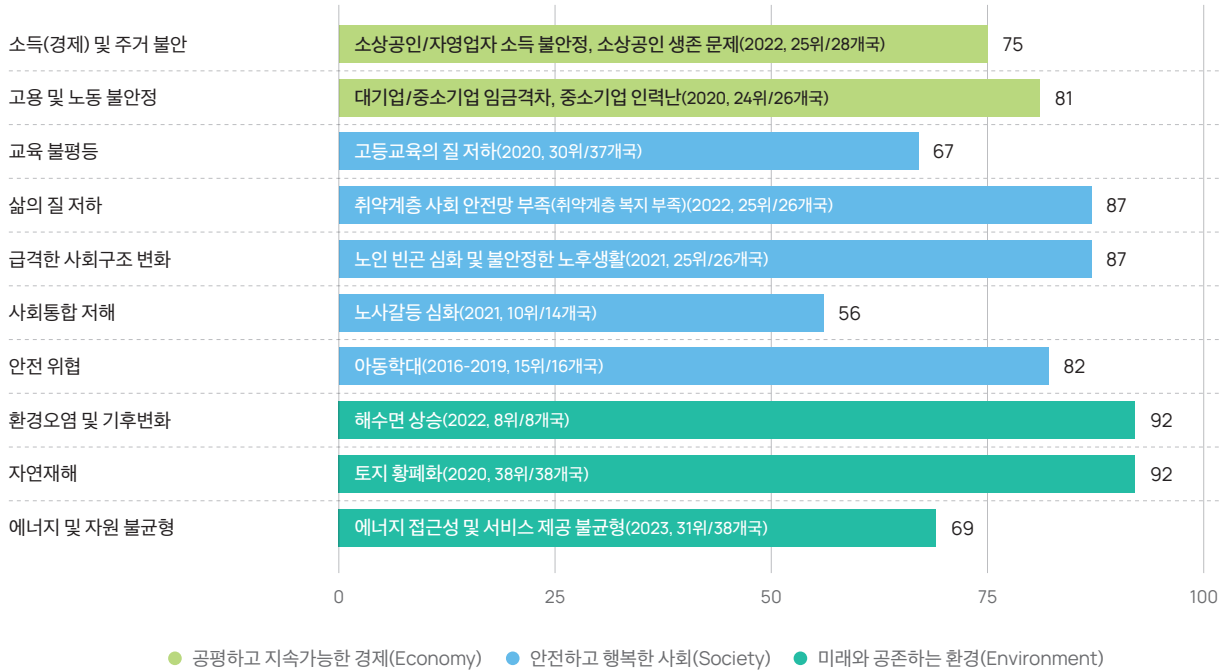
Note '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선정된 100대 이슈 중 한국에서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외한 98개 이슈를 바탕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순위를 '문제 해결 난이도(100점 만점)'로 환산해 도출한 값이다. 문제 해결 난이도는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최신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OECD 국가별 순위를 분석했다. 이슈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한 OECD 국가 수는 차이가 있으며,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난도가 높아진다.

Issue Tracking 테마별 한국의 주요 이슈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은 어떠할까요. '2024 한국이 주목하는 100개 사회이슈' 중에서 문제 해결 난도가 높은 한국의 데이터를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살펴봤습니다.

2024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심각성

단위: 점(난이도)



Note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OECD 주요국 대비 한국 순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국제 대비 심각성 수준을 나타낸 값이다. OECD 주요국 대비 순위가 낮을수록 심각성 점수가 높게 계산된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소상공인 생존 문제

취약계층 복지 수준이 악화됐습니다. OECD 26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을 비교한 결과, 한국(14.8%)이 아일랜드(12.8%)에 이어 두번째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2022년 기준). 이는 상위권 국가인 프랑스(31.6%), 이탈리아(30.1%)와 2배 넘는 차이입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중소기업 인력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1인당 보수 격차는 1.78배로 OECD 26개국 중 24위입니다(2020 제조업 기준). 이는 2018년(1.54배)보다 더 차이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한국보다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그리스(1.82배)와 튀르키예(1.87배) 뿐입니다.

교육 불평등

고등교육의 질 저하

교육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대비 0.67%로 OECD 37개국 중 30위(2020년 기준)이며, 1위 국가인 노르웨이(1.82%)와 2.7배 차이입니다.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민간에서 부담하는 총 교육비도 OECD 35개국 중 28위(2020년 기준)로 하위권을 차지해,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삶의 질 저하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취약계층 복지 수준이 악화됐습니다. OECD 26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을 비교한 결과, 한국(14.8%)이 아일랜드(12.8%)에 이어 두번째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2022년 기준). 이는 상위권 국가인 프랑스(31.6%), 이탈리아(30.1%)와 2배 넘는 차이입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3%로 OECD 26개국 중 25위입니다(2021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누리는 66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한국은 OECD 평균(14.8%)보다 24.5%p 높고, 1위 국가인 노르웨이(3.8%)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회통합 저해

노사갈등 심화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63%가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파업과 직장폐쇄 건수는 141건(2021년 기준, 10위/14개국)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6건 늘었습니다.

안전 위협

아동학대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 아동 10만 명당 501.9건으로 전년대비 100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2022년 384.7건으로 줄었지만, 4년 전(2018년)과 비교해 83.5건 많은 수치입니다. 국가별 비교가능한 데이터인 아동의 주거 안전감(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8, 10, 12세 아이들의 비율)을 보면 OECD 16개국 중 15위(2016-2019년 기준)로 최하위권입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960~2022년 연간 해수면 상승폭은 평균 2.52mm로 OECD 8개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1위 국가인 노르웨이는 같은 기간 해수면이 평균 0.72mm 낮아졌고, 7위 국가인 일본은 2.22mm 상승했습니다.

자연재해

토지 황폐화

한국의 토지 손실 비율은 측정 시작 연도인 2005년부터 OECD 38개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기준 11.9%로 OECD 평균(2.3%)의 5배가 넘고, 37위인 이스라엘(8.6%)과도 3.3%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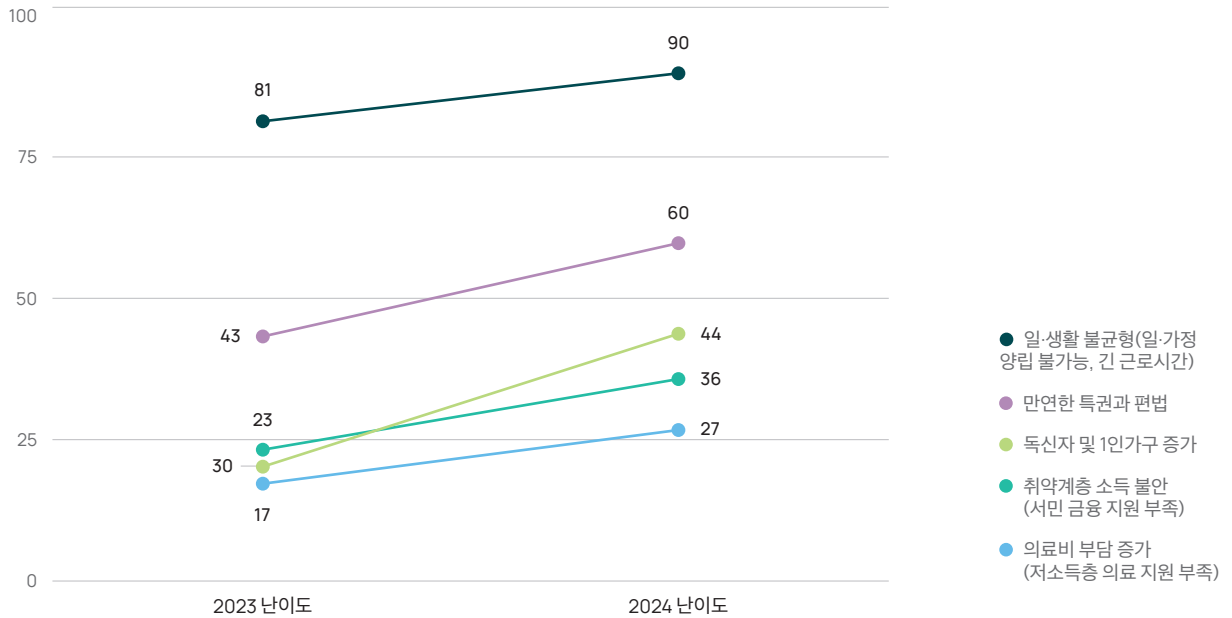
세계에너지총회(WEC)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는 73.1로 OECD 38개국 중 31위입니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세계 각국 에너지 시스템의 건전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새로 발표됩니다. 한국은 2021년 OECD 38개국 중 33위, 2022년 OECD 38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심각성 급등 이슈 Top5

지난해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진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OECD 주요국 대비 문제 해결 난도가 높아진 5개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2023-2024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증가 Top5

단위: 점(난이도)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난이도 상승폭이 가장 큼니다. 한국의 1인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29%로 OECD 24개국 중 7위였지만, 2020년 기준 31.7%로 14개국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두번째로 급등한 문제는 ‘만연한 특권과 편법’입니다. 한국의 정부 권한에 대한 제약 지수는 2023년 기준 OECD 35개국 중 26위(0.70)로 2020년(0.74, 18위/30개국)에 비해 해결하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 소득 불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빈곤율 변화는 2019-2020년 기준 OECD 26개국 중 8위(6.13%p 감소)에서 2020-2021년 기준 OECD 26개국 중 13위(1.31%p 감소)로 심각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021년 기준 OECD 20개국 중 5위(8.8%)였지만, 2022년 기준 OECD 38개국 중 16위(9.7%)로 하락했습니다. 높은 근로시간 문제 또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년 기준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높았던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1,910시간)은 2022년 1,901시간으로 줄었지만 OECD 35개국 중 2위로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만성 이슈 Top10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지난 5년간 심각도가 꾸준히 높았던 만성 이슈 10개를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10대 사회문제 테마 중 삶의 질 저하 테마에서 2개 이슈(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의 해결 난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저출생 문제)와 성별 격차 및 성차별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도 한국의 고질적인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 기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5개년 2020-2024 OECD 주요국 대비 심각한 문제 Top10 단위: 점(난이도)
● 해당 연도 OECD 주요국 대비 가장 심각한 수준

순위	분류	이슈	2020	2021	2022	2023	2024
1	삶의 질 저하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87	87	92	93	92
2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저출생 문제	87	87	92	93	92
3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87	87	92	93	92
4	삶의 질 저하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83	87	92	93	92
5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84	77	91	93	92
6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66	74	90	91	89
7	안전 위협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76	72	78	92	90
8	사회통합 저해	성별격차 및 성차별	87	87	92	70	70
9	교육 불평등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71	77	86	86	83
10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78	80	82	82	77

Note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OECD 주요국 대비 한국 순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국제 대비 심각성 수준을 나타낸 값이다. OECD 주요국 대비 순위가 낮을수록 심각성 점수가 높게 계산된다.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한국의 50세 이상 사회적 지지도(어려움이 닦쳤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는 2010년부터 유일하게 60%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유지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50세 이상 사회적 지지도는 63.8%로, 두번째로 낮은 그리스(75.3%)와 비교해도 11.5%p 차이를 보입니다.

저출생 문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 기준)으로 매분기 최저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OECD 평균(2022년 기준 1.51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2.1%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입니다(2021년 기준). 1992년부터 OECD 평균과 5~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최하위를 유지했습니다. 5년간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테마 내 10개 이슈 중 가장 심각한 이슈입니다.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고령층의 고립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4.1명(2020년 기준)으로 OECD 17개국 중 가장 많습니다. 이는 1위 국가인 이스라엘(5.7명)과 4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최근 2년(2023-2024)간 OECD 35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은 OECD 34개국 중 호주, 캐나다, 미국에 이어 4번째, 2022년은 OECD 35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지수를 나타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차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7.3%로 OECD 34개국 중 2번째로 높습니다(2022년 기준). 이는 OECD 평균(11.3%)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고용 및 노동 불안정' 테마에서 최근 3년(2022-2024)간 가장 해결 난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OECD 통계 집계 이래 20%를 넘기지 않은 적이 없어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남북관계 갈등은 최근 2년(2023-2024)간 '안전 위협' 테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한국의 정부 지출 대비 군비 지출은 10.6%로 OECD 35개국 중 34위입니다(2022년 기준). 한국보다 정부 지출 대비 군비 지출이 많은 국가는 이스라엘(12.2%)뿐입니다.

성별 격차 및 성차별

2023년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19.8로 OECD 36개국 중 30위입니다. 상위권 국가인 노르웨이(6.7), 벨기에(7.4), 스웨덴(8.8)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과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의 가계 사교육비 지출을 비교한 결과, 2018년과 2019년은 OECD 35개국 중 33위, 2020년은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근 5년간 '교육 불평등' 테마에서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갑질 기업)

한국의 시장 독과점 수준(Extent of Market dominance)은 42.8(2019년 기준, 34위/37개국)로, 최하위 국가인 헝가리(38)와 비등한 수준입니다. 지난 5년간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테마에서 심각성이 가장 높은 문제로 꼽혔습니다.

Collective Impact

협력을 통한 사회 변화

Collaboration for Social Issue :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

국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 유형을 들여다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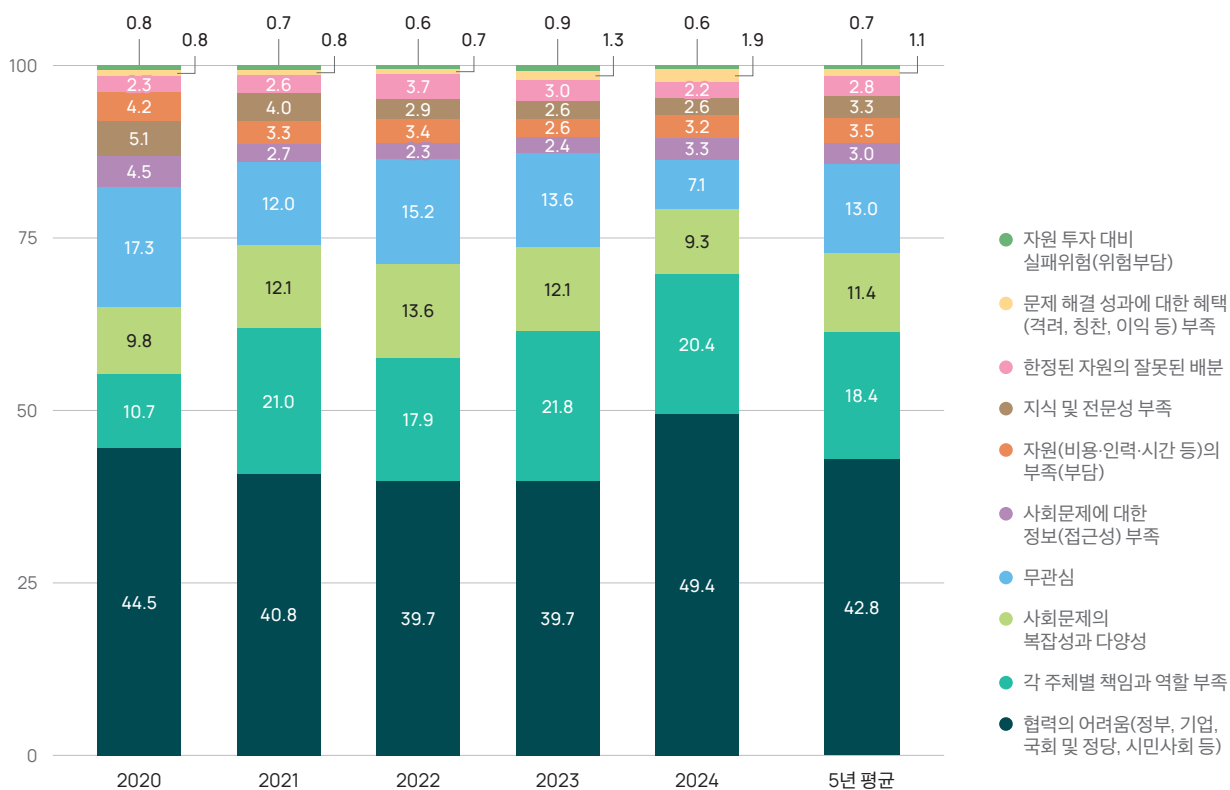
문제 해결 주체간 협력과 지속적인 동기 부여 필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5년 연속 1순위로 꼽힌 응답은 '정부, 기업, 국회 및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의 어려움(49.4%)'입니다. 2020년(44.5%)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전년 대비 9.7%p 상승해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각 주체별 책임과 역할 부족(20.4%)'은 지난해에 비해 1.4%p 감소했지만, 2020년(10.7%)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5년 평균 증가율 18%) 여전히 국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로 높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5년간 증가폭이 가장 큰 응답은 '격려, 칭찬, 이익 등 문제 해결 성과에 대한 혜택 부족(5년 평균 증가율 24%)'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중의 무관심(5년 평균 증가율 -20%)'을 사회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인식하는 비율은 2022년 소폭 상승 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5개년 2020-2024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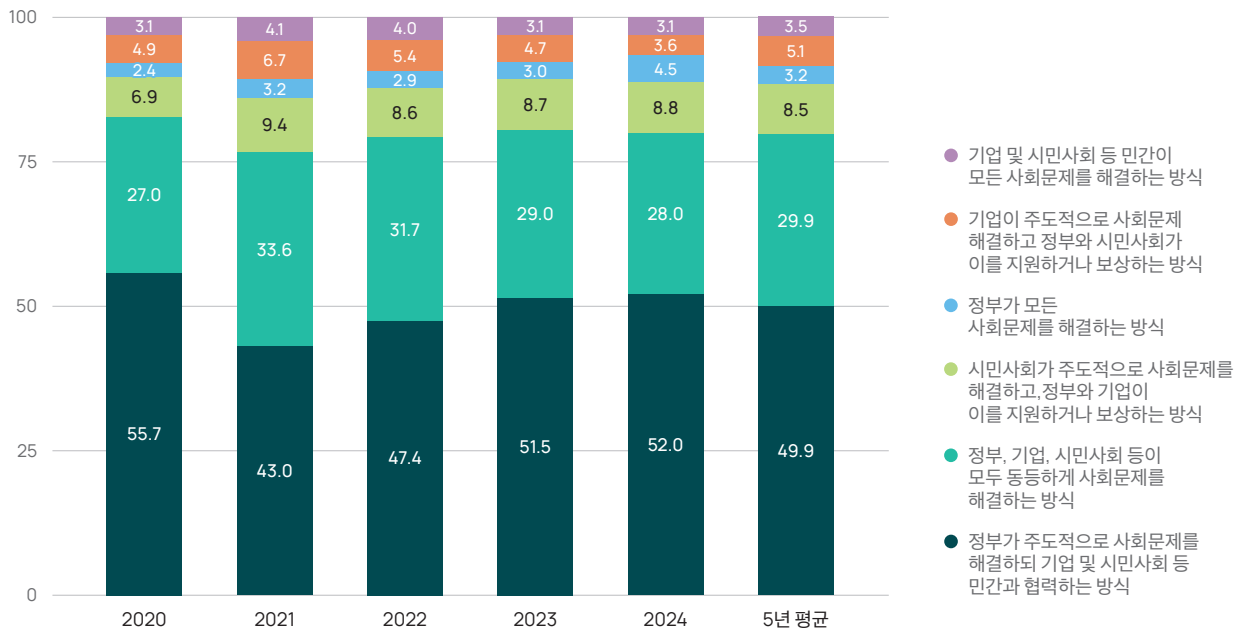


정부가 주도해 협력을 이끌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시민사회의 관심을 유도해야

그렇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주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국민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되,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52%)’,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모두 동등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28%)’,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방식(8.8%)’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는 5년 연속 상위 3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원 및 보상하는 방식(3.6%)’은 2021년(6.7%)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5개년 2020-2024 사회문제 해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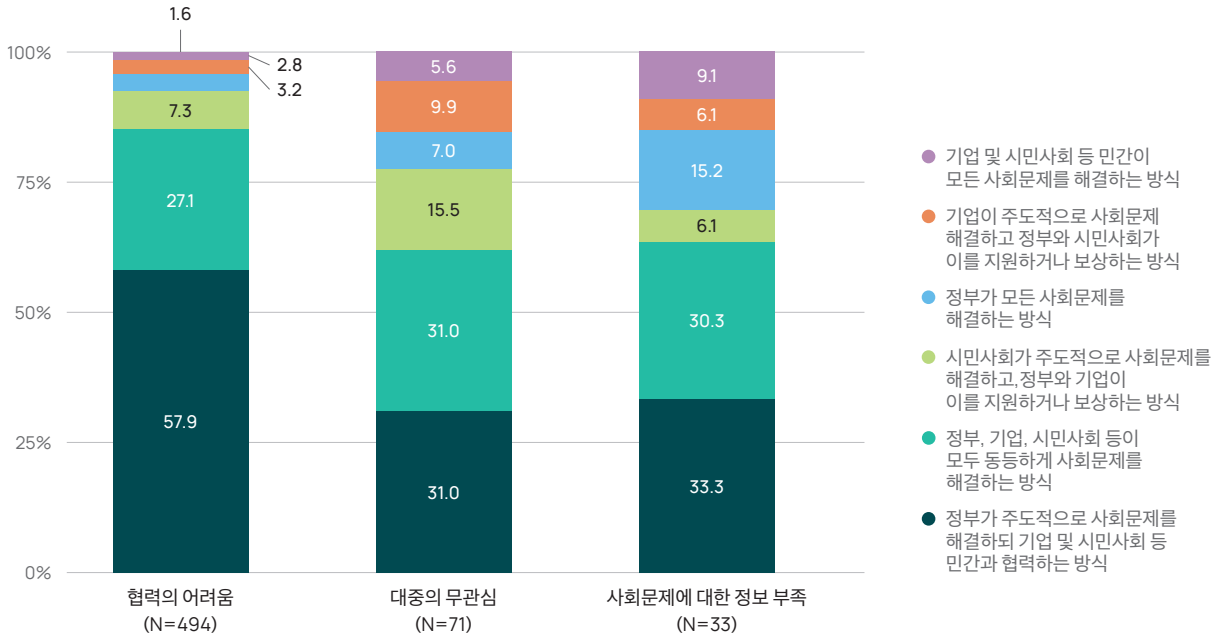
단위: %(선택 비율)



문제 해결 장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주체별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주체간 협력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주도하여 기업과 시민사회와 협력을 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57.9%). 또한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정보 부족’이 사회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에서 15.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의 열린 소통을 통한 민간협력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무관심’이 사회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라고 답한 국민들은 ‘시민사회’와 ‘기업’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각 15.5%, 9.9%). 해결이 시급한 사회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와 문제해결 방식

단위: %(선택 비율)



사회문제, 누구 책임일까

사회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민들은 사회문제 10개 테마 모두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27명)', '고용 및 노동 불안정(▲20명)',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11명)', '사회통합 저해(▲24명)' 4개 테마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증가해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지난해와 비교해 '자연재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국민의 숫자(▼40명)가 크게 줄고, '국제기구(▲26명)'의 책임이 많다는 응답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삶의 질 저하(▲31명)', '교육 불평등(▲17명)',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16명)',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14명)' 문제에 대해 개개인의 책임을 말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각자가 경쟁과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사회문제 책임 주체

0 673

분류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 단체	미디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국제기구	외국 (타 국가)	개개인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673	210	10	13	18	7	5	7	57
고용 및 노동 불안정	552	176	171	17	9	17	8	7	43
교육 불평등	614	168	25	14	21	16	6	5	131
삶의 질 저하	605	201	9	13	33	14	9	7	109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599	169	18	19	40	16	6	4	129
사회통합 저해	442	293	25	30	80	11	6	10	103
안전 위협	616	151	20	21	35	10	19	21	107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294	66	140	23	9	24	117	56	271
자연재해	320	55	84	15	14	25	163	78	246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548	80	83	10	11	34	102	53	79

사회문제, 누가 해결해야 할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주체가 사회문제를 잘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5년 연속 사회문제 테마 10개 모두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사회통합 저해(▲37명)', '삶의 질 저하(▲29명)', '고용 및 노동 불안정(▲17명)'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길 바라는 국민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국회 및 정당(▲75명), 개개인(▲106명)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13명)', '사회통합 저해(▲10명)'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개개인을 꼽은 국민이 늘면서 올해 처음 3순위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사회통합 저해' 문제의 해결 주체 3순위로 꼽힌 시민사회단체가 줄어든 대신(▼31명),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한편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주체로 기업을 꼽은 국민은 2022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2022년 대비 ▼54명). 대신 개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지난해 대비 ▲31명)하면서 정부, 국제기구에 이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3대 주체로 4년간 꼽혔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주체

0  658

분류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 단체	미디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국제기구	외국 (타 국가)	개개인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658	169	41	19	12	26	8	11	56
고용 및 노동 불안정	501	131	251	27	10	41	9	5	25
교육 불평등	612	155	26	46	20	42	6	2	91
삶의 질 저하	610	147	26	67	26	25	12	5	82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574	173	23	53	33	32	10	6	96
사회통합 저해	449	203	39	84	70	28	13	8	106
안전 위협	623	121	21	43	32	15	47	25	73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288	63	79	81	25	39	208	34	183
자연재해	394	56	36	47	19	33	236	44	135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482	85	89	34	11	43	142	43	71

Impact Action Analysis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행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액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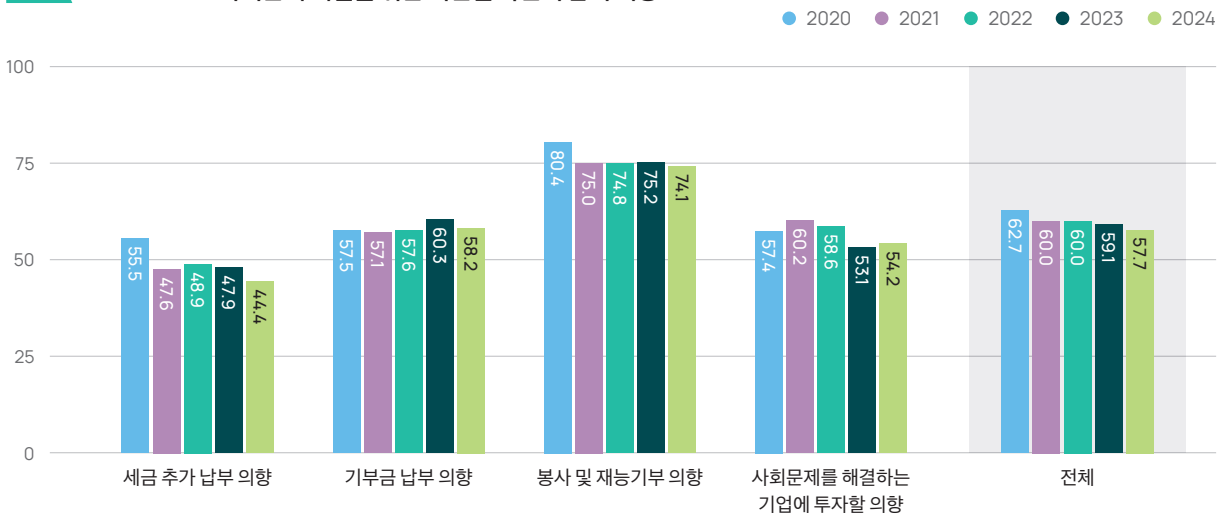
국민의 문제 해결 의지 5년 연속 하락세

국민의 57.7%가 돈과 시간을 들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62.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20대의 문제 해결 의지는 48.3%p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으며, 올해 처음 절반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와 비교해 의향이 가장 줄어든 행동은 '세금 추가 납부(2020년 대비 ▼11.1%p)'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문제 해결 의지가 가장 많이 하락한 연령대는 30대(▼5.2%p)로 특히 '기부(▼10.4%p)'와 '세금 추가 납부(▼8.4%p)' 의향이 크게 줄었습니다. 문제 해결 의지가 유일하게 상승한 연령대는 40대(▲2%p)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8.7%p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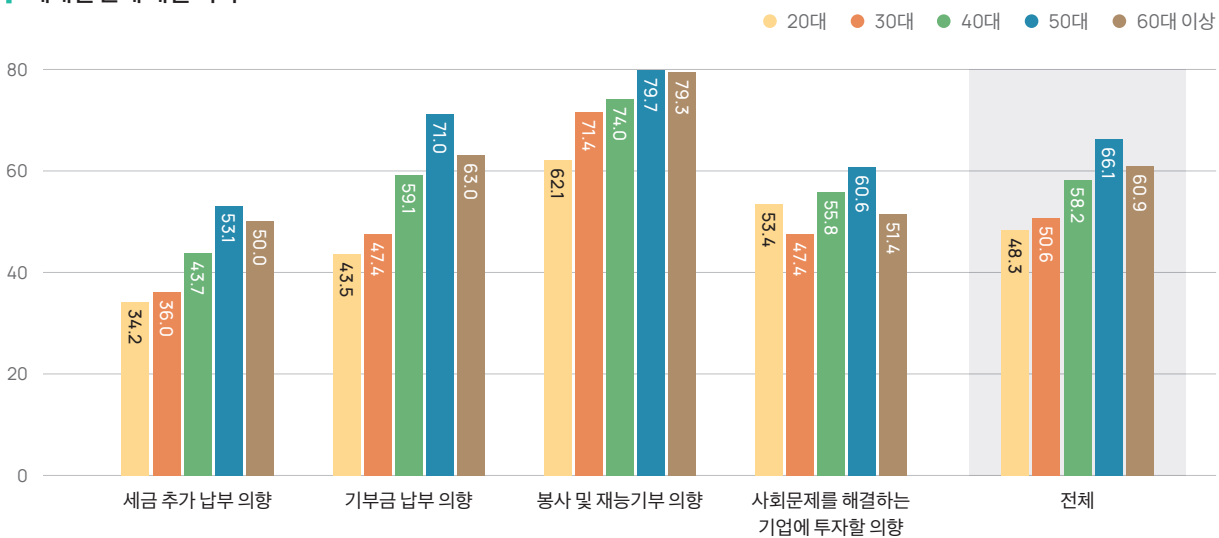
5개년 2020-202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별 국민의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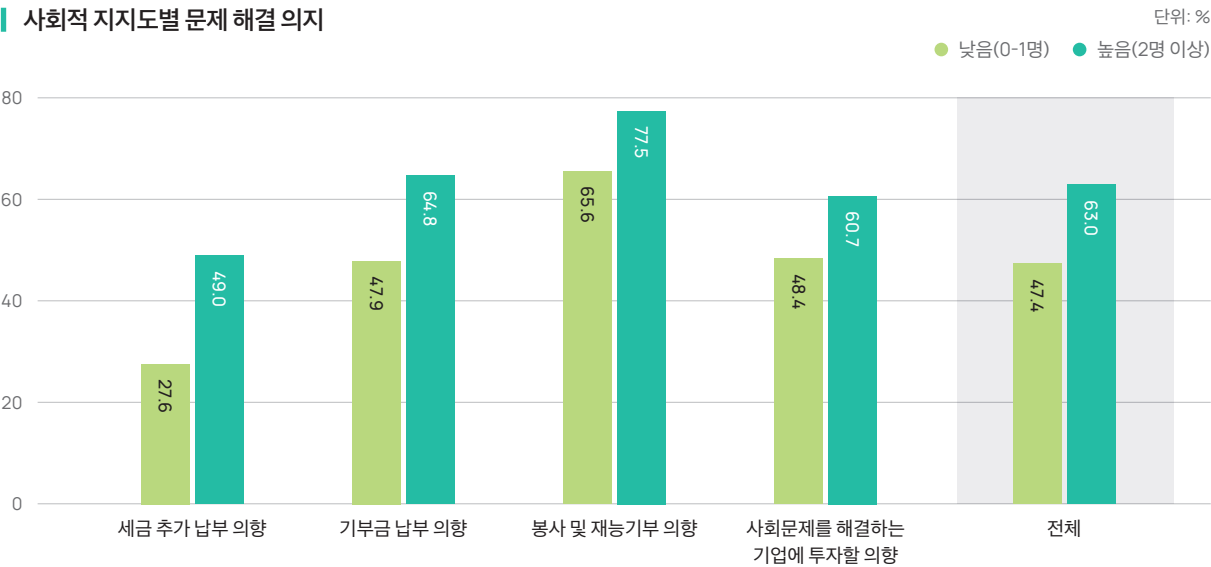
세대별 문제 해결 의지

단위: %



사회적 지지도(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울 때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른 문제 해결 의지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0-1명, 47.4%) 그룹보다 높은(2명 이상, 63%) 그룹이 15.6%p 더 많았습니다. 특히 세금 추가 납부 의향은 21.5%p 차이입니다.

사회적 지지도별 문제 해결 의지



국민들이 추가로 낼 수 있는 비용도 줄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월평균 증세 비율은 2020년 22%에서 올해 9.1%로 크게 감소(▼12.9%p)했고, 봉사 및 재능기부 시간은 2020년(9시간 30분) 대비 1시간 37분 줄어 들었습니다. 추가로 낼 수 있는 기부금은 지난해 8만 9,100원에서 올해 11만 2,220원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13만 1,998원)보다 1만 9,778원 적은 금액입니다.

5개년 2020-202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할애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금 납부	21.98 %	11.09 %	11.74 %	10.50 %	9.10 %
기부	13만 1,998원	14만 7,300원	18만 7,700원	8만 9,100원	11만 2,220원
봉사 및 재능기부	9시간 30분	9시간 20분	8시간 42분	7시간 52분	7시간 53분

국민에게 100조원이 있다면

그렇다면 실제 국민은 어떤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할까요. 국민 1,000명에게 100조원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자 어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얼마큼 편성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5년 연속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5년 평균 19.2%)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됐으며, 고용 및 노동 불안정(15%),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10.6%)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년 전(2020년)에 비해 국민이 편성한 예산이 가장 늘어난 문제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1조 7,125억원),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1조 6,170억원), 자연재해(▲1조 1,295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반면 예산 편성이 가장 많이 줄어든 문제는 고용 및 노동 불안정(13조 6,120억원)으로, 2020년(16조 6,910억원)과 비교해 3조 790억원 감소했습니다.

5개년 2020-2024 국민이 바라는 문제 해결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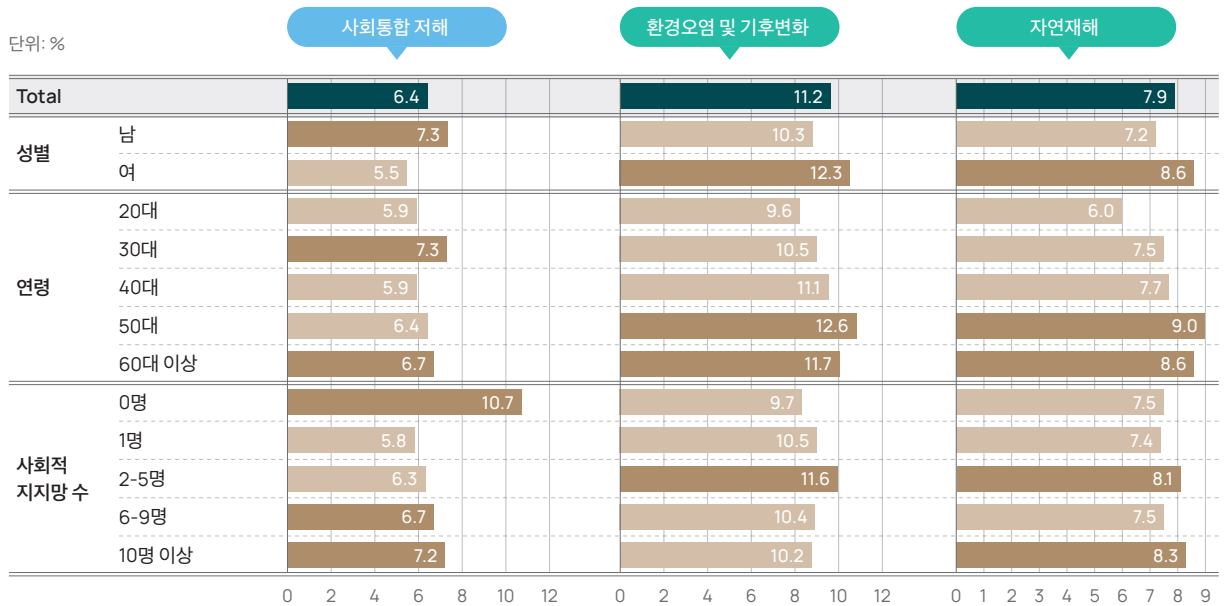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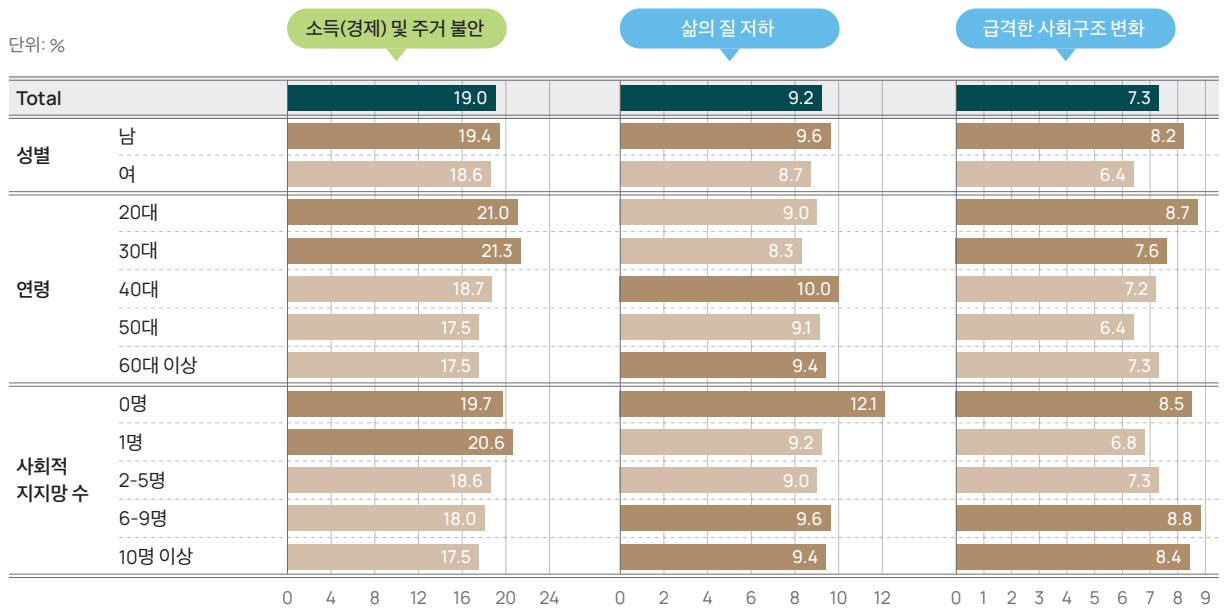
*예산 ** (전년 대비 변화)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9조 1,960억원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20조 2,190억원 (▲1조 230억원)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8조 7,610억원 (▼1조 4,580억원)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8조 8,110억원 (▲500억원)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8조 9,940억원* (▲1,830억원)**
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6조 6,910억원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5조 9,130억원 (▼7,780억원)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3조 9,940억원 (▼1조 9,190억원)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4조 5,970억원 (▲6,030억원)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3조 6,120억원 (▼9,850억원)
3	삶의 질 저하 9조 6,390억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9조 9,850억원 (▲4,755억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11조 1,540만원 (▲1조 1,690억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11조 3,130억원 (▲1,590억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11조 2,220억원 (▼910억원)
4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9조 5,095억원	삶의 질 저하 9조 5,850억원 (▼540억원)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9조 2,040만원 (▲2조 2,140억원)	삶의 질 저하 9조 4,540억원 (▲7,150억원)	삶의 질 저하 9조 1,840억원 (▼2,700억원)
5	안전 위협 9조 405억원	교육 불평등 8조 7,740억원 (▼710억원)	안전 위협 8조 6,900만원 (▲2,240억원)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8조 4,330억원 (▼7,710억원)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8조 7,100억원 (▲2,770억원)
6	교육 불평등 8조 8,450억원	안전 위협 8조 4,660억원 (▼5,745억원)	삶의 질 저하 8조 7,390만원 (▼8,460억원)	교육 불평등 8조 2,750억원 (▼3,850억원)	안전 위협 8조 4,040억원 (▲2,130억원)
7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7조 930억원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7조 760억원 (▼120억원)	교육 불평등 8조 6,600만원 (▼1,140억원)	안전 위협 8조 1,910억원 (▼4,990억원)	교육 불평등 8조 2,160억원 (▼590억원)
8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19조 1,960억원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6조 9,900억원 (▼1,030억원)	자연재해 7조 4,940억원 (▲7,480억원)	자연재해 7조 9,560억원 (▲4,620억원)	자연재해 7조 8,830억원 (▼730억원)
9	자연재해 7조 880억원	자연재해 6조 7,460억원 (▼75억원)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6조 7,270만원 (▼3,490억원)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7조 340억원 (▲3,070억원)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7조 3,440억원 (▲3,100억원)
10	사회통합 저해 6조 1,445억원	사회통합 저해 6조 2,450억원 (▲1,005억원)	사회통합 저해 6조 5,770만원 (▲3,320억원)	사회통합 저해 5조 9,360억원 (▼6,410억원)	사회통합 저해 6조 4,310억원 (▲4,950억원)

성·연령·사회적 지지도별 우선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인구 특성별 인식 격차도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및 '사회' 문제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환경 문제에 적게 배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회통합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7조 3,282억원)은 여성(5조 4,668억원)보다 1조 8,614억 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했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에는 여성(12조 2,510억원)이 남성(10조 2,645억원)보다 1조 9,866억원 더 많이 배분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경우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문제를 상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반면, 40대는 '삶의 질 저하'를 해소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50-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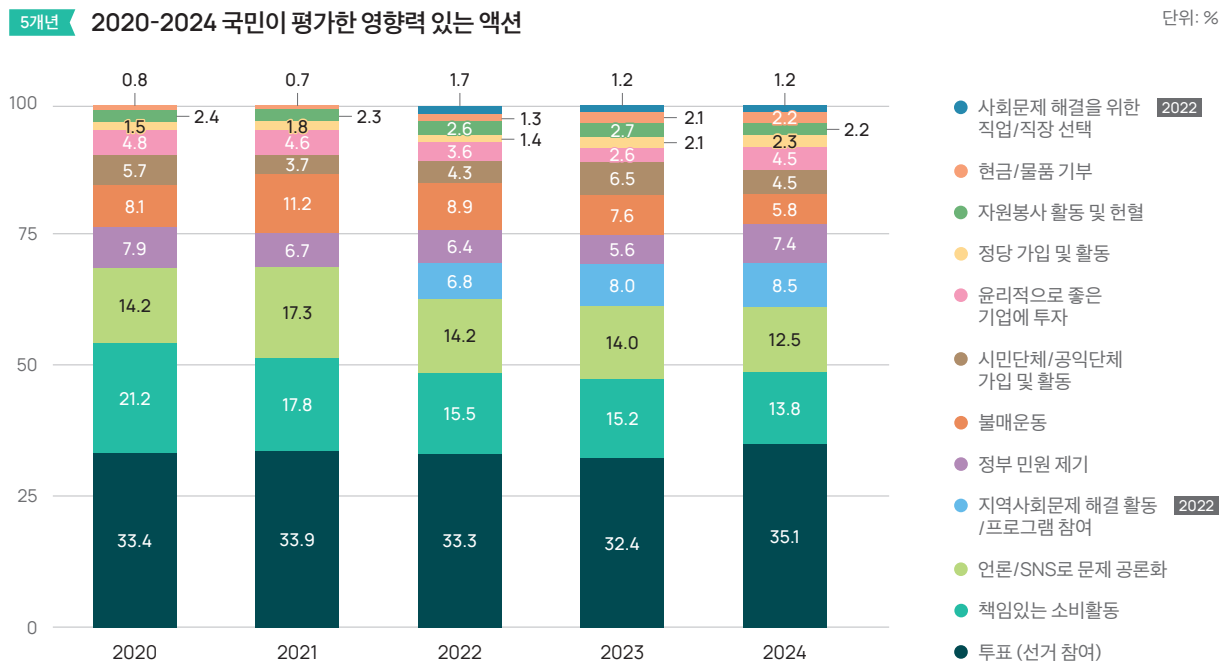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한편, 사회적 지지망(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울 때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문제에서 해결 우선순위도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지지망 수가 0~1명(평균 2조 1,753억원)인 이들은 2명 이상(평균 18조 523억원)인 이들에 비해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에 2조 1,229억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0명) 이들은 그렇지 않은(1명 이상) 이들에 비해 '사회통합 저해(4조 1,684억원 차이)'와 '삶의 질 저하(2조 8,212억원 차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돈을 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액션과 국민의 참여도

국민들이 꼽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액션 Top3는 투표(35.1%), 책임있는 소비활동(13.8%), 언론 및 SNS로 문제 공론화(12.5%)로 5년간 동일합니다. '정부 민원 제기(7.4%)'를 영향력 있는 액션으로 꼽은 비율은 지난 4년(2020-2023)간 꾸준히 하락하다가 지난해(5.6%)보다 1.8%p 증가해 '불매운동(5.8%)'과 '시민단체/공익단체 가입 및 활동(4.5%)'을 제치고 5위를 차지했습니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직장 선택' 보기 2022 추가

국민들이 지난 3년간 참여했거나 향후 1년 내 참여할 의사는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외한 모든 액션에서 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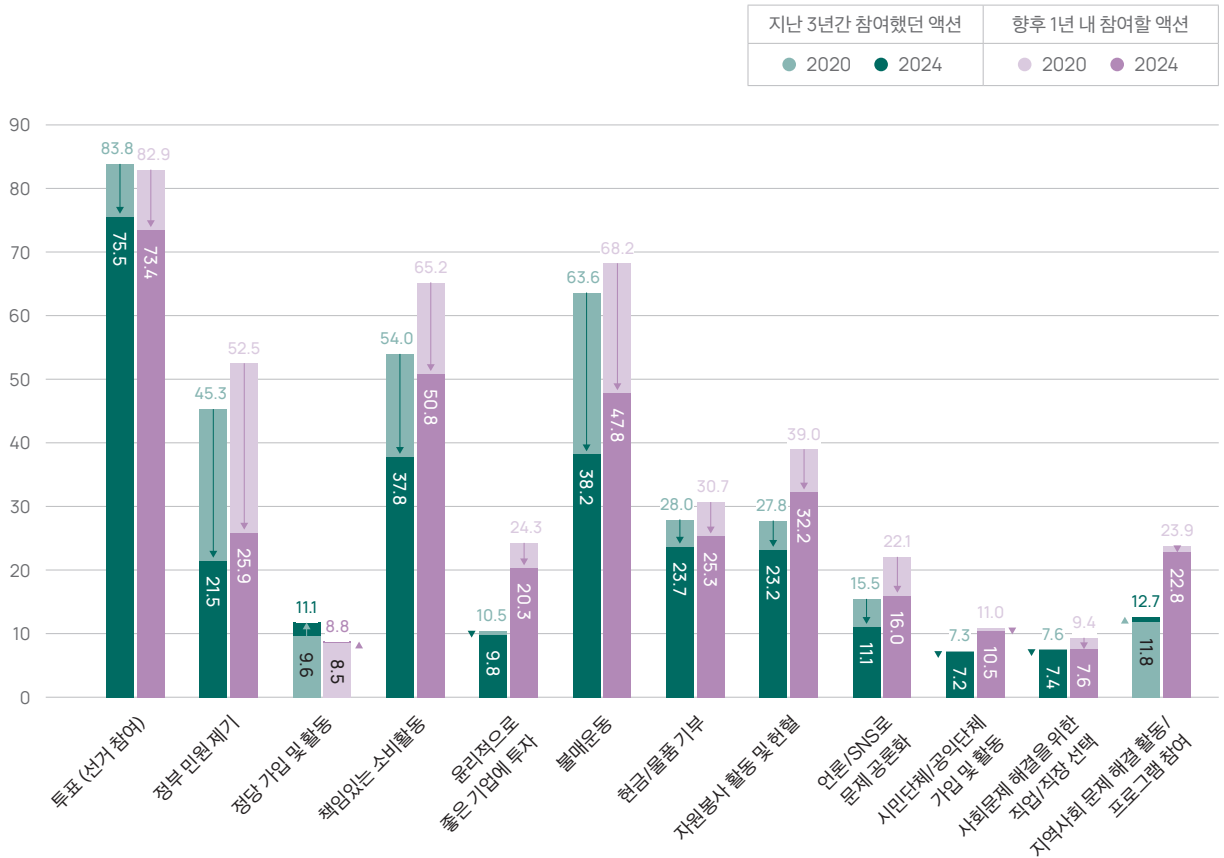
국민들은 지난 3년간 투표(75.5%, ▼8.3%p), 불매운동(38.2%, ▼25.4%p), 책임있는 소비활동(37.8%, ▼16.2%p)에 가장 많이 참여했지만, 5년 전(2020년)에 비해 비중은 줄어듭니다.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23.2%, ▼4.6%p)'과 '정부 민원 제기(21.5%, ▼23.8%p)' 경험도 5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국민들의 향후 1년 내 참여 의사가 가장 낮아진 액션은 '정부 민원 제기(2020년 대비 ▼26.6%p)', '불매운동(2020년 대비 ▼20.4%p)', '책임있는 소비 활동(2020년 대비 ▼14.4%p)'입니다. '언론/SNS로 문제 공론화(2020년 대비 ▼6.1%p)' 참여 의지도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간 활동 경험에 비해 향후 1년 내 참여 의지가 컸던 액션은 '책임있는 소비활동(13%p 차이)', '윤리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10.5%p 차이)', '불매운동(9.6%p 차이)'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도 지난 3년간의 경험(12.7%)에 비해 향후 1년 내 참여할 의지(22.8%)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 국민의 문제 해결 액션 유형(중복 응답)

단위: %



*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직장 선택' 데이터는 2022년 기준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의 액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매우 관심없다 0점~매우 관심있다 10점)'를 묻은 결과, 10점 만점에 6.89점으로 지난 해와 동일했습니다. 사회문제 관심도에 따라 문제 해결 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 수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6~10점) 사람들은 관심이 적은(0~4점) 이들에 비해 '투표(34.4%, 12.5%p 차이)'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관심도가 낮은 이들은 '책임있는 소비 활동(27.9%, 15.2%p 차이)', '정부 민원 제기(16.1%, 8.5%p 차이)'를 영향력 높은 액션으로 꼽은 비중이 높았습니다.

문제 해결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사회문제 관심도가 낮은 이들의 42%는 최근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향후 1년 내에도 활동하지 않겠다(26%)고 응답했습니다. 사회문제 관심도가 높은 국민(26.5%)은 그렇지 않은 국민(10.1%)보다 최근 3년간 문제 해결 액션에 참여한 경험이 16.4%p 높았습니다. 또한 향후 1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의향은 관심도 높은 국민 32.1%, 관심도 낮은 국민 14.7%로 17.4%p 차이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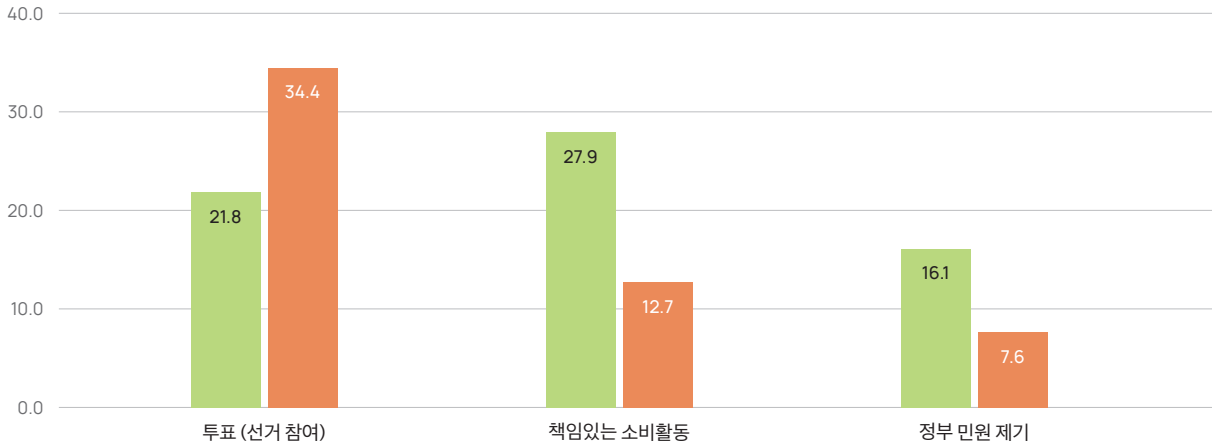
특히 최근 3년 내 '불매운동'과 '책임있는 소비 활동'에 참여하거나(각 24.1%p, 24.9%p 차이), 향후 1년 내 참여할 의향(각 34.6%p, 22.3%p 차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그룹 모두 최근 3년간 투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참여율은 약 1.7배 차이입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적은 국민은 '정부 민원 제기'에 최근 3년간 참여한 경험(3.9%)에 비해 향후 1년 내 참여할 의향(16.6%)이 많았습니다. 한편, 사회문제 관심이 많은 국민은 최근 3년간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 프로그램'과 '기업 투자'에 참여한 경험(각 15.3%, 9.6%)보다, 향후 1년 내 참여할 의지(각 27.9%, 23.7%)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문제 관심도에 따라 문제 해결 의지가 크게 다른 만큼, 국내 사회이슈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 해결 액션 영향력 평가 차이 Top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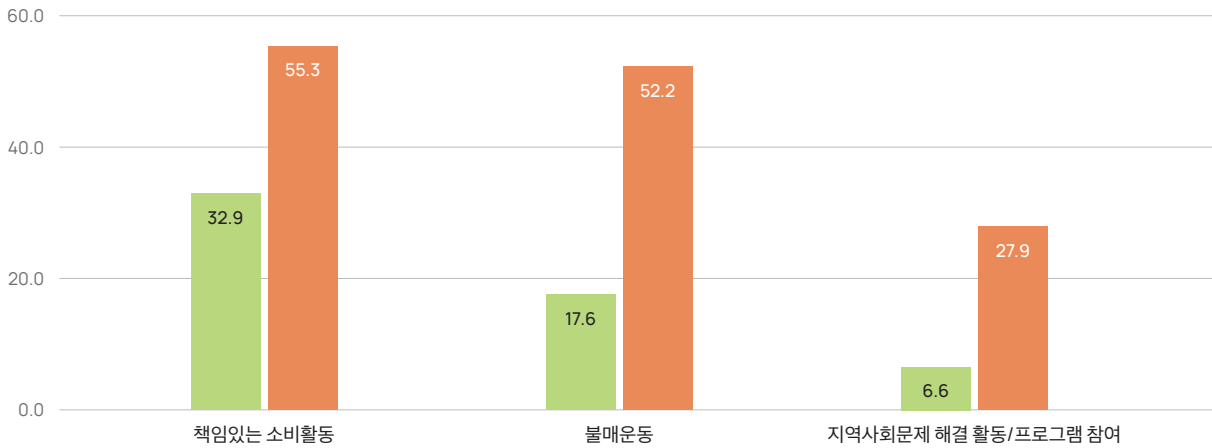
● 관심도 낮은 사람(0~4점) ● 관심도 높은 사람(6~10점)



향후 1년내 참여 의지 차이 Top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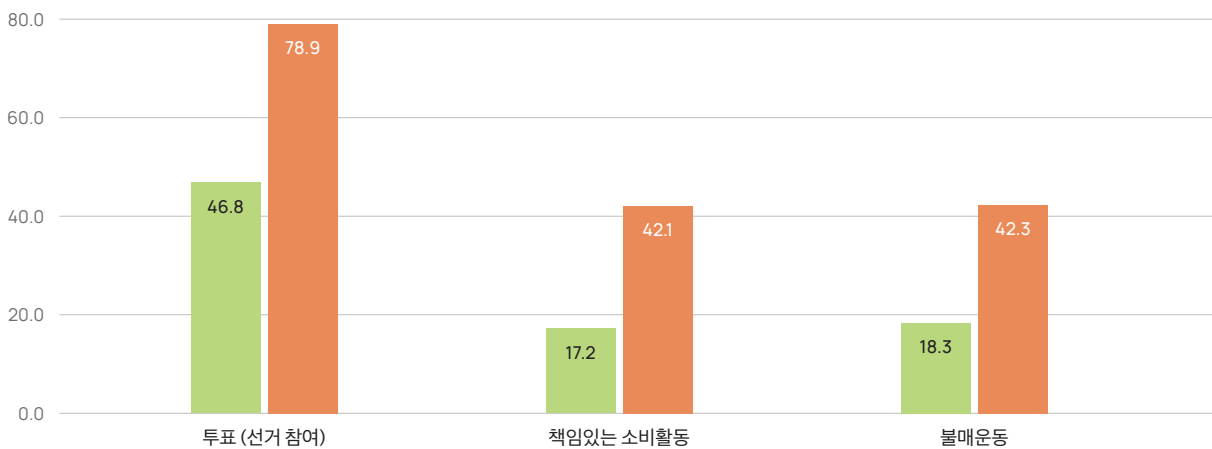
● 관심도 낮은 사람(0~4점) ● 관심도 높은 사람(6~10점)



최근 3년간 활동 경험 차이 Top3

단위: %

● 관심도 낮은 사람(0~4점) ● 관심도 높은 사람(6~10점)



Channel & Information :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과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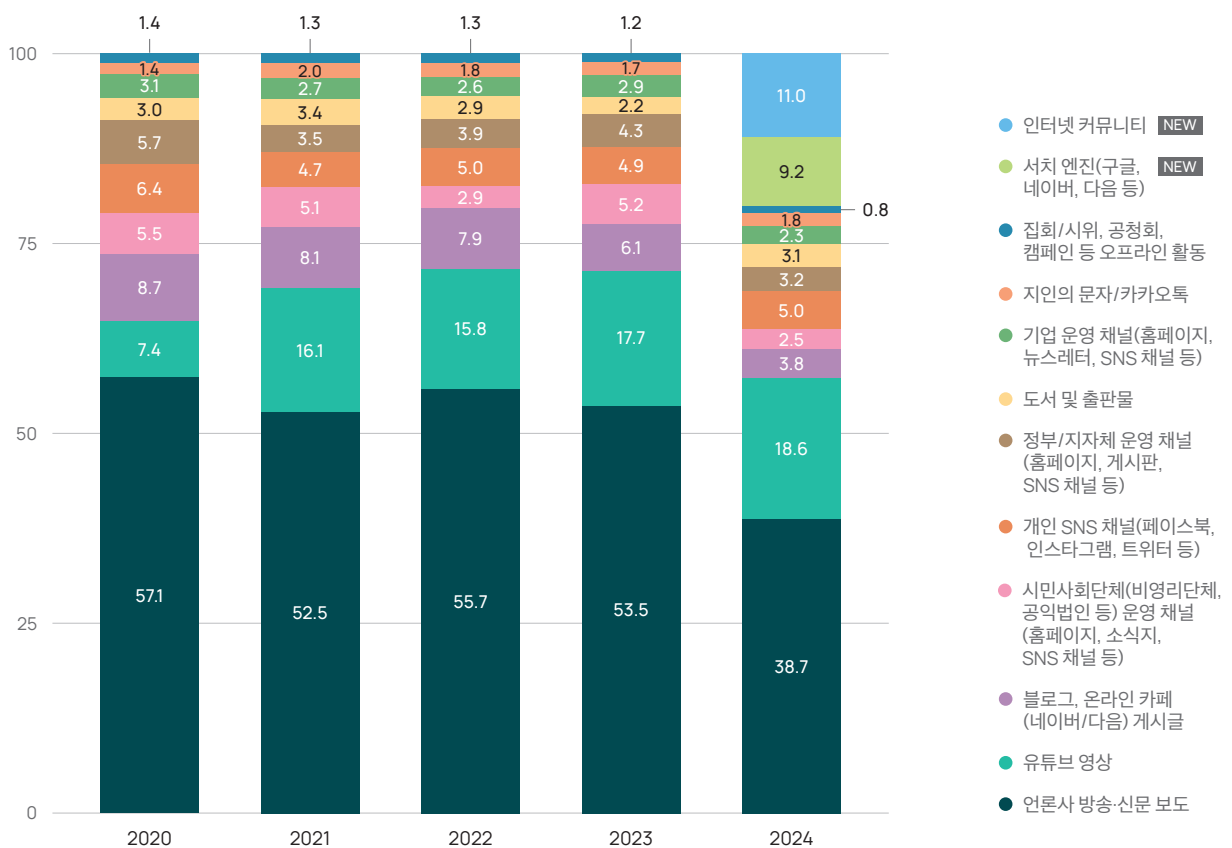
국민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을까요.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지난 4년간(2020-2023) 기타(주관식) 응답으로 많았던 '서치 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커뮤니티' 선택지를 추가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1순위 응답 집계 결과,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38.7%)', '유튜브 영상(18.6%)', '인터넷 커뮤니티(11%)', '서치 엔진(9.2%)', '개인 SNS 채널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간 변동없이 3순위 응답이었던 '블로그, 온라인 카페(3.8%)'는 5년 연속 감소(연평균 증가율 -19%)하며 6위로 밀려났습니다.

3순위까지의 답변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신규 선택지(서치 엔진,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채널의 응답율이 감소했으나, 유튜브 영상은 유일하게 지난해 대비 3.9%p 증가, 2020년대비 18.9%p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로 사회문제를 접하는 비중은 2020년대비 13.4%p 감소하며,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전년도와 비교해도 14.8%p 떨어졌습니다.

5개년 2020-2024 사회문제를 접하는 채널 유형

단위: %(1순위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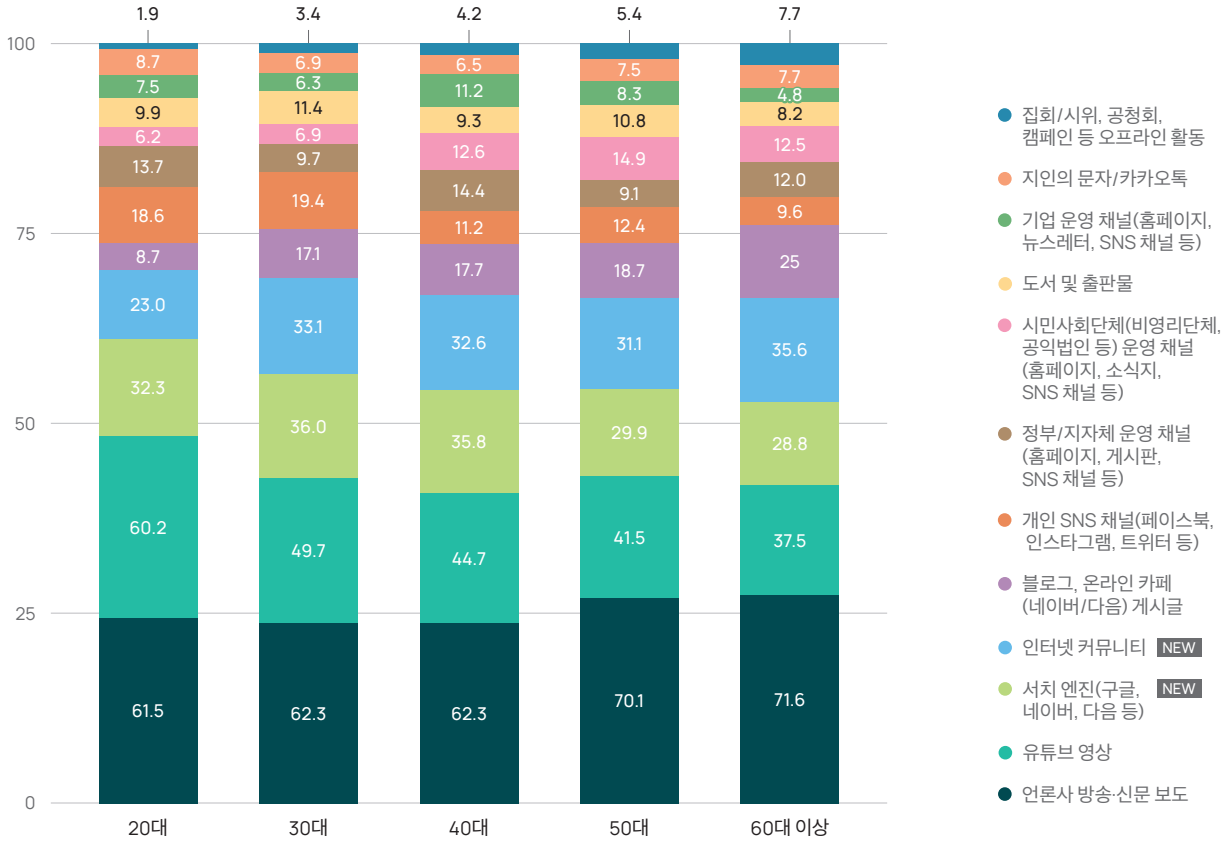


세대별로 사회문제를 접하는 채널에 대한 격차도 나타났습니다. 1순위 응답 분석 결과, 20대가 다른 연령 대비 '유튜브 영상(28.6%)'을 통해 사회문제를 접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블로그, 온라인 카페(0.6%)'에 대한 접근성은 낮았습니다. '서치 엔진(13.7%)'을 선택한 비중은 30대(13.7%)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5.8%)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3순위까지의 응답 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유튜브 영상'을 3순위 안에 꼽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 '블로그, 온라인 카페', '집회/시위, 공청회,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활동'을 꼽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를 선택한 비중은 50대(31.1%), 60대 이상(35.6%) 집단에서 3순위로 꼽히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접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별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사회문제를 접하는 채널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유튜브 영상’, ‘서치 엔진’, ‘개인 SNS 채널’에서 사회문제를 주로 접하는 국민들은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 문제가 가장 삶에 어려움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온라인 카페’를 통한 접근이 많은 국민들은 사회통합 저해를,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로 정보를 얻는 국민들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를 어려운 이슈로 꼽았습니다. 6개의 채널 모두 공통적으로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슈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개인 SNS 채널’의 접근도가 높은 국민들이 자연재해를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슈 3순위로 선택(지난해 7위)한 반면, ‘블로그·온라인 카페’를 통해 사회문제를 접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용 및 노동 불안정’ 이슈로 인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별 응답자들이 삶에 가깝게 느끼는 이슈

순위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	유튜브 영상	인터넷 커뮤니티	서치 엔진	블로그, 온라인 카페 게시글	개인 SNS 채널
1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사회통합 저해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사회통합 저해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2	사회통합 저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고용 및 노동 불안정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3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자연재해

CHAPTER 3

Sustainability Issues Analysis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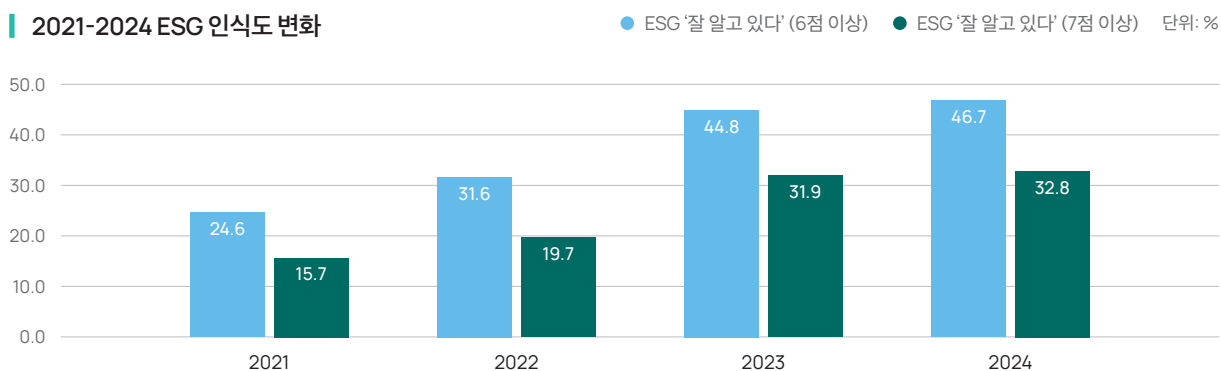
Sustainability Issues Analysis :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ESG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ESG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ESG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Public Awareness of Sustainability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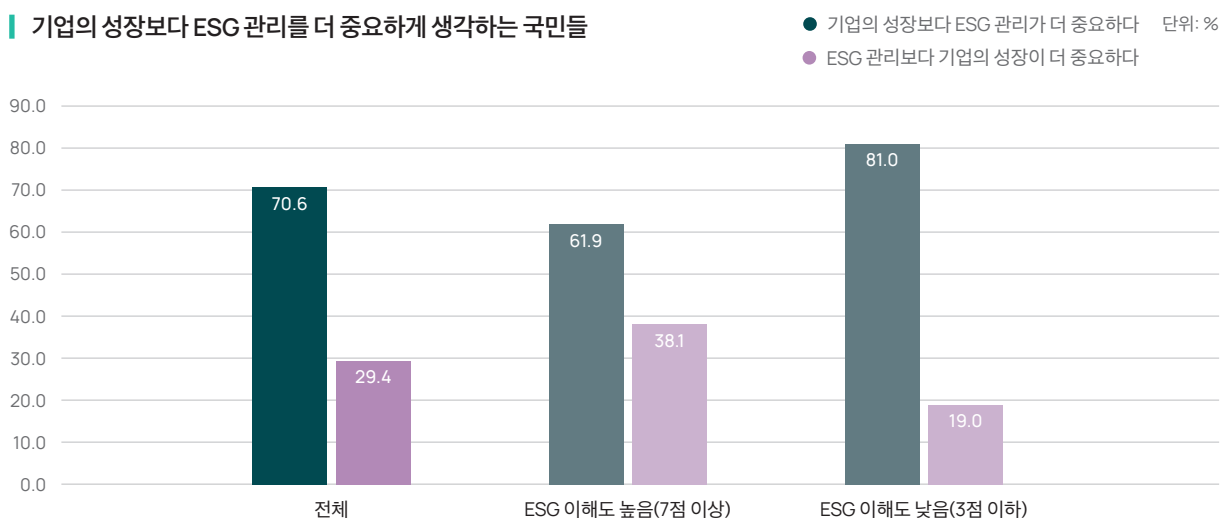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키워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이해하는 국민들이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의 인식 수준을 묻는 질문(0~10점, 전혀 모른다~매우 잘 안다)에 대해 'ESG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들의 비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2024 ESG 인식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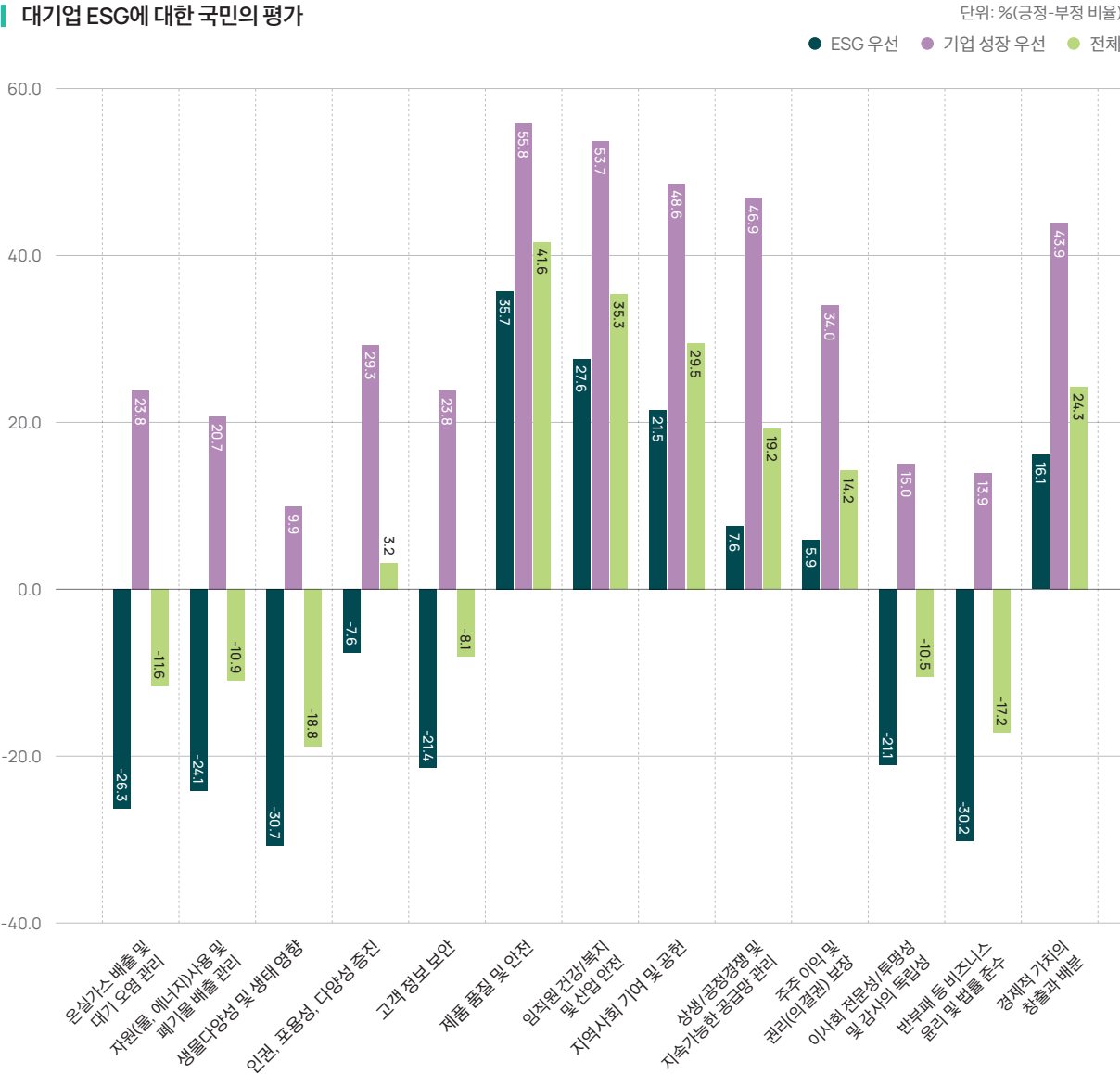
대부분(70.6%)의 국민들은 기업의 성장성이 조금 저하되더라도 ESG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하듯,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민들이 ESG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G 이해도가 높은(7점 이상) 응답자 중 61.9%가 'ESG가 기업의 성장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ESG 이해도 낮은(3점 이하) 응답자 중에서는 이러한 응답이 81.0%로 약 20% 더 높았습니다.

기업의 성장보다 ESG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



국민들은 대기업의 '생물다양성·생태 영향(-18.8%)', '반부패 및 비즈니스 윤리·법률 준수(-17.2%)'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실가스 배출(-11.6%)', '자원 사용 및 폐기물 관리(-10.9%)',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및 감사의 독립성(-10.5%)'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높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거버넌스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제품 품질 및 안전(41.6%)', '임직원 건강/복지 및 산업 안전(35.3%)',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29.5%)'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ESG에 대한 국민의 평가



한편, 기업의 성장이 ESG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국민들은 국내 대기업의 모든 ESG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평균 32.3%)했습니다. 반면, ESG 관리를 기업의 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국내 대기업의 ESG 수준을 낮게 평가(평균 -3.6%)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중시하는 가치관(기업의 성장 VS ESG 관리)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 오염 관리(50.2%p)', '고객 정보 보안(45.2%p)', '자원(물,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배출 관리(44.8%p)'에 대한 기업 평가 점수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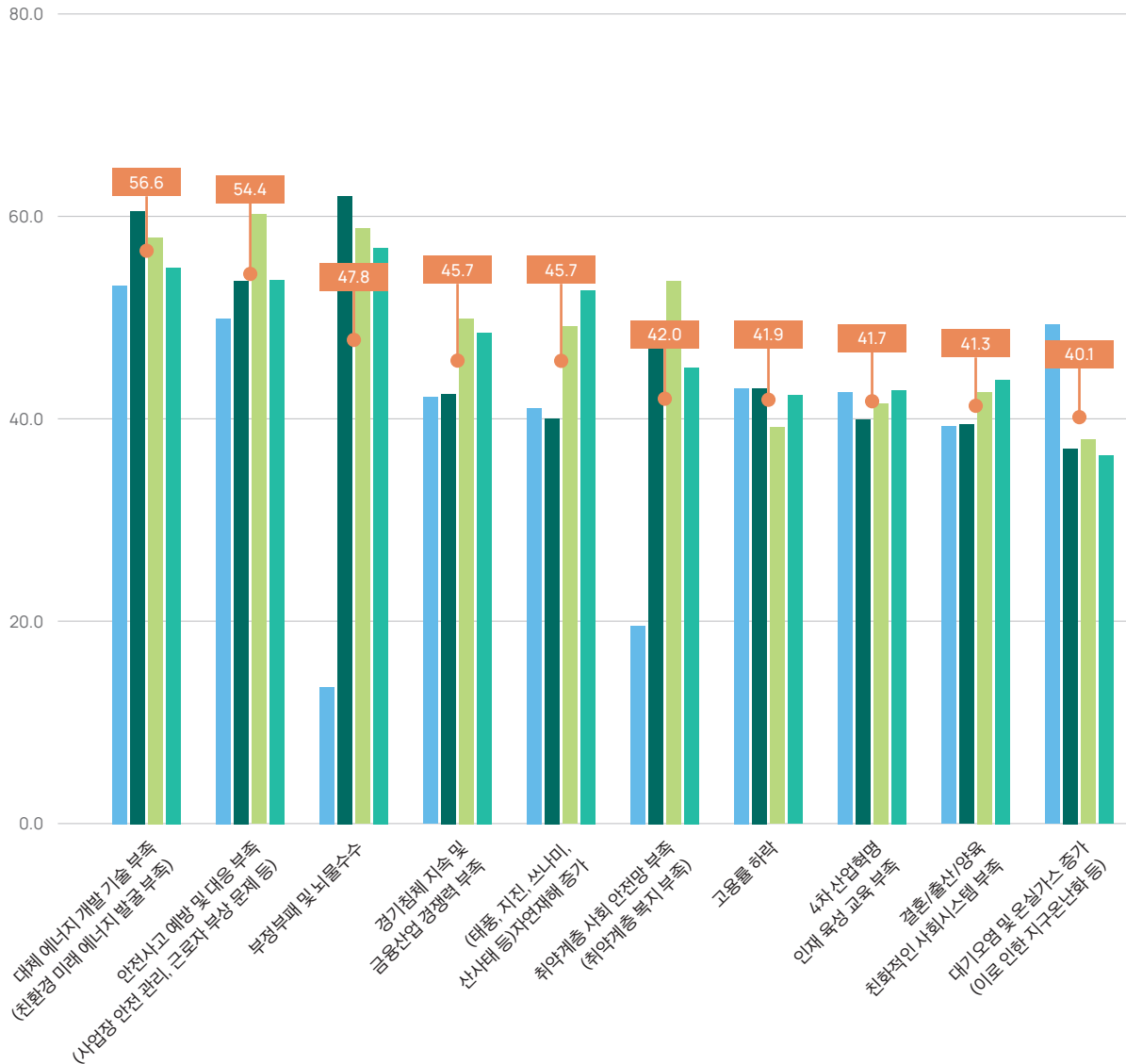
국민이 주목하는 ESG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장 높은 주목도를 보인 이슈는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56.6%)'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54.4%)',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47.8%)'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 전반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준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슈도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자연재해 증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과 관련된 기업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2021-2024 국민이 주목하는 ESG 이슈 Top10

단위 : %(국내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슈로 선택한 비율)

● 2021 ● 2022 ● 2023 ● 2024 ● 평균



Sustainability 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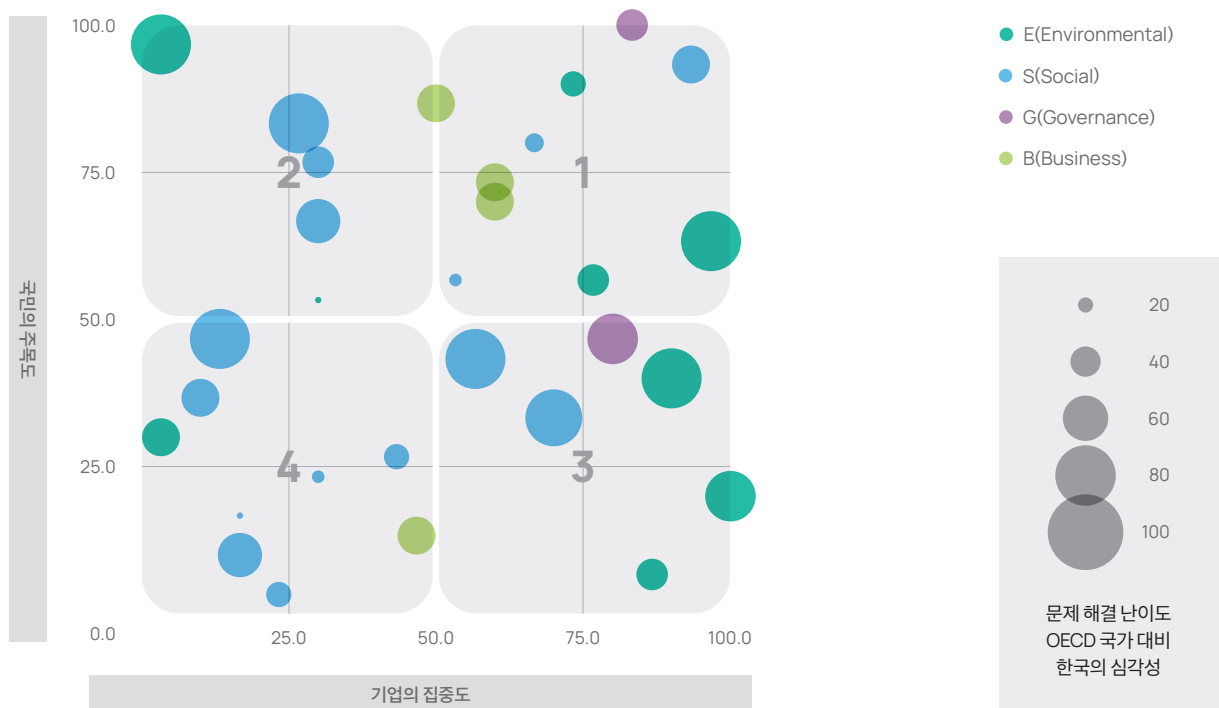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국민의 시선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ESG 및 녹색 정책에 대한 반발(ESGlash, Greenlash)이 거세지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규제 동향은 ESG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¹시키며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지침과 공시 기준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보고할 항목과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론인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요 대기업은 국민이 주목하는 이슈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요.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시 표준과 국내 주요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Top 30'를 바탕으로, 국민이 기업에게 집중하기 바라는 이슈와 기업이 실제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비교했습니다. 국민의 주목도(Y축)와 기업의 집중도(X축)를 기반으로 구조화한 '지속가능 이슈 미스매치 매트릭스(Sustainability Issue Gap Matrix)²'에 나타난 4가지 영역별 전략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해봤습니다.

Sustainability Gap Matrix : ESG Approach



1 2023년 1월, EU는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를 발효했고, 같은 해 6월,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S2를 연이어 발표했다.

2 Y축 '국민의 주목도'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이슈 30' 중에서 '국내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슈'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X축 '기업의 집중도'는 국내 주요 산업별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ESG 보고서의 중대성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이슈 30'에 대한 집중도를 도출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문제 해결 난이도'는 100대 사회이슈에 대하여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를 환산해 도출한 점수로,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다. 이 중에서 문제 해결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이슈들은 동일 테마의 평균치로 대체하였다.

① 국민과 기업이 모두 집중하는 영역

ESG 테마	이슈	국민 주목도	기업 집중도
G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100	83.3
S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93.3	93.3
E	(태풍,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자연재해 증가	90	73.3
B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86.7	50
S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80	66.7
B	고용률 하락	73.3	60
B	청년 일자리 부족	70	60
E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63.3	96.7
E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56.7	76.7
S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56.7	53.3

국민들이 주목하고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에는 비즈니스(B) 관련 이슈 4개 중 3개가 포함됐습니다. 국민들은 매출, 신사업 개발 등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궁극적으로 고용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이슈는 작년에 이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몇 년이 지났지만, 작업장 내 안전사고가 이어져 국민의 주목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비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강화됐습니다. 기업 집중도가 2023년에는 16.7점에 머물렀지만, 올해에는 66.7점으로 높아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국민이 기대하지만 기업은 집중하지 않는 영역

ESG 테마	이슈	국민 주목도	기업 집중도
S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76.7	30
S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66.7	30
S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83.3	26.7
E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53.3	30
E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96.7	3.3

국민의 주목도가 높은 반면, 기업의 집중도가 낮은 영역에 포함된 이슈가 작년(8개) 대비 3개나 줄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전략에 반영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투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취약계층 교육 및 사회안전망, 재해 대응,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지속되는 반면, 기업의 노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해 기업 집중도가 높은(76.7점) 영역으로 평가됐던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이슈는 올해 3.3점으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TCFD 보고서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공시하거나 탄소중립을 기업의 핵심 로드맵으로 선정한 기업들은 많았지만, 정작 대체 에너지 개발에는 소홀한 모습입니다.

③ 국민보다 기업이 더 집중하는 영역

ESG 테마	이슈	국민 주목도	기업 집중도
G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46.7	80
S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23.3	30
S	저출생 문제	43.3	56.7
S	성별격차 및 성차별	33.3	70
E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40	90
E	대형산불 증가	6.7	86.7
E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20	100

국민의 주목도는 높지 않으나 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영역에는 작년에 이어 환경 이슈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 강화되고, 최근 산불 피해가 급증한 현상이 결과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해(96.7점)에서 올해 100점으로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저출생 및 다양성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기업의 주목도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기업의 집중도는 지난해 10점에서 올해 56.7점으로 높아졌고, '성별격차 및 성차별' 문제 역시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56점 → 70점).

④ 국민과 기업 모두 주목도가 낮은 영역

ESG 테마	이슈	국민 주목도	기업 집중도
B	가계부채 증가	13.3	46.7
S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16.7	16.7
S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46.7	13.3
S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26.7	43.3
S	지역발전 불균형	36.7	10
S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10	16.7
S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3.3	23.3
E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30	3.3

국민의 주목도와 기업의 집중도가 모두 낮게 평가된 영역에는 여전히 사회(S) 테마의 이슈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46.7점→16.7점)'와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46점→13.3점)' 문제의 기업 집중도가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업이 국민의 기대보다 더 집중하는 영역에 포함됐던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이슈의 경우 올해 23.3점(지난해 53.3점)으로, 기업의 노력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임직원의 정신 건강과 기업 내 성범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HAPTER 4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

현대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다양한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 1,000명에게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Public Perception of Low Birth Rates

저출생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초저출생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출생 이슈는 2022년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인식 조사 결과,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Top30에 처음으로 진입(30위)한 이후, 2023년 13위에서 올해 1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와 자녀를 키우고 싶은 환경은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봤습니다.

성별·연령·가치관에 따른 자녀 계획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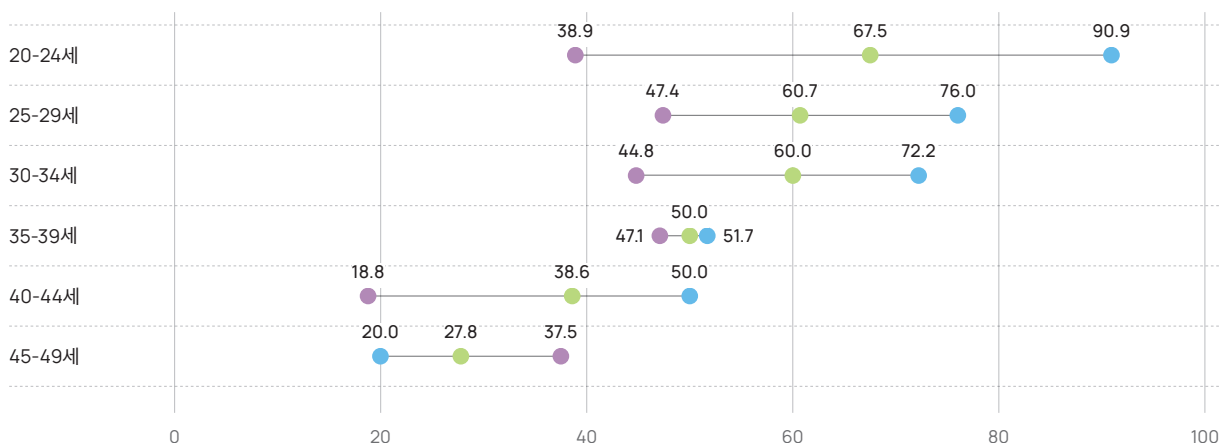
자녀가 없는 20-49세 국민 320명에게 자녀 희망 여부를 물었습니다. 설문 결과, '향후 자녀를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 수준(55%)이었습니다. 자녀 희망 여부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42.1%)보다 남성(65.7%)이, 40대(35.5%)보다 20-30대(59.3%)가 향후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희망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25-34세 남성(74.1%)이 다른 이들에 비해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45-49세 연령에서는 여성(37.5%)이 남성(20%)보다 '자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에 따른 자녀 계획 의향

단위: %(49세 이하 무자녀 중 '자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 N=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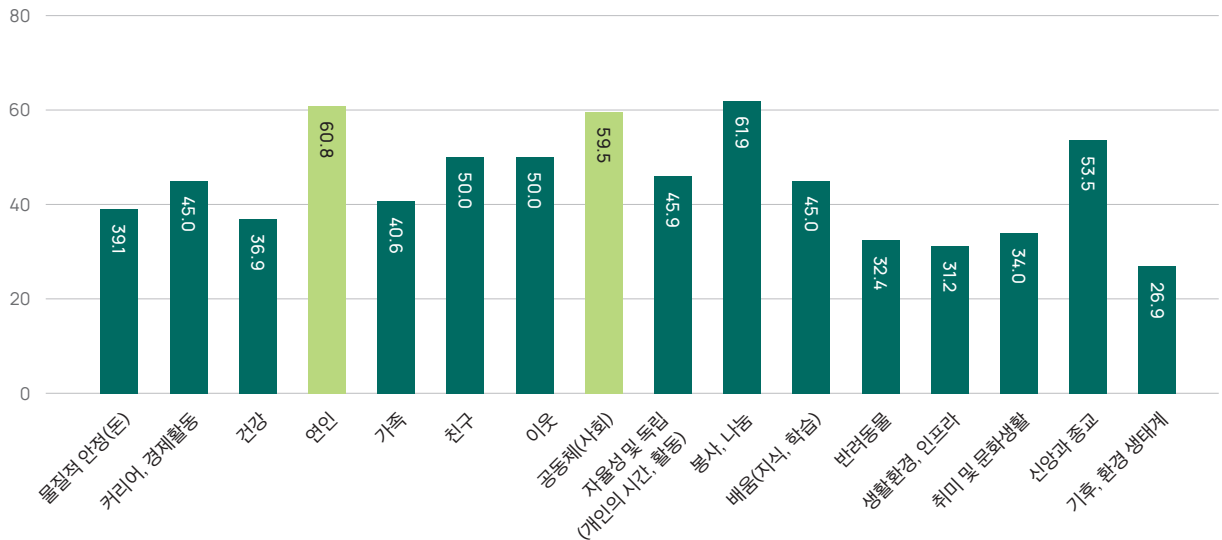
● 전체 ● 남 ● 여



한편,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희망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요소로 '연인(60.8%)'과 '공동체 및 사회(59.5%)'를 선택한 사람들은 '향후 자녀를 가지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생활환경, 인프라(31.2%)'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희망하는 정도가 다른 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 여건의 변화를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가치관에 따른 자녀 계획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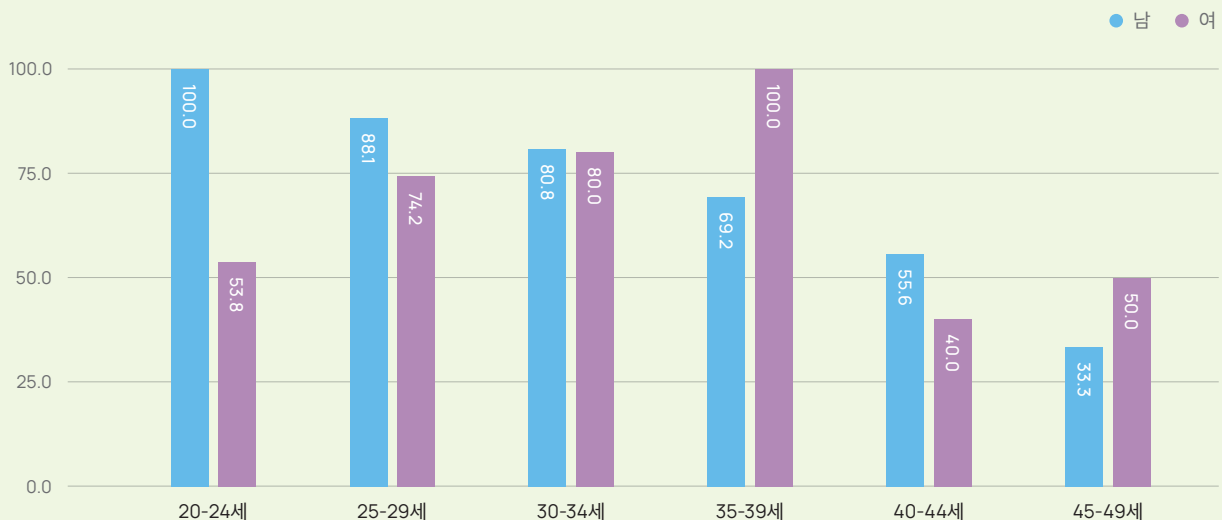
단위: %(49세 이하 무자녀 중 '자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 N=320



결혼 의사가 있는 국민의 성·연령별 자녀 희망 수준

자녀 희망 여부는 결혼에 대한 인식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49세 미혼남녀 2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결혼할 의사가 있는 이들의 76.8%가 '자녀를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결혼 의사가 있는 25-34세 응답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평균 80.8%), 20-24세 연령대에서 남성(100%)이 여성(53.8%)보다 더 자녀를 희망(46.2%p 차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5-39세 연령대에서는 여성(100%)이 남성(69.2%)에 비해 30.8%p 더 자녀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위: %(결혼할 의사가 있는 20-49세 중 '향후 자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 N=190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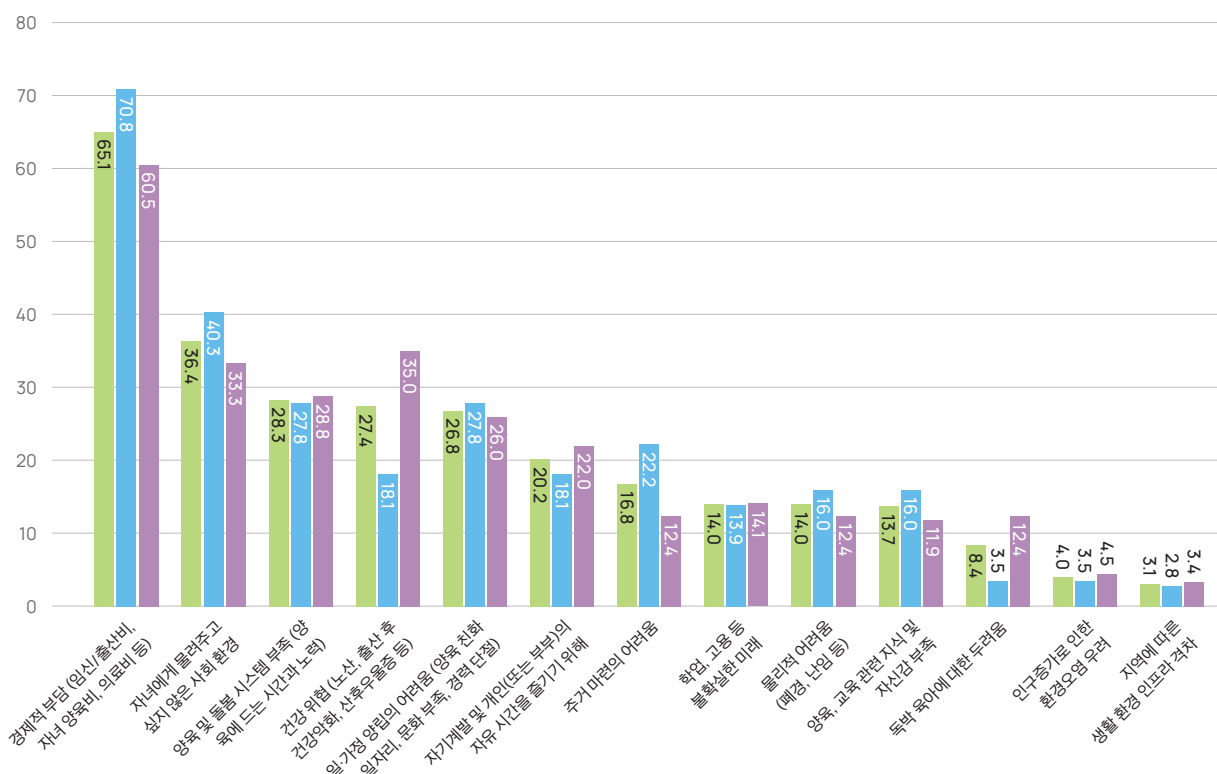
그렇다면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20~49세 응답자 321명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자 321명 중 209명(65.1%)이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 환경'(36.4%, 117명)', '양육 및 돌봄 시스템 부족(28.3%, 9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간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난 응답은 '건강 위협'으로 남성(18.1%)에 비해 여성(35%)이 16.9%p 높게 나타났습니다. '독박 육아에 대한 두려움'도 남성(3.5%)보다 여성(12.4%)이 더 큰 모습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꼽은 응답은 '경제적 부담(10.3%p 차이)', '주거 마련의 어려움(9.8%p 차이)'로, 상대적으로 남성은 경제적 원인, 여성은 신체·정신적 원인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성별에 따른 무자녀 희망 이유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N=321

● 전체 ● 남 ●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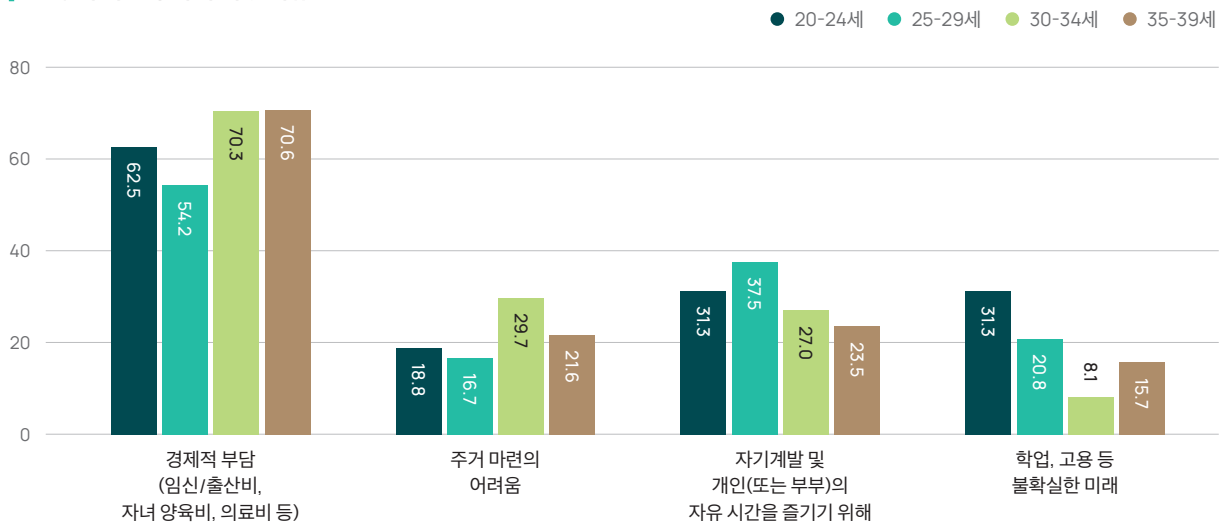


'경제적 부담'을 꼽은 비율은 30대(70.5%)가 가장 높고, 20대(56.3%)가 가장 낮았습니다. 30~34세는 다른 연령에 비해 '주거 마련의 어려움(29.7%)'을 꼽은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인 남성 34세, 여성 31.5¹세와 일치하는 시기로, 높은 주거비용이 결혼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기계발 및 개인의 자유 시간을 즐기 위해(35.9%)', '학업, 고용 등 불확실한 미래(23.4%)' 등 개인 생활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¹ 통계청 '2023 혼인 이혼 통계'

연령에 따른 무자녀 희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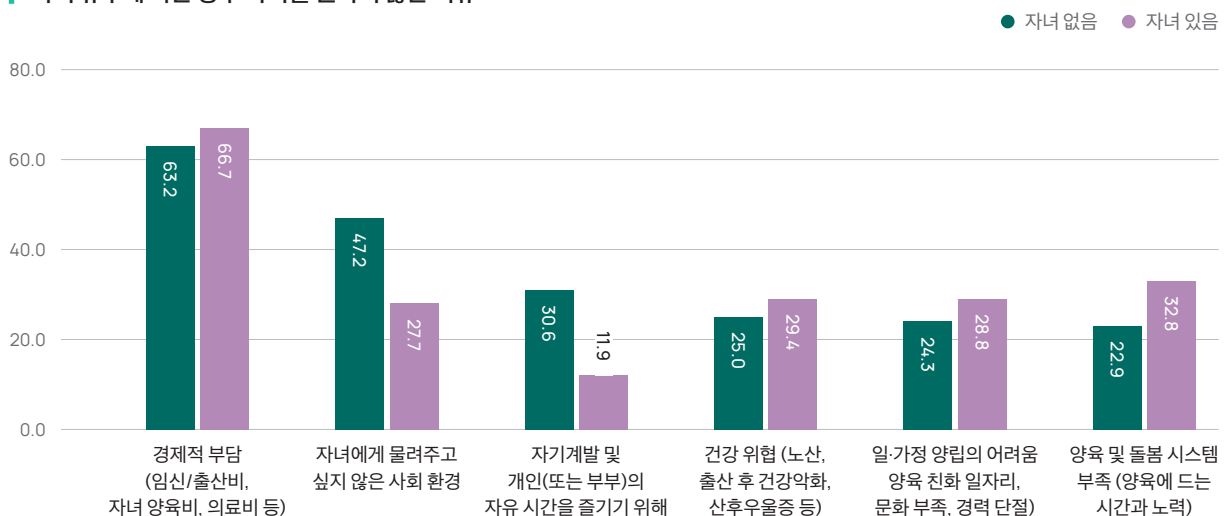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N=321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66.7%)'에 이어 '양육 및 돌봄 시스템 부족(32.8%, 9.9%p 차이)' 때문에 자녀를 더이상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 환경(47.2%, 19.5%p 차이)', '자기계발 및 개인(또는 부부)의 자유 시간을 즐기기 위해(30.6%, 18.7%p 차이)'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 유무에 따른 향후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N=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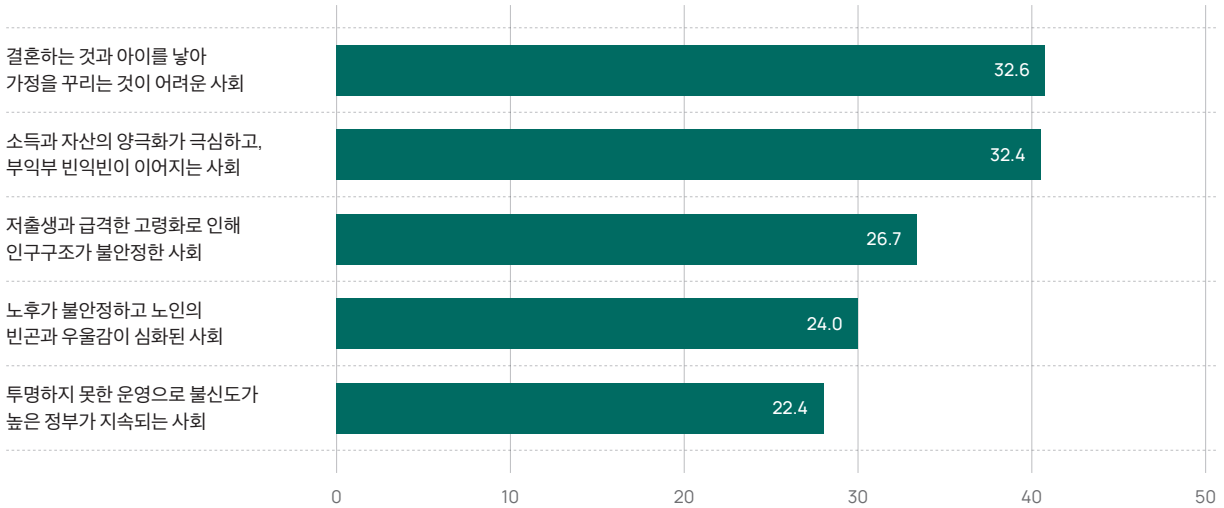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한국 사회 모습

국민 1,000명에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한국사회 모습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결혼하는 것과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려운 사회(32.6%)',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이어지는 사회(32.4%)',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불안정한 사회(26.7%)'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한편,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환경'을 선택한 이들(117명)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이어지는 사회(41.9%)',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불신도가 높은 정부가 지속되는 사회(31.6%)'를 평균 응답보다 각 9.5%p, 9.2%p 더 많이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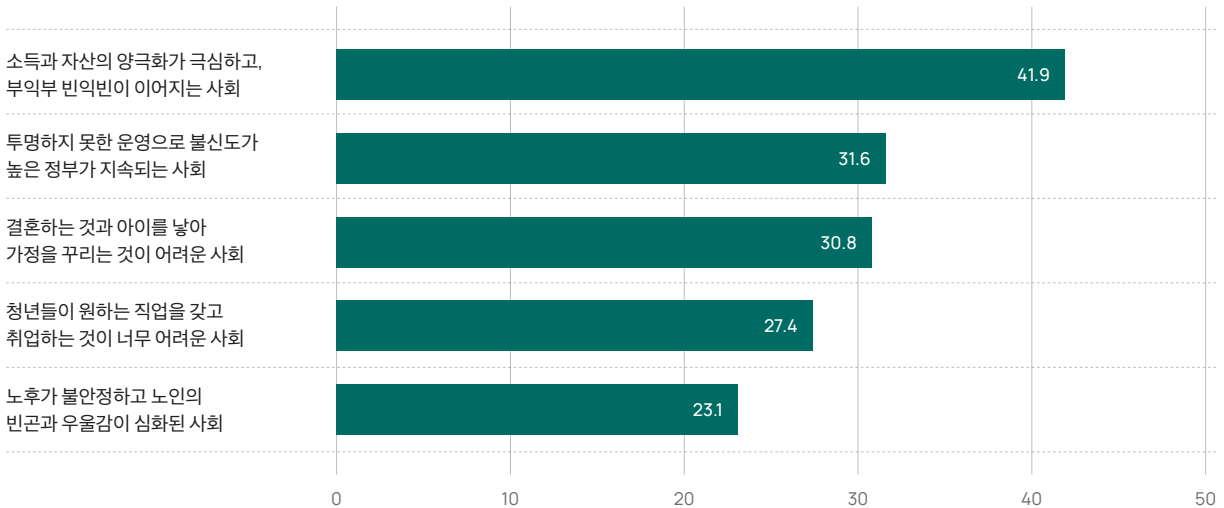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자녀를 희망하지 않은 이유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환경'을 꼽은 20-49세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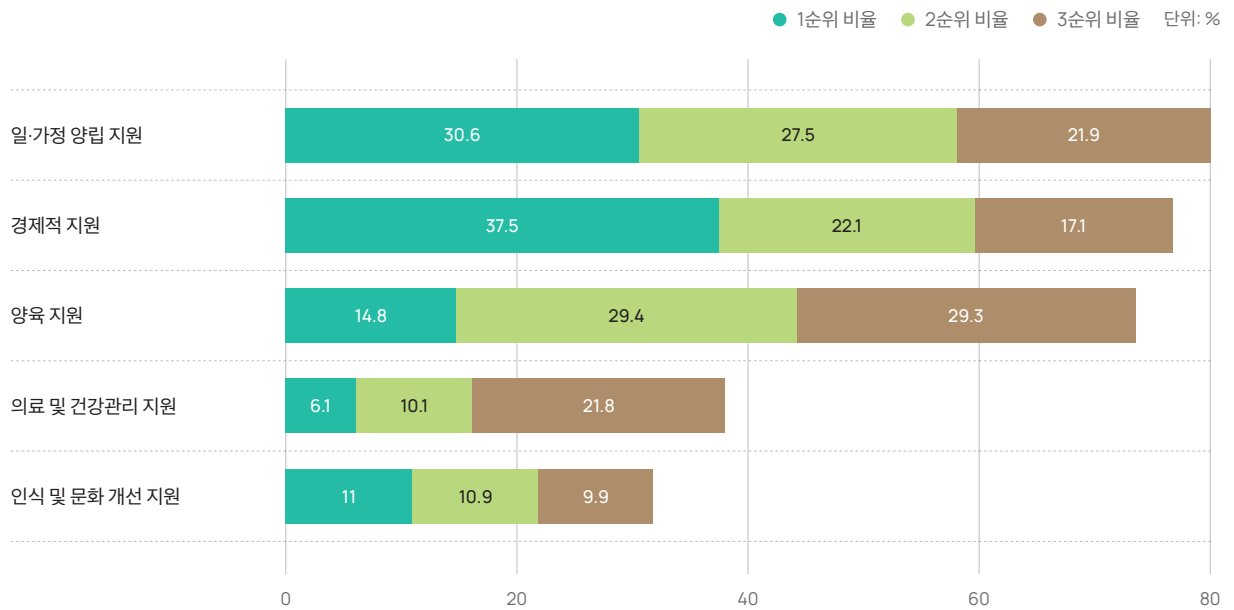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N=117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국민이 원하는 지원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의료 및 건강 관리, 인식 및 문화 개선 등 자녀를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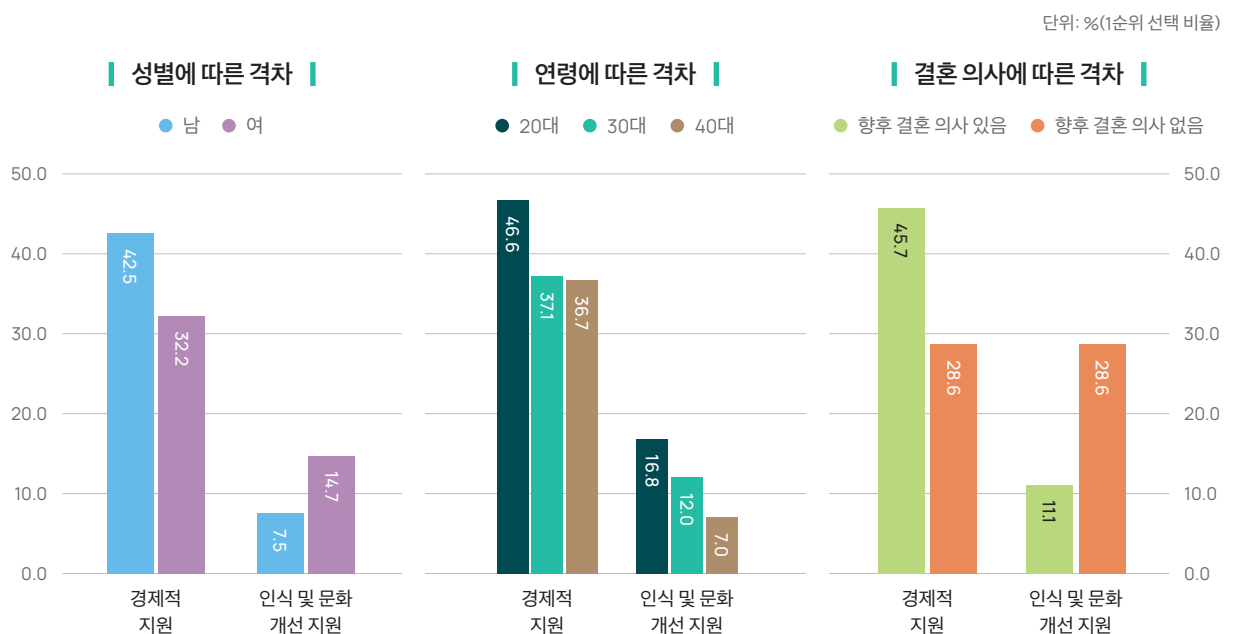
국민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1~3순위 선택)했습니다. '경제적 지원(76.7%)', '양육 지원(73.5%)'이 비등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37.5%)'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모습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구특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경제적 지원'과 '인식 및 문화 개선 지원'입니다.

남성(42.5%)은 여성(32.2%) 보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경제적 지원(42.5%)'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성(14.7%)은 '인식 및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남성(7.5%) 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여성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 속 편견과 차별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령별로는 20대(46.6%)가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30-40대(36.9%) 보다 10%p 가까이 높았습니다. '인식 및 문화 개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20대(16.8%)가 30대(12%)와 40대(7%) 보다 높게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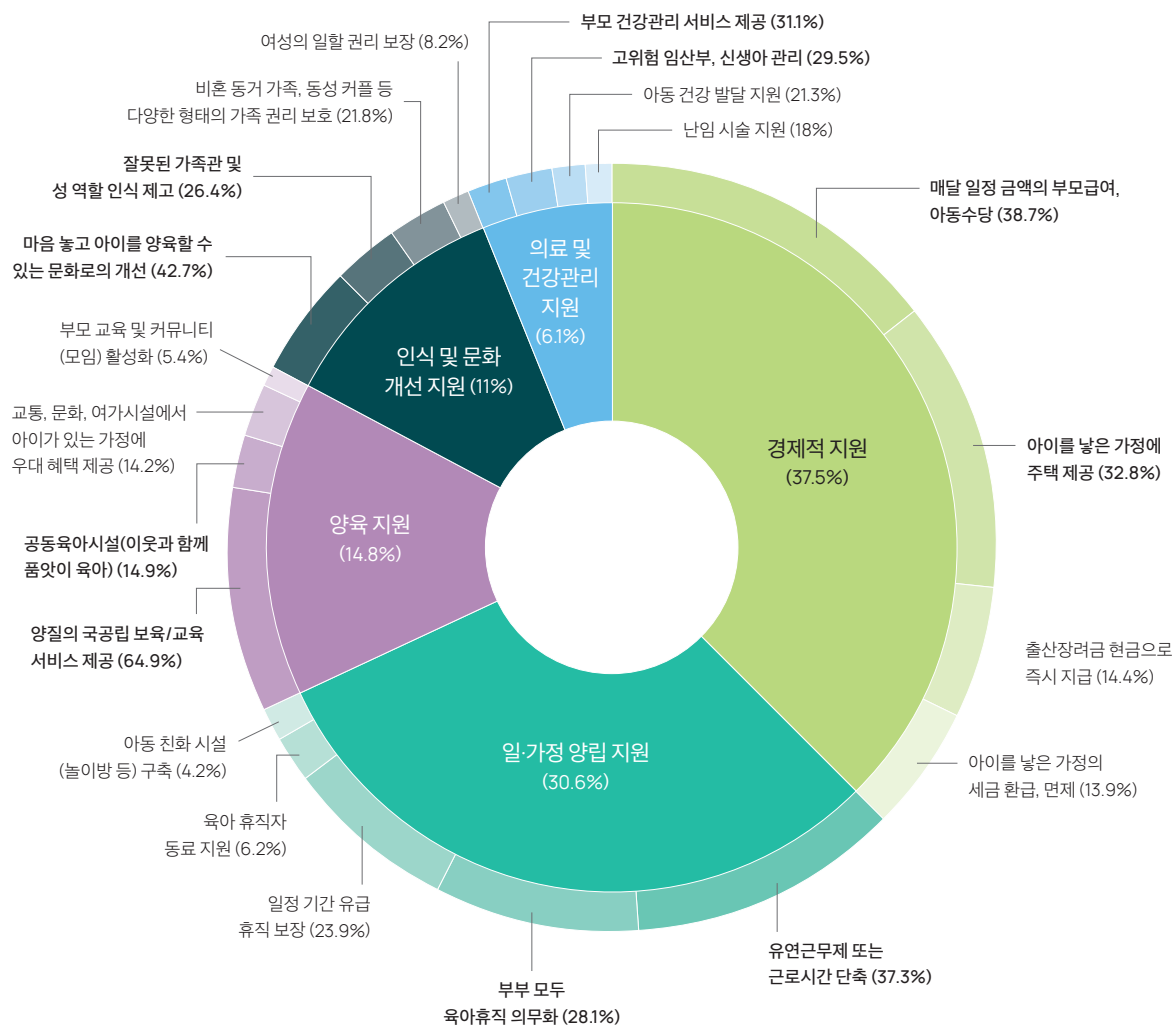
특히 향후 결혼할 의사가 있는 국민들은 '경제적 지원'을, 향후 결혼할 의사가 없는 이들은 '인식 및 문화 개선 지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사회·환경·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경제적 여건이 결혼과 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 할까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매달 일정 금액의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38.7%)’, ‘아이를 낳은 가정에 주택 제공(32.8%)’ 등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현금 즉시 지급(14.4%)’이나 ‘세금 환급 및 면제(13.9%)’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을 꼽은 이들은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37.3%)’,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8.1%)’, ‘일정 기간 유급 휴직 보장(23.9%)’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양질의 국공립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64.9%)’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양질의 보육 및 교육 체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문화로의 개선(42.7%)’, ‘부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31.1%)’과 ‘고위험 임신부 및 신생아 관리(29.5%)’, ‘잘못된 가족관 및 성 역할 인식 제고(26.4%)’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부 지원 항목의 우선순위는 자녀유무와 희망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제적 지원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희망하는 이들은 ‘주택 제공’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국민들은 절반 가까이 (44.7%) ‘매달 일정 금액 지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주거 마련이 자녀 출산의 가장 큰 장벽이 되며,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적 지원

N=375

순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희망	무자녀 희망
1	아이를 낳은 가정에 주택 제공 (35%)	매달 일정 금액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44.7%)	아이를 낳은 가정에 주택 제공 (37.9%)	매달 일정 금액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43.6%)
2	매달 일정 금액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28.6%)	아이를 낳은 가정에 주택 제공 (31.5%)	매달 일정 금액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29.5%)	아이를 낳은 가정에 주택 제공 (30%)
3	출산장려금 현금으로 즉시 지급 (19.3%)	아이를 낳은 가정의 세금 환급, 면제 (12.3%)	출산장려금 현금으로 즉시 지급 (18.2%)	아이를 낳은 가정의 세금 환급, 면제 (14%)
4	아이를 낳은 가정의 세금 환급, 면제 (16.4%)	출산장려금 현금으로 즉시 지급 (11.5%)	아이를 낳은 가정의 세금 환급, 면제 (13.6%)	출산장려금 현금으로 즉시 지급 (12.3%)

일·가정 양립 지원에서 자녀를 희망하는 이들은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31.4%)’를 ‘유연근무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28.6%)’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양육 지원**에서는 자녀 유무 및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양질의 국공립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공동육아시설(이웃과 함께 품앗이 육아)’과 ‘부모 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상위권으로 나타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웃과 커뮤니티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N=306

순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희망	무자녀 희망
1	유연근무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 (38.8%)	유연근무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 (36.5%)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31.4%)	유연근무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 (39.8%)
2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30.1%)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27.1%)	유연근무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 (28.6%)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27.1%)
3	일정 기간 유급 휴직 보장 (21.4%)	일정 기간 유급 휴직 보장 (25.1%)	일정 기간 유급 휴직 보장 (27.1%)	일정 기간 유급 휴직 보장 (22.9%)
4	육아 휴직자 동료 지원 (5.8%)	육아 휴직자 동료 지원 (6.4%)	육아 휴직자 동료 지원 (10%)	육아 휴직자 동료 지원 (5.1%)
5	아동 친화 시설(놀이방 등) 구축 (3.9%)	아동 친화 시설(놀이방 등) 구축 (4.4%)	아동 친화 시설(놀이방 등) 구축 (2.9%)	아동 친화 시설(놀이방 등) 구축 (4.7%)

순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희망	무자녀 희망
1	양질의 국공립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58.3%)	양질의 국공립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67%)	양질의 국공립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54.1%)	양질의 국공립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68.5%)
2	부모 교육 및 커뮤니티(모임) 활성화 (16.7%)	공동육아시설(이웃과 함께 품앗이 육아) (15.2%)	공동육아시설(이웃과 함께 품앗이 육아) (18.9%)	공동육아시설(이웃과 함께 품앗이 육아) (13.5%)
3	공동육아시설(이웃과 함께 품앗이 육아) (13.9%)	교통, 문화, 여가시설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우대 혜택 제공 (15.2%)	교통, 문화, 여가시설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우대 혜택 제공 (16.2%)	교통, 문화, 여가시설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우대 혜택 제공 (13.5%)
4	교통, 문화, 여가시설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우대 혜택 제공 (11.1%)	부모 교육 및 커뮤니티(모임) 활성화 (1.8%)	부모 교육 및 커뮤니티(모임) 활성화 (10.8%)	부모 교육 및 커뮤니티(모임) 활성화 (3.6%)

인식 및 문화 개선 지원으로 자녀를 희망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문화로의 개선(66.7%, 29.6%p 차이)’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14.3%, 7.6%p 차이)’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이들은 ‘잘못된 가족관 및 성 역할 인식 제고(30.3%, 20.8%p 차이)’, ‘비혼 동거 가족,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권리 보호(24.7%, 15.2%p 차이)’를 꼽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순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희망	무자녀 희망
1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문화로의 개선 (39.3%)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문화로의 개선 (46.9%)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문화로의 개선 (66.7%)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문화로의 개선 (37.1%)
2	잘못된 가족관 및 성 역할 인식 제고 (27.9%)	잘못된 가족관 및 성 역할 인식 제고 (24.5%)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14.3%)	잘못된 가족관 및 성 역할 인식 제고 (30.3%)
3	비혼 동거 가족,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권리 보호 (23%)	비혼 동거 가족,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권리 보호 (20.4%)	비혼 동거 가족,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권리 보호 (9.5%)	비혼 동거 가족,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권리 보호 (24.7%)
4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8.2%)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8.2%)	잘못된 가족관 및 성 역할 인식 제고 (9.5%)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6.7%)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에서 자녀가 있는 이들은 아동 건강 발달 지원(30.3%, 19.6%p 차이)을, 자녀가 없는 이들은 난임 시술 지원(25%, 12.9%p 차이)을 많이 선택한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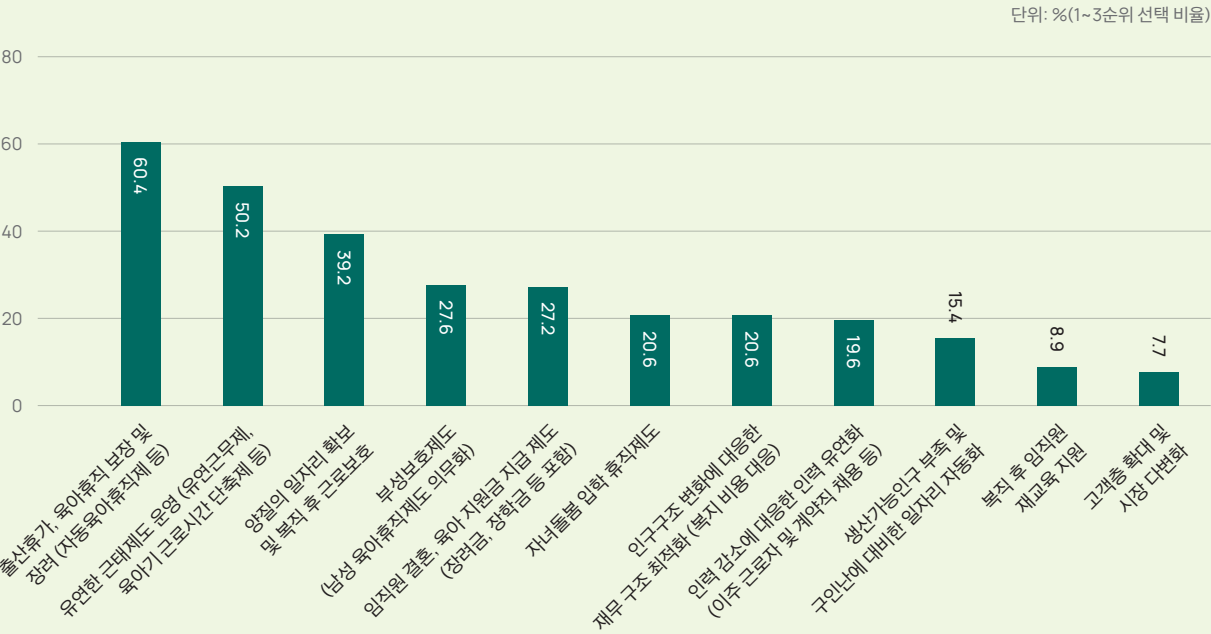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N=61

순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희망	무자녀 희망
1	부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5.7%)	고위험 임신부, 신생아 관리 (30.3%)	부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9.2%)	고위험 임신부, 신생아 관리 (32.4%)
2	고위험 임신부, 신생아 관리 (28.6%)	아동 건강 발달 지원 (30.3%)	고위험 임신부, 신생아 관리 (25%)	부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2.4%)
3	난임 시술 지원 (25%)	부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7.3%)	아동 건강 발달 지원 (25%)	아동 건강 발달 지원 (18.9%)
4	아동 건강 발달 지원 (10.7%)	난임 시술 지원 (12.1%)	난임 시술 지원 (20.8%)	난임 시술 지원 (16.2%)

기업이 우선해야 할 저출생 대책

저출생과 관련해 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과 지원은 무엇일까요. 설문 결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및 장려(60.4%)’ ‘유연한 근무제도 운영(50.2%)’,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복직 후 근로보호(39.2%)’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력 감소에 대응한 인력 유연화(19.6%)’, ‘생산가능인구 부족 및 구인난에 대비한 일자리 자동화(15.4%)’, ‘고객층 확대 및 시장 다변화(7.7%)’는 낮은 비율로 선택된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기업이 인구구조 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에 앞서, 저출생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Preparing for a Super-Aged Society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의 과제

2024년,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이 19%에 도달하며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고령화가 가져올 변화와 우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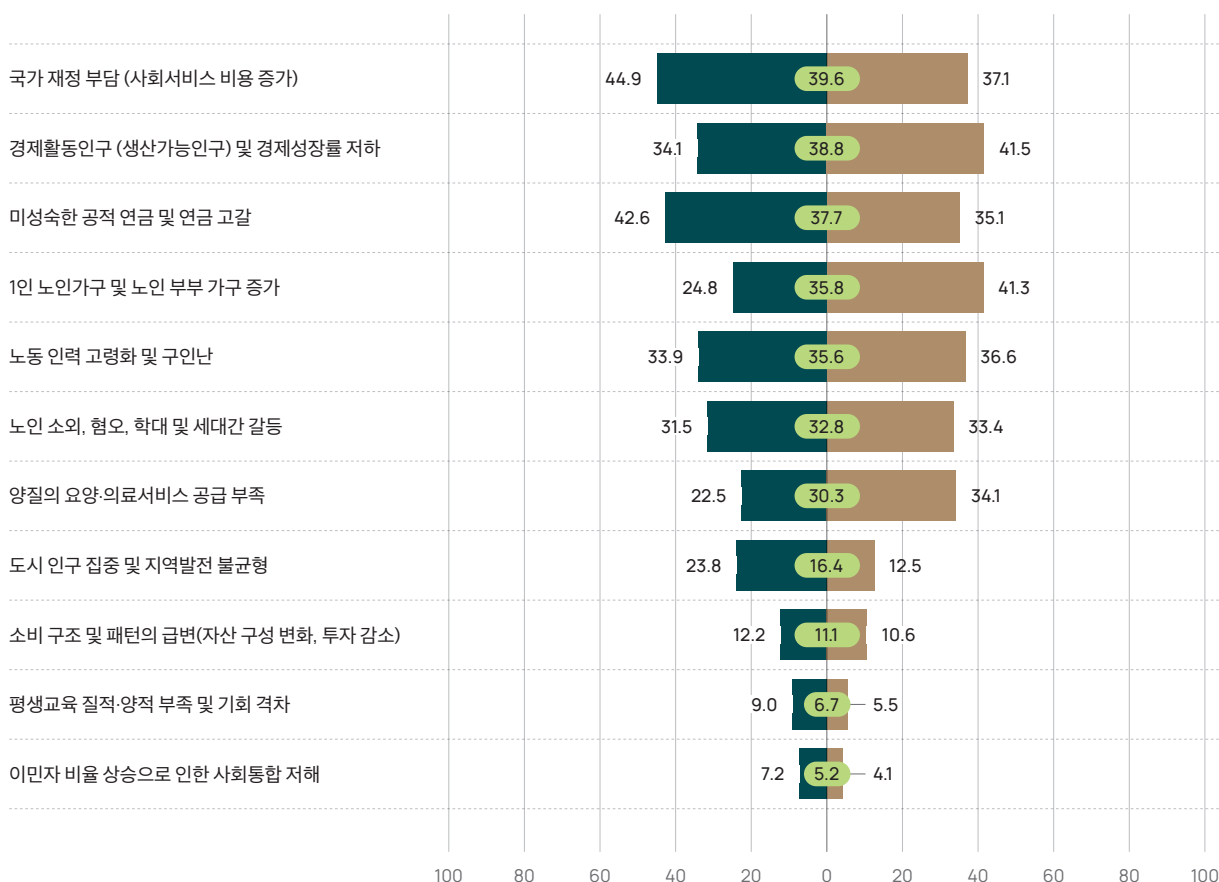
고령화와 연관된 사회문제 중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 재정 부담(39.6%)',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및 경제성장을 저하(38.8%)', '미성숙한 공적 연금 및 연금 고갈(37.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40대 이상보다 '도시 인구 집중 및 지역발전 불균형(11.3%p 차이)', '국가 재정 부담(7.8%p 차이)', '미성숙한 공적 연금 및 연금 고갈(7.5%p 차이)'을 꼽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가 및 미래세대 차원의 부담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40대 이상이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1인 노인가구 및 노인 부부 가구 증가(16.5%p 차이)', '양질의 요양·의료서비스 공급 부족(11.7%p 차이)',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성장을 저하(7.4%p 차이)'로, 노후에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를 본인과 가깝게 받아들이고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문제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 전체 ● 20~30대 ● 4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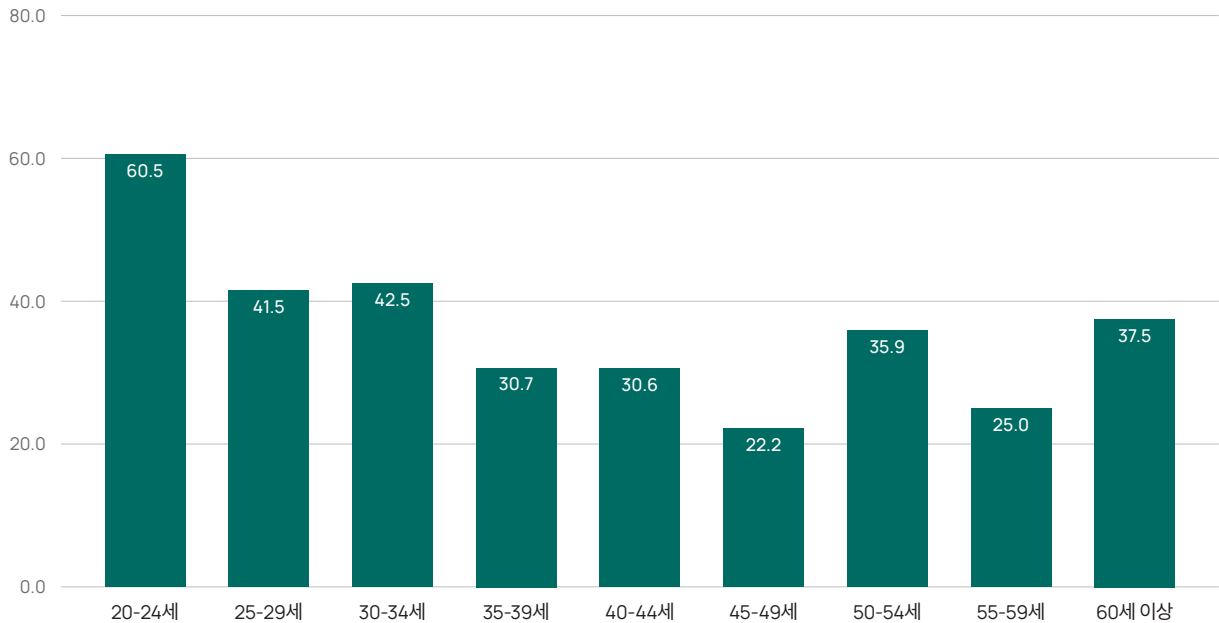
노후 생활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국가 발전과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후의 삶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65세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는 질문에 대해, 국민 4명 중 1명(24.5%)이 노후 생활이 어려울 것²이라 응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27.4%)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45-49세는 22.2%로 20대(46.6%)의 절반 수준입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와 맞물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돌봄의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² '나는 65세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 것이다'는 질문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매우 동의한다(5)'와 같이 5점 척도로 질문하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을 더한 결과값

연령별 노후 자신감

단위: % ('나는 65세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 것이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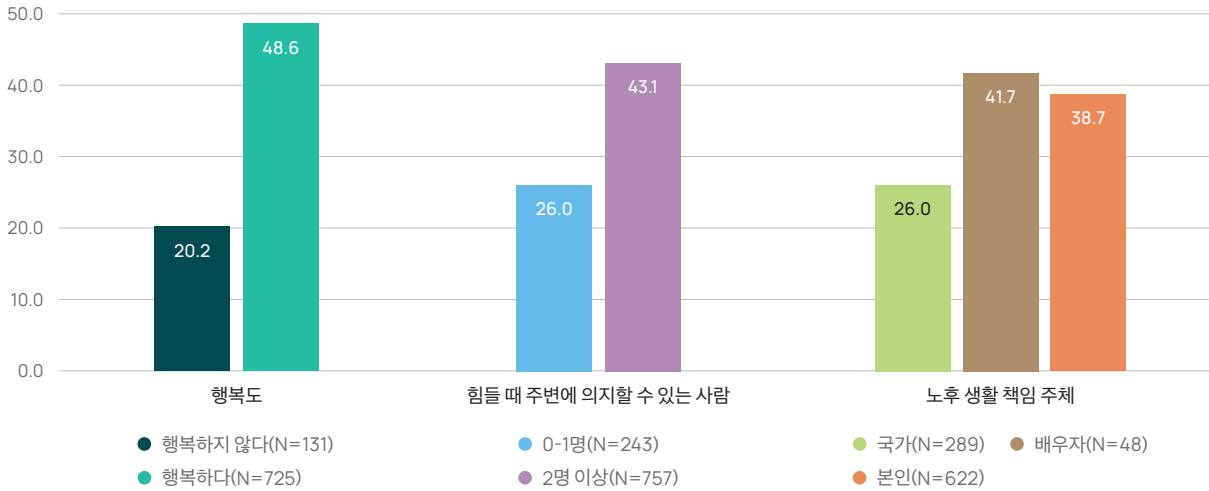


노후 자신감은 행복도 및 사회적 지지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행복하다'고 응답한 이들(48.6%)은 그렇지 않은 이들(20.2%)에 비해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2배 이상 높았고, '힘들 때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명 이상(43.1%)인 이들이 그 미만(26%)인 이들에 비해 17.1%p 높았습니다.

한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주체'를 물었을 때, '본인(62.2%)', '국가(28.9%)', '배우자(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국가를 꼽은 이들(26%)의 노후 자신감이 다른 이들(40.2%)에 비해 14.2%p 낮았습니다.

행복도, 사회적 지지도, 노후 생활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에 따른 노후 자신감

단위: % ('나는 65세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 것이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



국민이 느끼는 노후의 불안 요인은

국민들은 노후 생활에서 '신체적 건강 악화(54.7%)', '노인 빈곤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54.3%)', '의료비 부담 증가(52.7%)'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불안 요인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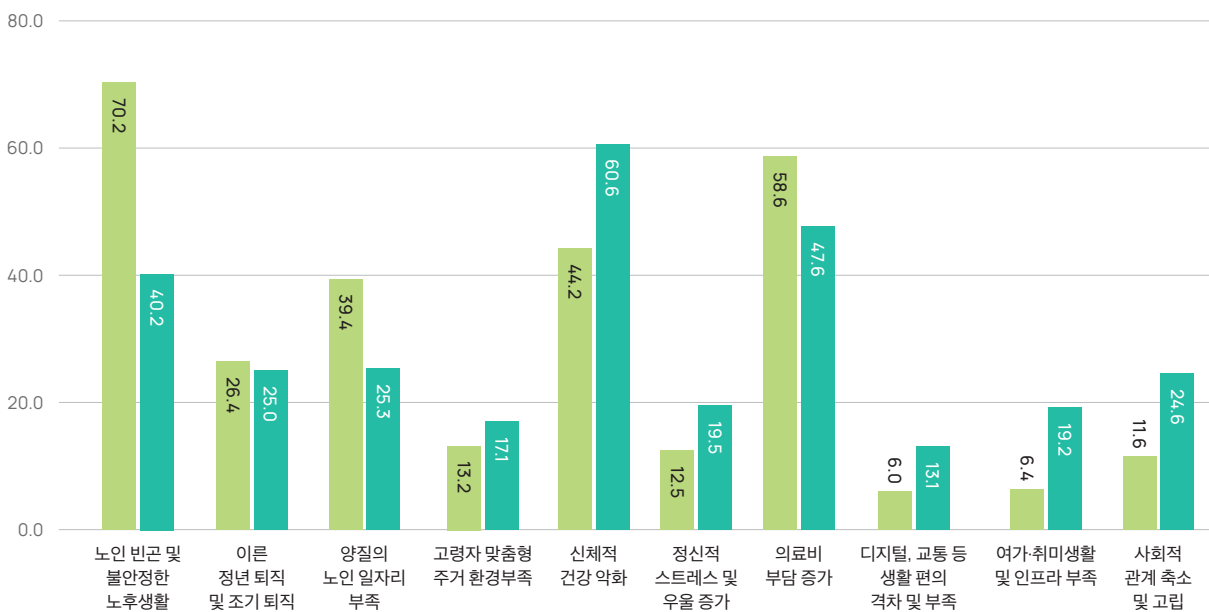
노후 생활에 자신감이 낮은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에 비해 '노인 빈곤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30%p 차이)', '양질의 노인 일자리 부족(14.1%p 차이)', '의료비 부담 증가(11.1%p 차이)' 등 경제적 문제를 불안 요인 3순위 안에 꼽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노후 생활에 자신감이 높은 국민은 상대적으로 '신체적 건강 악화(16.4%p 차이)', '사회적 관계 축소 및 고립(13.1%p 차이)', '여가·취미 생활 및 인프라 부족(19.2%p 차이)' 등 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를 더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고령자의 건강, 자산 등 노후 여건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후 자신감에 따른 불안 요인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 노후 자신감 낮음(1~2점) ● 노후 자신감 높음(4~5점)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 사회, 함께 살아가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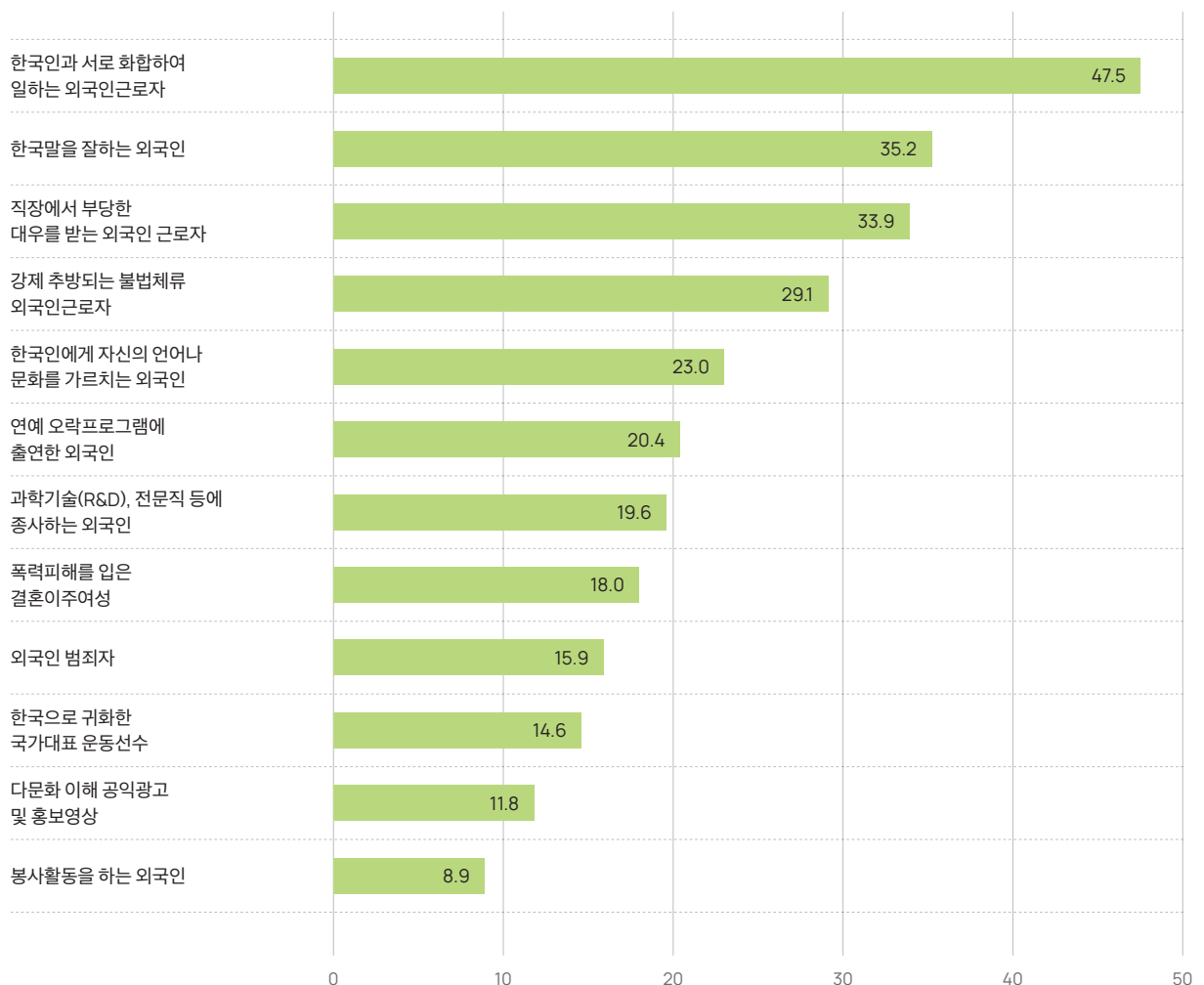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 국가당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규정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51만명(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4.89%에 이릅니다. 국민들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모습

국민 1,000명에게 외국인 이주자를 떠올릴 때 가장 가까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과 서로 화합하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47.5%)',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35.2%)',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33.9%)',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2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회 속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을 친근하게 느끼는 한편, 그들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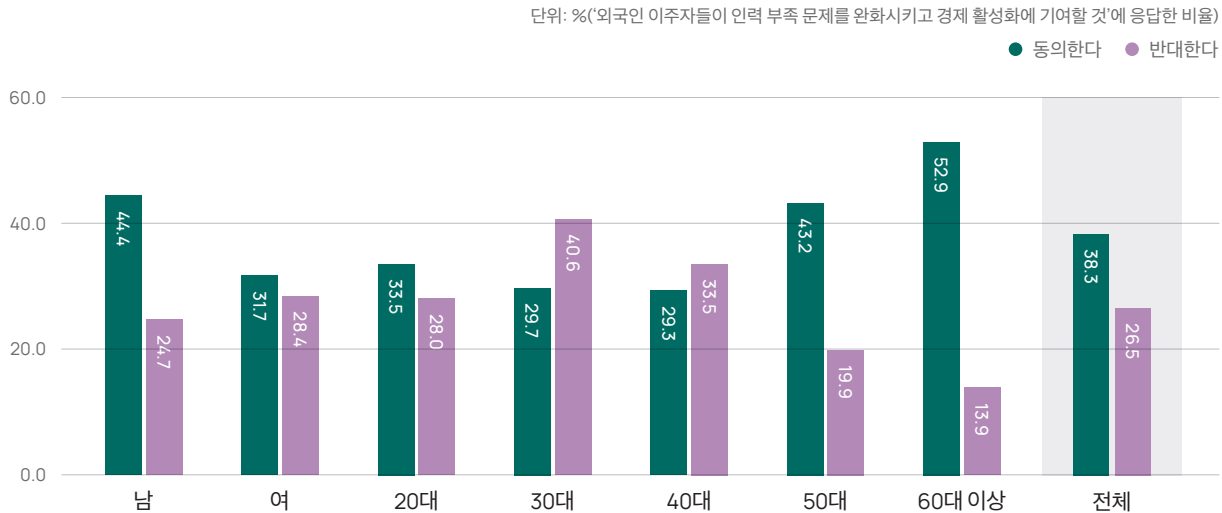
외국인 이주자를 떠올릴 때 가장 가까운 모습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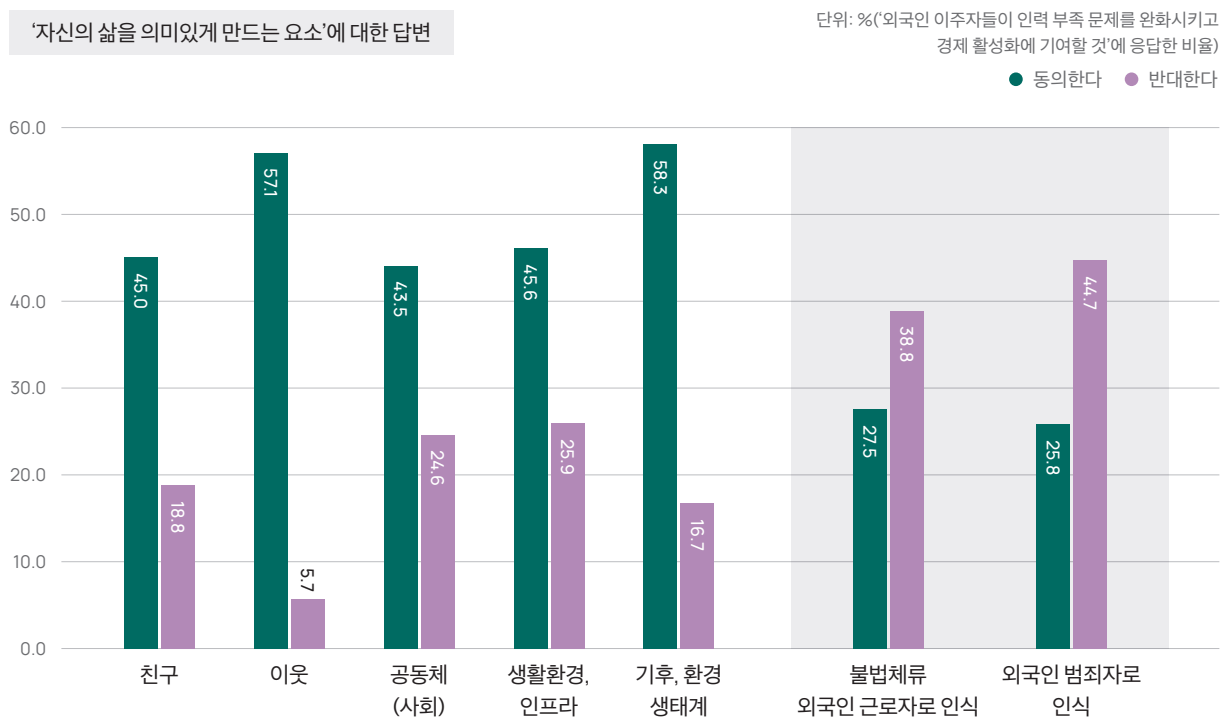


외국인 이주자의 경제 활성화 기여도

국민들은 외국인 이주자를 통해 국가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다고 인식할까요. 조사 결과, 국민의 38.3%가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격차를 보였습니다. 남성(44.4%)보다 여성(31.7%)이, 60대 이상(52.9%)에 비해 30, 40대(29.5%)가 외국인 인력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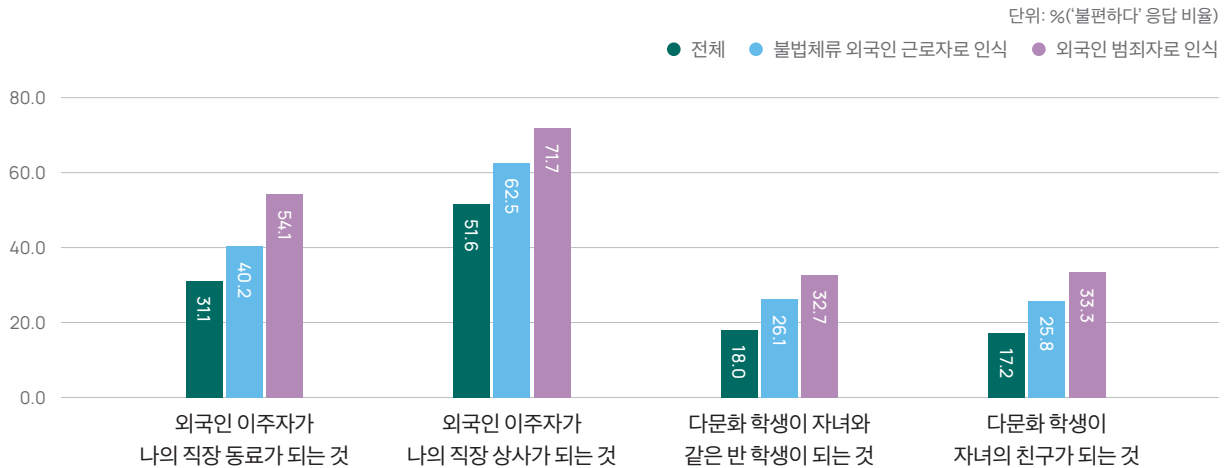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요소로 '기후, 환경 생태계(58.3%)', '이웃(57.1%)', '생활환경, 인프라(45.6%)'를 꼽은 사람이 외국인 이주자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외국인 이주자를 떠올릴 때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범죄자'의 모습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 외국인 이주자가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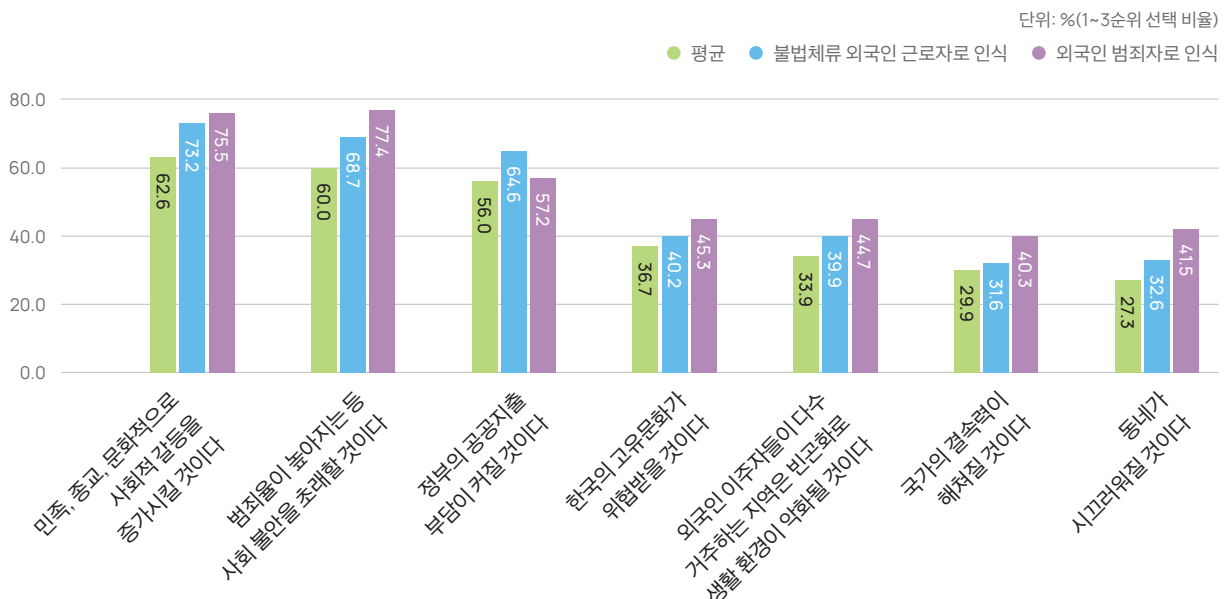
외국인 이주자와 함께 살아가려면

국민 1,000명에게 외국인 이주자가 '나의 직장 동료/상사'가 되는 것과 '자녀와 같은 반/친구'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불편한 정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민의 31.1%가 '외국인 이주자가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절반 이상(51.6%)이 '외국인 이주자가 직장 상사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 학생이 자녀와 같은 반 학생이 되거나(18%)',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17.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이주자를 떠올릴 때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주자와 함께 살아가는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이주자로 인한 우려

국민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민족, 종교, 문화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킬 것(62.6%)',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할 것(60%)',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56%)'을 우려했습니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우려를 강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이주자의 모습으로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범죄자'를 떠올린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주자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더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CHAPTER 5

Beyond 2024

우리가 만드는 미래



Concl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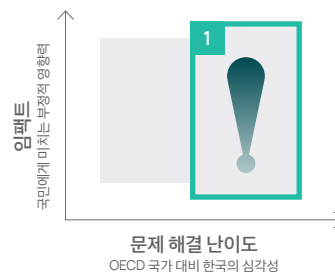
삶의 질 저하,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낮아지고 있어 협력(Cooperation)과 참여(Engagement)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미디어 분석, 국민 1,000명 대상 인식조사,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사회문제 심각성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과 종합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현재와 미래, 문제 해결 전략 방안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한국의 문제 해결 수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사회문제 분석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①Urgent : 우선순위 영역, ②Important : 주요 관심 영역, ③Managing : 모니터링 영역, ④Delegate : 위임과 실험 영역 등 4가지 문제 해결 전략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① Urgent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도 커지는 사회문제

우선순위 영역(Urgent)은 문제 해결이 어렵고(난이도 50점 이상),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는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난도와 임팩트가 모두 높기 때문에 해당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위기와 기회 모두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 및 역량을 집중해 문제 해결과 미래 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커지는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난이도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51	85	92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증가	28	52	54
해수면 상승	6	25	92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79	93	87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80	92	53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5	17	84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42	54	92
가정폭력	2	11	78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82	91	92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47	55	55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18	26	59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8	14	76
만연한 특권과 편법	56	62	60
화산폭발 위험 증가	1	7	51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54	60	62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5 이슈를 도출했다.

고령자의 정서적·경제적 여건 살펴야

국민들은 노후 관련 이슈들의 영향력이 미래에 더 커질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문제는 1순위를 지켰으며, OECD 주요국 대비 심각성이 5년간 1위(50세 이상의 사회적 지지도, 내림차순)로 나타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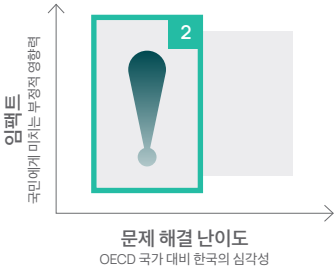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이슈도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39.6%, 1위)’, ‘미성숙한 공적 연금 및 연금 고갈(37.7%, 3위)’, ‘노인 소외, 혐오, 학대 및 세대간 갈등(32.8%, 6위)’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88p). 정서적·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환경의 변화 주목해야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많은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토지 황폐화’ 이슈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 환경 관련 이슈들은 OECD 주요국 대비 국내의 심각성이 매년 높게 유지되고 있어, 미래세대가 살아갈 터전과 자연자본의 보존과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② Important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커지고, 문제 해결 난도가 낮은 사회문제

주요 관심 영역(Important)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문제 해결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난이도 50점 미만)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임팩트가 높지만 난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 영역(Urgent)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과 역량의 쓸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곧 다가올 미래 문제에 대한 효율적·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 보다는 기회가 큰 영역으로 전략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커지는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난이도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34	71	44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42	69	48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57	83	27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20	43	22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27	48	4
전력수급 불안정	26	46	36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48	64	42
가뭄·홍수 증가	59	75	30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46	61	44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24	37	7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87	99	1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67	78	17
대형산불 증가	25	34	28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29	36	40
지구 온난화	91	97	15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5 이슈를 도출했다.

식량 및 식수 자원 지속가능성 주목해야

작년 관심 영역(Important)에 2위로 등장했던 ‘물 부족’ 이슈가 올해 1순위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준 수질 이상의 식수(Improved drinking water sources)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는 99%에 달하지만, 계절별 강수량이 불규칙해 UN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1인당 일평균 가정용 물 사용량은 192L로 1위인 일본(237L)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만큼, 식수 접근성과 품질 관리를 넘어 미래의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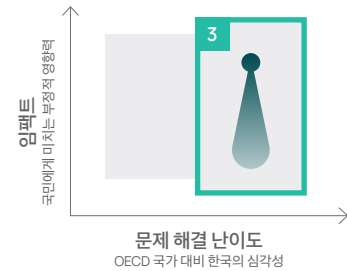
마시는 물과 함께 먹거리 안보도 고민해야 합니다. 국내 농업생산지수(100.3)는 세계 평균(109.9)을 밑돌고 있으며, 식량 자급 역량을 측정하는 식량안보지수(GFIS)는 2022년 39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각국의 분쟁과 전쟁이 심화되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식량안보’를 강조했던 패러다임이 국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량주권’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인 전략이 시급합니다.

미래 인적 자원 확보하고 불균형 해소해야

작년 1위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이슈와 더불어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문제가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됐습니다. 생성형 AI로 인해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 역량 있는 산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과 관련된 우려는 의료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신종 감염병들이 출현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이슈의 미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의료 인력 대란이 겹쳐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인재 육성 및 확보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③ Managing 문제 해결 난도가 높고, 미래보다 현재 임팩트가 큰 사회문제

지속 관리(Managing) 영역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래보다 현재 더 높고, 문제 해결 난도가 높아 꾸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난도가 높은 만큼 문제 해결에 성공하는 경우, 더 나은 사회 변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래보다 현재 더 큰 사회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난이도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62	39	89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61	41	78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83	65	81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	50	35	75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38	23	69
성별격차 및 성차별	53	39	70
폭설과 폭우 증가	52	38	63
아동학대	17	4	82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98	86	90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92	80	50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5	74	83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77	66	92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래보다 현재 더 큰 사회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난이도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64	53	78
학교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 부족	12	2	72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60	51	90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5 이슈를 도출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방위적 대책 필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 임금 격차, 근로시간을 비롯한 복지 수준이 갈수록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7.3%로 OECD 34개국 중 네덜란드(27.7%)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대기업(15.6%)과 중소기업(41.1%)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의 격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 제조업 기준으로 대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의 1.78배로 나타나 OECD 국가 26개국 중 세번째로 높았으며 2018년(1.54배)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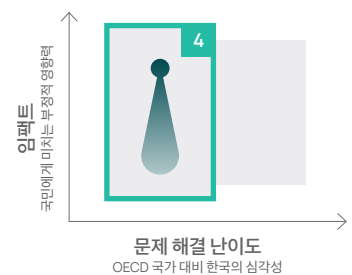
최근 경제불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2024)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0.5%에서 1.52%로 3배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과도하게 벌어지는 시장 내 격차를 좁히고 소규모 경제 주체들의 성장 발판을 관리하는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에너지 기후 관리 체계 구축해야

국민들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를 당장 해결이 시급한 우선순위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 관리(Managing)영역에 포함된 적이 없었던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기후위기와 관련된 '폭설과 폭우 증가',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문제가 Top15에 포진된 모습입니다. 특히 자연재해 테마와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테마의 경우 인식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로 부정적 영향력의 평균 증가율이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와 불안정한 에너지 시스템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 해결 난도가 높은 만큼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국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④ Delegate 문제 해결 난도가 낮고, 미래보다 현재 임팩트가 큰 사회문제

위임과 실험 영역(Delegate)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래보다 현재에 더 크며, 문제 해결 난도가 낮은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액션을 주도하기 보다는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난도가 낮은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개개인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권장됩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래보다 현재 더 큰 사회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난이도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75	47	31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37	18	43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44	29	36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래보다 현재 더 큰 사회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난이도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73	59	33
양질의 교육 부족	41	28	31
지역발전 불균형	55	42	35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58	45	46
진로 교육 및 직업교육 부족	39	27	8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90	79	12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35	24	6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65	56	13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부족	19	10	49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72	63	24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78	72	19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36	31	23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5 이슈를 도출했다.

균형을 잡아가는 협력 사회 이뤄가야

위임과 실험 영역(Delegate)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결핍을 야기하는 이슈들이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작년보다 사회 영역의 이슈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사회시스템 안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모습입니다.

작년 4위를 기록한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이슈는 현재와 미래 임팩트가 모두 증가한 동시에 격차가 더욱 벌어져, 미래보다 현재에 더 주목할 이슈 1위(↔28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 이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7월 발표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하는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의 발생 건수는 1,598건으로 2019년(735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중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74.2%로 높게 나타나 디지털 내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원의 부족과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석유 및 가스 등 지하 자원 감소’ 이슈는 미래보다 현재 더 주목할 이슈 Top 10, 작년 대비 영향력이 크게 높아진 이슈 Top 5에 포함되면서, 국민의 일상 속 불안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양질의 교육 부족’, ‘지역발전 불균형’과 같이, 일시적인 자원 투입과 정책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성이슈들이 위임과 실험 영역(Delegate)에 포함됐습니다. 정부, 기업, 지역사회,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와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편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총체적인 회복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을 포괄하는 10개 사회문제 테마 모두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전반적으로 상향됐으며(연평균 1% 증가), 미래 대비할 이슈로 꼽혔던 문제들이 당장 해결이 시급한 어젠다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개인과 가정의 형편과 삶의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 위기 상황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코로나 19를 겪었던 시기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행복감은 모든 연령대에서 작년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평가는 5년간 낮아지고 있으며, 연령대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사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었던 20-30대는 올해 조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이들의 행복감은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가파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래세대로 갈수록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모습이 탈동조화(Decoupling)되는 개인화 현상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화 현상은 사회문제 국민들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 의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 급 추가 납부, 기부, 봉사활동, 투자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2020년 평균 62.7%였던 동의율은 2024년 57.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납부하겠다는 금액과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낮아졌습니다.(세금 21.98% → 9.10%, 기부 약 13만원 → 약 11만원, 봉사 및 재능기부 약 10시간 → 8시간).

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참여와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과 진정성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목하고 있으나 기업의 관심도가 적은 미스매치 이슈 분석(73p)이 시작된 2021년부터 '취약계층 사회 안 전망 부족', '지역발전 불균형' 이슈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이슈에 대해, 기업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는 최근 3년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입니다. '일·생활 불균형' 이슈 역시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인 동시에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87p), 이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 및 정책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과 불균형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개인화를 넘어 협력과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총체적인 회복력(Holistic Resilience)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발행일 2024년 9월 20일
기획 및 연구 CSES·Triplelight
디자인 작업실 틸새

2024 일반 국민 설문조사 로데이터와 설문지는
SVhu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ebsite

www.cses.re.kr
www.triplelight.co

주소 Address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8층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04315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0길11 용산더프라임 208호 트리플라잇

전자우편 E-mail

research@cses.re.kr
impact@triplelight.co

연구 리포트에 수록된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은 CSES·triplelight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2024 CSES·triplelight. All rights reserved.

픽토그램은 www.flaticon.com의 자료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